



**"통일후통합"**  
**인천대 -서울대 합동심포지엄**

2017. 12. 1



# ‘통일후통합’ 서울대-인천대 합동 심포지엄 개최계획

- ◆ 통일후통합과 관련한 서울대-인천대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가차원의 통일과 통일대비 매뉴얼 구축으로 통일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
- ◆ 통일관련 연구 분야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통일 준비 중심대학 으로서의 연구생태계 구축

## I 행사개요

- 행사명 : ‘통일후통합’ 서울대-인천대 합동 심포지엄
- 일시 : 2017. 12. 1(금) 14:00~16:20
- 장소 :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3층 대회의실
- 주관 : 인천대학교 통일후통합연구원/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좌장 : 박제훈 교수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대학)
- 사회 : 이갑영 교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표 및 토론자
  - 인천대학교 : 양준호(경제학과), 이영애(소비자아동학과)
  - 서울대학교 : 천자현(통평원 선임연구원), 김학재(통평원 HK교수)
  - 한성대학교 : 박우(교양학부)
  - 전주기전대 : 주승현(군사학과)
- 참석대상 : 교직원 및 학생, 일반인
- 주요일정

진행일정	주요내용	진행자
14:00~14:05(05M)	개회사	이갑영 통일후통합연구원장
14:05~14:10(05M)	환영사	조동성 국립 인천대학교총장
14:10~14:15(05M)	축사	정근식 통일평화연구원장
14:15~15:45(90M)	참석자별 주제발표	주제발표자
15:45~16:20(35M)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박제훈 사회자
16:20~16:50(30M)	만찬장소 이동	개별이동
16:50~18:50(2H)	만찬	

※ 세부일정은 조정 가능

II

## 심포지엄 세부 추진계획(안)

일 자	내 용	부서 및 담당		비고
		소 속	성 명	
'17. 11.30 (목)  <행사D-1일>	<b>◆ 행사장소 설치 및 확인</b> - 장 소 : 교수회관 3층 대회의실 - 테이블 및 의자 : 주제발표 6명 - 빔프로젝터 : 자체설치 - 스크린 : 자체설치 - 마이크 : 협조요청 - 플래카드 : 본부, 행사장 - 무료주차권 : 10장 - 사무용품 등 비치 ·펜접시 : 6개, ·볼펜류 : 6세트, ·메모지 : 6개, ·티 슈 : 4통, ·물/물컵 : 7개, ·다과준비 등	시설팀 시설팀 시설팀 미래전략팀 미래전략팀 통통연	정창기 이준호 한양호 광용성 황선영 이주옥	행사장 설치확인
	① 심포지엄 인쇄자료 확인 ② 발표자 참석확인	미래전략팀 통통연	광용성 이주옥	증빙자료 평가위원

### 【 행사당일 】

일 자	내 용	부서 및 담당		비고
		소 속	성 명	
'17. 12. 1 (금)  <오 후>	① 행사장 점검 - 시간 : 13:00~13:30 - 장소 : 교수회관 3층 대회의실 - 점검 : 인쇄물, 발표자, 문구류, 노트북, 빔, 플래카드 직원서명부(교육점수 반영) 등	미래전략팀 미래전략팀 통통연	광용성 이진섭 이주옥	행사장 점검
	② 총장 및 처장참석 확인 - 시간 : 13:30 - 참석대상 : 총장, 입학학생처장, 기획예산처장, 연구산학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미래전략팀	광용성	-
	③ 행사 진행 - 시간 : 13:30~14:00 - 장소 : 교수회관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총장, 6처장	미래전략팀 통통연	광용성 이주옥	참석자확인 의전수행
	④ 개회사 - 시간 : 14:00~14:05 - 연사 : 이갑영 통일후통합연구원장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갑영	사회자
	⑤ 환영사 및 축사 - 시간 : 14:05~14:15 - 연사 : 조동성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 정근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갑영	사회자

일 자	내 용	부서 및 담당		비고
		소 속	성 명	
'17. 12. 1 (금)  < 오 후 >	<b>⑥ 참석자별 주제발표</b> - 시간 : 14:15~15:45 - 발표자별 발표 · 제1연사 : 천자현 (14:15~14:30) “남북통합지수 변동의 함의” · 제2연사 : 주승현 (14:30~14:45) “탈북연구자가 본 남북갈등과 통일논쟁” · 제3연사 : 김학재 (14:45~15:00) “독일 통일 후 통합의 현황과 과제” · 제4연사 : 이영애 (15:00~15:15) “북한 이탈주민의 생활적응 연구 (인천지역 북한 이탈주민을 중심으로)” · 제5연사 : 박 우 (15:15~15:30) “양안의 관계적 통합지수에 관한 연구” · 제6연사 : 양준호 (15:30~15:45) “남·북러 전력 통합망 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	-	박제훈 사회자
	<b>⑦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b> - 시간 : 15:45~16:20 - 토론자 테이블/의자 세팅 - 마이크 준비(토론자 3개, 청중 2개) - 토론자 : 발표자와 동일	-	-	박제훈 사회자
	<b>⑧ 심포지엄 종료 및 이동</b> - 시간 : 16:20~16:50 - 장소 : 한옥마을 경복궁	미래전략팀 통통연	곽용성 이주옥	개별이동
	<b>⑨ 만찬</b> - 시간 : 16:50~18:50 - 참석대상 : 총장, 발표자 6명, 외빈 등	미래전략팀 통통연	곽용성 이주옥	참석자확인 의전수행
	<b>⑩ 행사 종료 및 환송</b> - 시간 : 19:00	미래전략팀	총장 처장	환송



# 목 차

I. 남북통합지수 변동과 함의 1989-2017 .....	1
II. 탈북연구자가 본 남북갈등과 통일논쟁 .....	21
III. 독일의 통일 후 통합 현황과 과제 .....	39
통합지수의 국제비교 가능성	
IV.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적응 .....	59
인천지역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V. 양안의 관계적 통합지수에 관한 연구 : 1989~2016 .....	73
VI. 남북러 통합 전력망 프로젝트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	103



# I. 남북통합지수 변동과 함의 1989-2017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천 자 현

## 남북통합지수 변동과 합의 1989-2017

천자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1. 남북통합지수란?

남북통합지수(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IKII)는 남북한 관계에서 상호통합의 수준, 요인, 차원들 및 그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IPUS)이 개발한 지수이다. 이는 한반도에 현존하는 두 체제, 통일을 지향하는 남한과 북한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또 의식상으로 어느 정도의 통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유사 지수들이 존재하나, 현재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한 광범위한 자료에 기초하여 지속적이면서도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서울대 남북통합지수가 객관성이나 투명성이란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합(Integration)에 대한 정의와 논리적 설명이 필요한데, 통합이란 여러 하위 요소들 간의 연계성과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분화된 부분영역들이 보다 상위의 체제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요소들의 분화와 그들 간의 안정적 연계라는 두 차원이 통합의 핵심이며 특별한 내부분화 없이 모든 요소들의 동질성에 기초한 단합 또는 동질화와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 남북통합은 남북한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여러 차이와 이질성을 포용하면서 남북한이 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과 신뢰, 제도통합을 이루는 현상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왜 통합이 중요한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통합이라는 개념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통일에 대한 논의를 분석적이고 종합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 정서적이고 당위적이기 쉬운 통일논의에 비해 통합은 상대적으로 가치중립적이고 분석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지나친 목적론이나 이념적 지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이고 분석적인 통일담론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과정’으로 남북관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통합은 낮은 수준으로부터 높은 수준에 이르는 긴 스펙트럼을 갖는 개념이어서 남북관계를 그 상호관계의 수준과 정도에 기초하여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강점을 갖는다. 셋째, 통합개념은 이질화나 긴장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족적 유대감과 동포애, 긴 역사에 기초한 통일론은 간

혹 남북한 사이의 동질성만 중시하고 지난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이질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21세기는 이질성과 영역 간 긴장을 포용하지 않을 수 없고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통합개념은 긴장과 갈등을 내포하면서도 진전 가능한 남북관계의 미래전망을 구축하는데 대단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통합’을 강조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각 개별국가의 문화적, 제도적, 정치적 차이와 역사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연대와 결합을 추구하려는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통합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비교가능한 개념이기에 제도들 간에, 체제 간에, 상이한 영역 간에 어느 정도의 결합도와 상호작용의 안정성을 지니는지를 검토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남북통합지수의 구성 원리 및 주요 개념

### (1) 구조통합과 의식통합

남북통합은 일반적인 국가들 사이의 통합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에, 오로지 객관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오히려 남북관계의 특수한 측면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남북관계에는 객관적이고 제도적인 분단과 심리적이고 의지적인 통일지향이 공존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호관계와 제도적인 통합에만 한정하면 통합의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남북통합지수는 ‘의식’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통합지향성, 통일지향성을 지수에 일정하게 반영한다. 이것은 남북한 사이의 통합은 제도 못지않게 의지와 정서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양자를 구분함으로써 제도적 통합수준과 의식적 통일지향 사이의 간격과 불일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남북통합지수는 구조통합지수와 의식통합지수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구조통합은 실제의 제도, 관계, 법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의 정도를 반영한다.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면서 만들어놓은 각종 법제, 상호관계의 제도적 수준 등이 이런 구조통합의 근간이다. 정치적인 협상, 경제적인 협력, 사회문화적 교류 등이 모두 객관적인 구조통합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들이며 종종 이를 위한 기구나 개성공단 같은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도 있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상호불신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접촉이 단절되어 있을 때 구조통합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구조통합은 관계의 양적 증진(관계통합)과 제도적 안정화(제도통합)라는 질

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관계통합은 서로의 상호작용과 만남,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합효과를 지칭한다. 단절된 상태로부터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시작될 때가 통합과정의 첫 출발이다.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사이에서는 만남을 통한 관계의 형성 그 자체가 통합을 향한 중대한 진전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만남을 시작하고 점차 그 접촉의 빈도를 높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관계통합은 통합의 초기단계에서 절실하며 효과가 크다. 하지만 접촉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당사자 수준의 개별사례로만 남아있게 되면 그 효과는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도통합인데 이것은 남북간 간에 일정한 상호작용의 방식을 제도적인 방식으로 표준화, 상설화하는 것이다. 제도화는 특정한 개인이나 당사자의 의지나 특정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상호작용의 패턴과 가능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통합효과는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제도화는 법제화를 수반하기 마련이어서 남북한의 주요한 정책결정자들이 공통의 규범과 절차에 속하게 됨으로써 다른 부분으로의 통합의 확산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어떤 의미에서 통합의 전 과정이 이런 제도화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의식통합은 객관적 상황을 반영하는 구조통합의 차원과는 별개로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식의 영역, 집합적 의지의 차원을 가리킨다. 미래를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현실의 조건 못지않게 행위자들의 집단적 비전과 지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의식통합 역시 중요한 객관적 변수가 된다. 일차적으로 개별 구성원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순히 개인행위자의 ‘생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집합적 의식이 공통의 기반을 가지는 것을 지칭한다.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라는 공속의식, 우리의식, 하나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그로 인해 일종의 연대감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남북간에는 ‘하나의 민족’ 논리가 강하게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강한 민족의식을 통일의 기반으로 상정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집합적 의식이 통합의 고리를 제공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남북통합과 관련한 의식은 쟁점별로, 시기별로, 또 세대 별로 적지않게 차별적이어서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통일의 의지,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주민에 대한 편견이나 생활방식의 편차,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의식적 통합의 수준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 (2)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

남북통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의 제도적 통일과 통일의 과정 및 이후의 내적 통합을 포함하는 일련의 전반적 과정을 지칭한다. 이런 다면성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남북통합지수에서는 남북 통합을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정치적 통합은 남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것,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새롭게 통합된 공동체로 자신들의 충성심, 기대 및 정치행위를 이전하게 되며 그 최종적인 상태로써 동일한 헌법,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동질성과 권한의 위임, 그리고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한 변수다.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통합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고 상당한 통합이 진전되었으면서도 정치적 통일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또한 정치적 통합에서는 헌법적 가치, 정치적 규범, 정체성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 어떤 원칙과 제도적 기틀 위에서 통일국가가 구성될 것인가에 따라, 또 통일의 과정이 어느 정도 전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 위에서 민주적으로 달성되는가에 따라 정치통합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경제통합은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된 상태 또는 그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에서부터 여러 경제요소들의 상호교환, 의존의 구조가 확대되는 과정 전반을 포괄한다. 생산요소의 이동, 경제체제의 동일화, 경제정책의 공동규율, 가격변수의 유사한 작동, 지역 간 소득편차 감소 등이 경제통합의 내용을 이루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는 북한과 개방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남한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나의 틀에 포괄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포함된다. 21세기 세계사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세계경제와의 개방적 통합이 남북통합은 물론이고 지역통합과의 연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통합은 남북한이 문화적 소속감 및 사회적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의 생활단위로 자리잡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는 자유로운 이동과 접촉이 가능한 단일공간의 창출이고 문화적으로는 같은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과제가 된다. 헤어진 가족이 자유로이 만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이나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공동체 내부에서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자원이 함께 수용되어야 하고 복지의 혜택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 따른 언어나 생활방식의 차이는 그 자체로 존중되면서도 차별되지 않고 적어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누리는 권리와 혜택에서 남북이 고루 포괄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자유와 복지가 이 사회문화적 통합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각 단계가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가치, 규범에 대한 궁극적 합의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본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적 통합은 각기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와 일정하게 상응한다. 다르게 말하면 세 차원의 공동체를 구현해가는 과정이 곧 각각의 통합이며 이들 세 차원의 통합을 포괄하여 남북통합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3. 통합단계의 구성 및 지수화 과정

남북통합이 과정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통합의 수준에 따른 단계 구성은 유용한 작업이다. 즉 낮은 수준의 통합으로부터 높은 차원의 통합을 이루는 과정 자체가 일정한 단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론은 일차적으로 구조통합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초기의 교류 접촉으로부터 최종단계의 공동체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중간 단계는 일반적으로 ‘제도화’라고 불리는 구조통합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통합의 정도에 따른 단계의 세분화는 의식통합 차원보다는 구조통합의 수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전제위에, 통합의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세부적으로는 11단계로 구성하는 틀을 만들었다. 접촉교류기에 해당하는 0~2단계는 남북 간의 교류부재로부터 초기적 상태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말한다. 협력도약기에 해당하는 3~5단계는 상호 교류와 접촉이 안정 상태로 접어들면서 이런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매개적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상호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한 시기도 이때라 할 수 있다. 접촉교류기와 협력도약기 간의 분류는 남북통합지수가 관계의 증진을 단순히 교류협력의 양적 규모로만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0~2단계에는 양적 규모에 영향을 받지만, 3단계 이후에는 매개제도의 구성과 역할과 같은 제도화가 진전되어야만 통합이 진전된다.

다음으로 남북연합기라 할 수 있는 6~8단계는 여러 분야에서 공동의 위임적 제도화가 진행됨으로써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통합의 기반이 구체화되는 단계다. 이 단계는 아무리 교류의 양과 회담의 횟수가 많아져도 제도화에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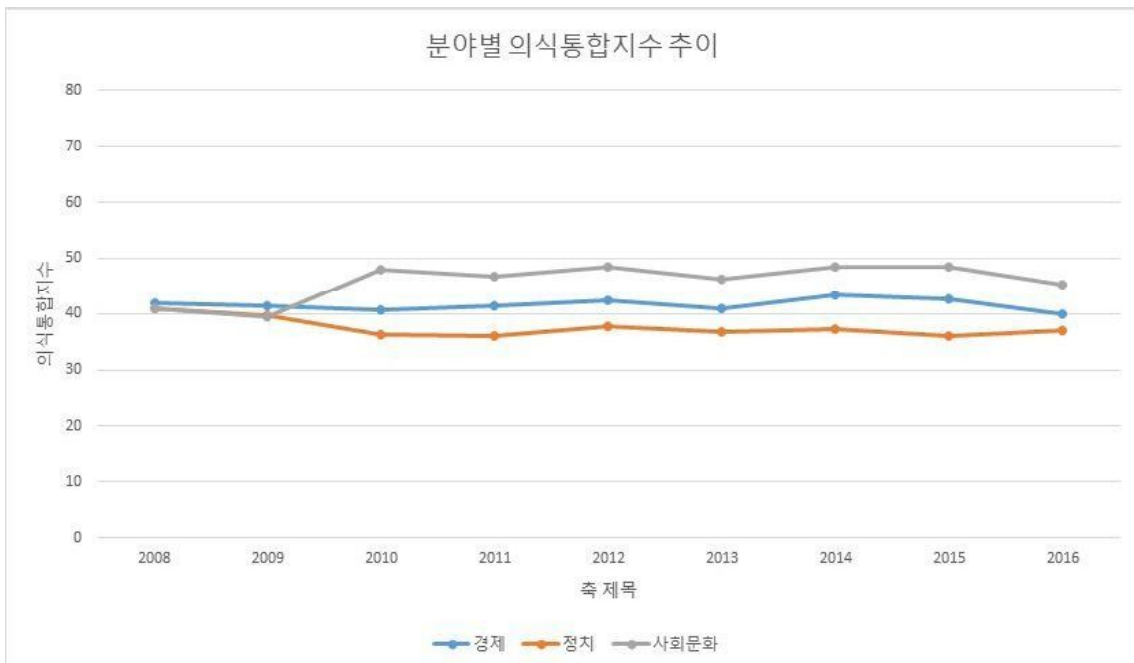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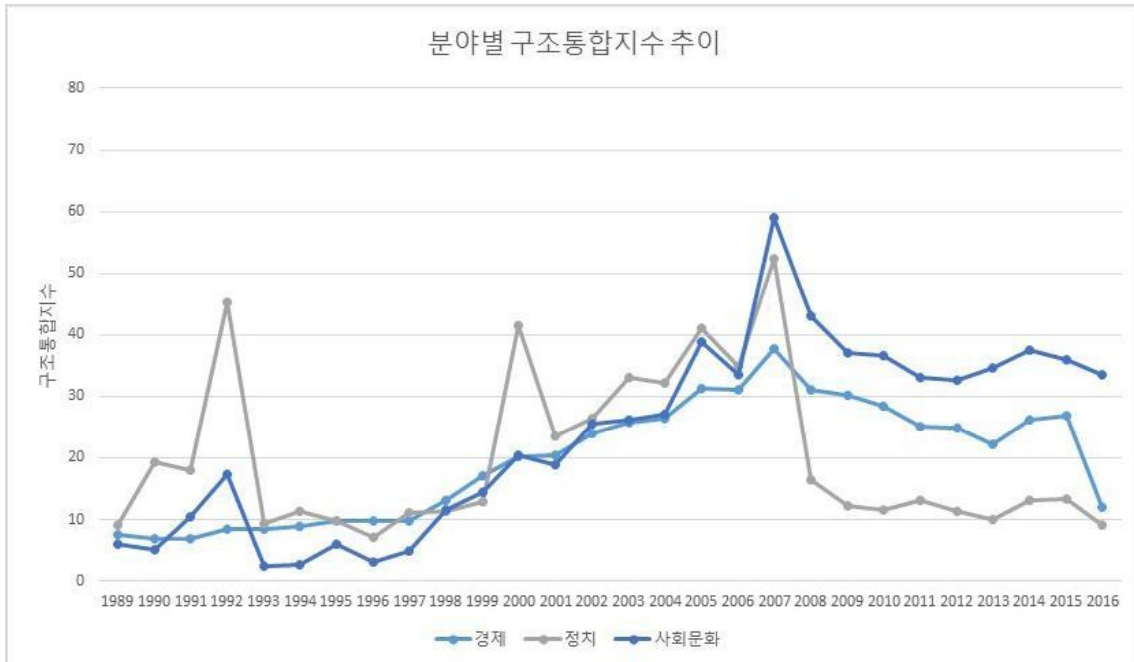
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6단계로 진입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남북연합기의 마지막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8단계에 이르면 주요한 경제정책이나 정치활동이 공동의 기구나 제도에 위임되고 광범위한 제도의 표준화, 단일화, 공동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완성기라 할 9~10단계는 실질적인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 남북통합이 최고단계에 이르는 시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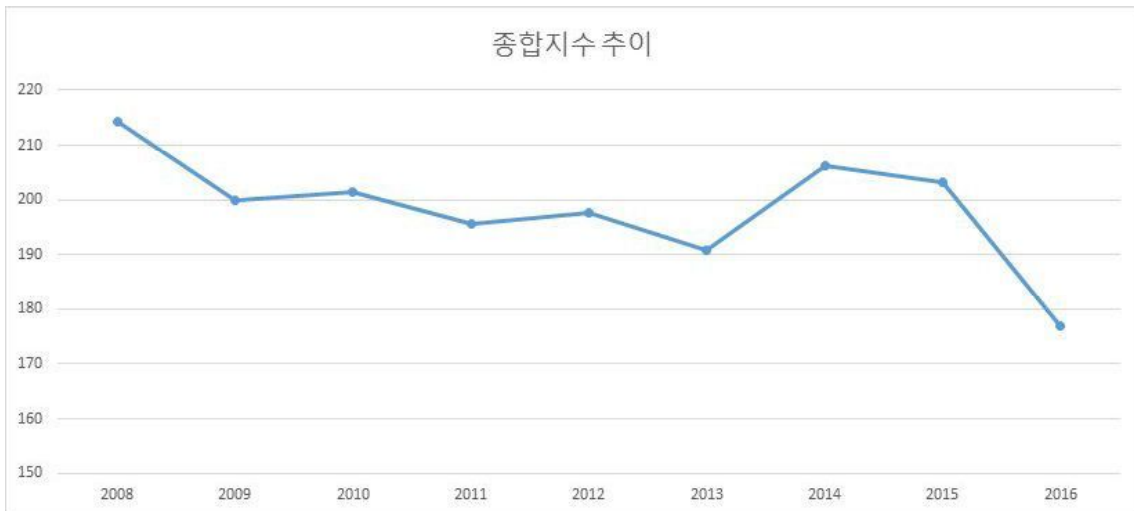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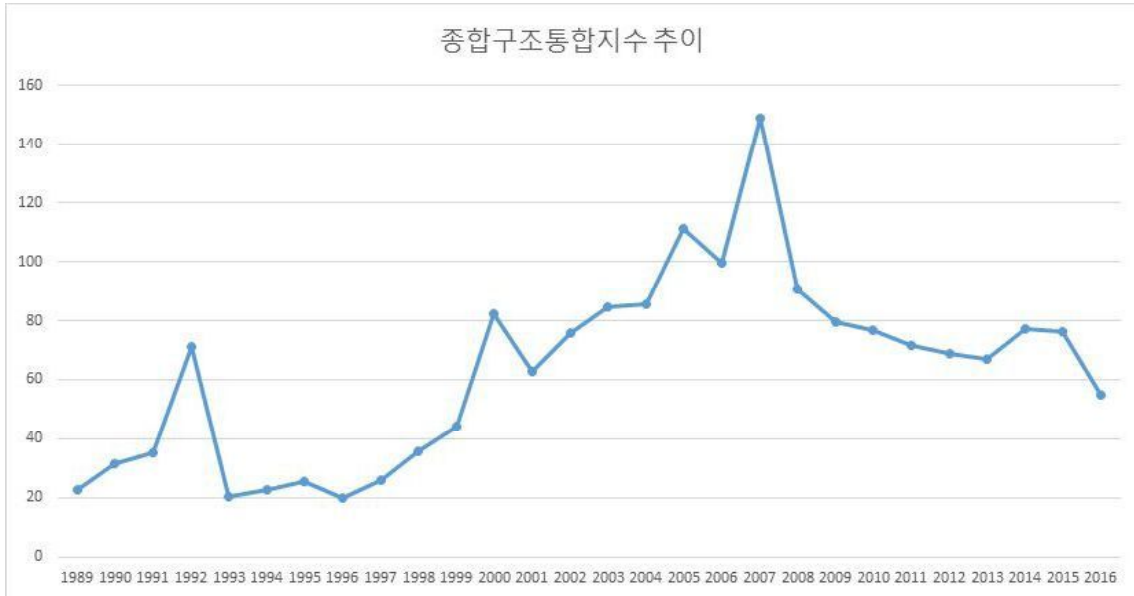
지수를 수치로 정량화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각각의 영역에 어느 정도의 값을 부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남북통합에서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이 어떤 비중을 갖는가에 대한 판단과도 맞닿아 있다. 남북통합지수에서는 경제영역, 정치영역, 사회문화영역이 각기 동일한 비중을 점한다고 보고 같은 값을 부여했다. 1000점을 최종값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각 영역에 330점을 배점하고 사회문화 분야에 10점을 더 부여했다. 이것은 지수의 가독성을 높이려는 편의성과 함께 사회통합의 완성을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작용한 것이다. 통합이라는 것이 적어도 이 세 영역에서는 같은 비중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판단에 기초한 점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차원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값을 부여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관계적 통합, 제도적 통합, 의식적 통합 순서로 차등적 점수를 배정했다.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에 각기 어느 정도의 값을 부여할 것인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사실 통합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고찰하면 의식이 차지할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남북통합이라는 특수한 목표와 무관할 수 없다. 남북이 60년 이상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까닭은 남북한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강한 통합의지와 집합적 정서 때문이다. 통일을 향한 집합적 의식과 의지는 적어도 남북통합의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독립변수일 뿐 아니라 남북통합이라는 목표 자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의식부분에 적지 않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다만 의식통합은 그 정도를 단계론적으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아 전체의 단계구성을 설정하는 데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1. 경제	2. 정치	3.사회문화	계
구조통합지수	1. 제도적 통합	90	90	90	270
	2. 관계적 통합	160	160	160	480
3. 의식통합지수		80	80	90	250
계		330	330	340	1000

#### 4. 남북통합지수의 변동-1989년부터 2016년까지





## 5. 남북통합지수의 기대효과

남북통합지수는 단순히 현재 상황을 계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통계치의 개발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통합지수는 남북한의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북통합이라는 복합적인 변화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다분과적 조망들을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로 이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여러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 내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통합의 과정을 분석적으로 확인하는 종합적 기획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잘 구성된 남북통합지수는 이 지수를 만들기 위해 고려되는 다양한 요인과 변인들을 통해 통합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균형적 개념을 정립하고 그 통합 개념에 의거하여 다양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지적 수단을 제공해줄 것이다. 나아가 이 지수 구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원칙을 근거로 남북통합이라는 목표치가 바라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에도 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통합지수를 통해 통일 과정의 위치를 확인하고 통일을 향한 여러 실천적 노력들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지닌 것인지를 평가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통합지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의 관계 진전을 정치적으로 평가하거나 이념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당위론적이고 가치지향적이 될 경우, 실제 과정을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통일 과정에 대한 논의는 종종 정치적 논쟁이 되거나 당위와 현실에 대한 이분법적 논란으로 귀결되기 쉽다. 남북통합지수의 적절한 구성과 활용은 통합의 수준 또는 정도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며 내부의 긴장과 갈등의 지점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객관적인 지수로 사고하게 함으로써 일면적인 평가에 좌우되거나 정파적인 판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남북통합을 정치적 통합 또는 당위적 결과의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제한적 사고를 보완하는 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 중 하나이다.

남북통합지수는 한반도의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들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모델을 통해 통일을 예측 가능한 과제로 실제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지수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미래를 구상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적 정책 과제와 실천 항목들을 미리 검토해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남북통합지수가 낮게 나와 현실에 대한 비관적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통합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 이는 남북통합이 가치의 영역이나 정치적 대결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해가는 기획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십 수 년에 걸쳐 추진된 정부의 통일정책은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의 증대, 북한의 위협 감소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 남북교역량, 상호 방문인원수, 지원물자량 등 단순 수치 또는 추상적·

정성적 평가만으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지지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남북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단계와 고리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수준과 각 부문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일부의 변화만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정치적 논란의 폐단을 극복함에 있어서도 남북통합지수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통합지수는 남북통합의 과정에서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이 어떤 변화를 수반해야 할 것인지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남북통합은 남한의 정책구상이나 생각만으로 이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남과 북 모두 상당한 질적 전환과 준비를 요하는 과제이며 장기적인 구상과 전략,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호작용과 책임성이 수반되는 일이다. 가령,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협조 또는 공조가 통일을 이루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남과 북, 정치와 외교, 군사와 경제, 자원과 의식 등 다양한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관여된다. 이러한 복합적이면서 상호연계된 남북관계의 실상을 충분히 감안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제 영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지표가 절실한 것이다.

또한 남북통합지수는 남북한 간의 요소만을 반영한 제한된 것이 아닌, 북한 요인, 남한 요인, 남북한 간 요인, 그리고 국제환경 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동시에 제도와 현상, 그리고 의식 등 다층적인 면을 동시에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일 이런 설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남북통합지수는 남북관계 개선의 정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로써, 전술한 바와 같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적절한 남북통합지수의 개발과 활용은 그동안 통일이라는 당위성 때문에 실제 과정인 통합에 대한 논의는 소홀했던 경향성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신뢰성 있는 통합지수가 개발되면 통일에 대한 이념적 논의는 통합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로 옮겨갈 수 있고, 통합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의 진전 및 후퇴가 한국경제나 여러 다른 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 남북통합지수 변동과 함의 1989-2017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천자현

### • 남북통합지수란? •

- 상호통합의 수준, 요인, 차원들 및 그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발
-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 의식상으로 통합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 광범위한 자료에 기초하여 지속적, 공개적 발표
- 객관성, 투명성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 지수

## • 통합 개념의 중요성 •

- (1) 가치중립적, 분석적 논의
  - 통일은 정서적, 당위적
- (2)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과정’ 접근
  - 긴 스펙트럼을 갖는 개념
- (3) 이질화, 긴장 수용 가능
  - 유럽 연합에서 ‘통합’ 강조 이유와 동일
- (4) 객관적, 비교가능한 개념
  - 상이한 제도, 체제, 영역 간

## • 남북통합지수의 구성 요소 •

통합차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제도	남북한 내부의 안전 및 안정 남북한 내부의 삶의 질 남북간 부문별 제도 유사성/이질성
관계 (교류, 협력)	동질성과 포용성 확대를 위한 관계(교류, 협력) 이질성과 적대성 형성의 관계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적 갈등의 발생
의식	남북한 내 포용/적대 의식 남북 간 포용/적대 의식

## 남북통합지수의 측정

통합의 범주	사용 가능한 변수들
정치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접촉 혹은 회담의 빈도</li> <li>-남북 접촉 혹은 회담의 성과 (합의서, 공동선언 등)</li> <li>-남북 접촉 혹은 회담의 성과 준수 또는 위반 여부</li> <li>-갈등의 성격과 결과 (비난, 충돌, 국지전, 전면전)</li> <li>-남북 재래식 구사력 균형 또는 차이</li> <li>-남북 군비지출, 군비 증감 추세</li> <li>-국제사회에서 남북 외교군사적 협력</li> <li>-공동의 제도 수립</li> <li>-공동의 제도, 기구에의 주권 양도</li> </ul>

## 남북통합지수의 측정

통합의 범주	사용 가능한 변수들
경제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수입액/GDP</li> <li>-한국의 대북투자액/GDP</li> <li>-북한주재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수 /북한의 노동력</li> <li>-북한에서의 시장경제 확립정도</li> <li>-남북교역량 변화</li> <li>-남북 협력사업 승인과 교역업체 수 추이</li> <li>-관세율과 수입할당제 적용 정도</li> <li>-비관세장벽의 존재</li> <li>-공동의 경제제도나 기구의 존재</li> <li>-소득수준/이자율/인플레이션율의 수렴</li> <li>-경기변동의 동조화</li> <li>-금융시장의 통합정도</li> <li>-화폐통합</li> </ul>

## 남북통합지수의 측정

통합의 범주	사용 가능한 변수들
사회 문화적 통합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남북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현황 -민간교류의 건수와 규모 -상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언론에 보도된 횟수와 정도 -대규모 행사(공연)의 횟수 -스포츠 행사에서 단일팀으로 참여한 횟수 -공동의 사회문화단체 수

## 통합단계의 구성

- 구조통합의 수준에 따라 11단계로 세분화
- 접촉교류기: 0-2단계
  - 협력도약기: 3-5단계 (매개적 제도화)
  - 남북연합기: 6-8단계 (실질적, 제도적 통합 기반 구체화)
  - 통일완성기: 9-10단계 (남북통합 최고단계, 실질적 통일 완성)

## ● 정치적 통합의 단계 ●

- 0단계: 전면전, 국지전과 같은 심각한 갈등 존재
- 1단계: 평화의 유지 그러나 접촉은 없음
- 2단계: 비정기적인, 제한된 접촉 있음
- 3단계: 정기적인 접촉은 있으나 다루는 의제 제한적
- 4단계: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정기적인 접촉 있으나 성과는 미미
- 5단계: 중요한 의제 다루는 정기적 접촉 있으며 주목할 성과 존재
- 6단계: 정기적 접촉 단계 넘어서 교류활성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제도 모색하나 성과는 미미
- 7단계: 정기적 접촉 단계 넘어서 교류활성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제도 모색하며 주목할 성과 존재
- 8단계: 주권 중 일부를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양도하는 단계
- 9단계: 주권 중 상당 부분을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양도하는 단계
- 10단계: 주권 전부를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양도, 통일을 이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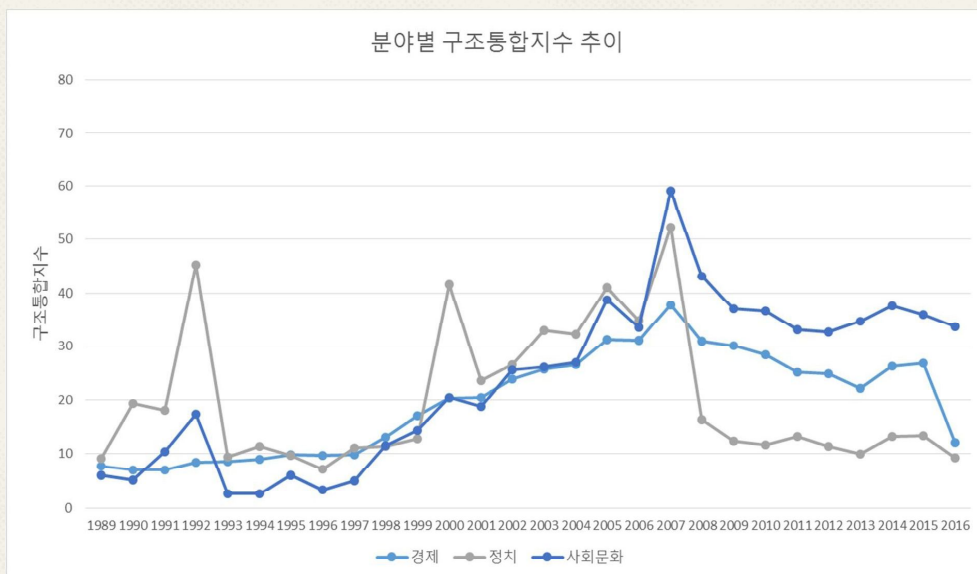
## ● 경제적 통합의 단계 ●

- 0단계: 물적 자원의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 1단계: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음
- 2단계: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높음
- 3단계: 물적 자원 교류 비중 높으며 제도적 지원 마련됨
- 4단계: 3단계 + 과세, 수입할당 등이 없으며 자유로운 수출입 가능
- 5단계: 4단계 +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생산요소 이동을 자유화함
- 6단계: 5단계 + 회원국의 정책을 조율하는 제도의 수립
- 7단계: 6단계 + 동일 화폐 사용
- 8단계: 7단계 + 경제정책의 대부분이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 9단계: 8단계 + 모든 경제정책의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 10단계: 9단계 + 실질적인 경제통합 (경제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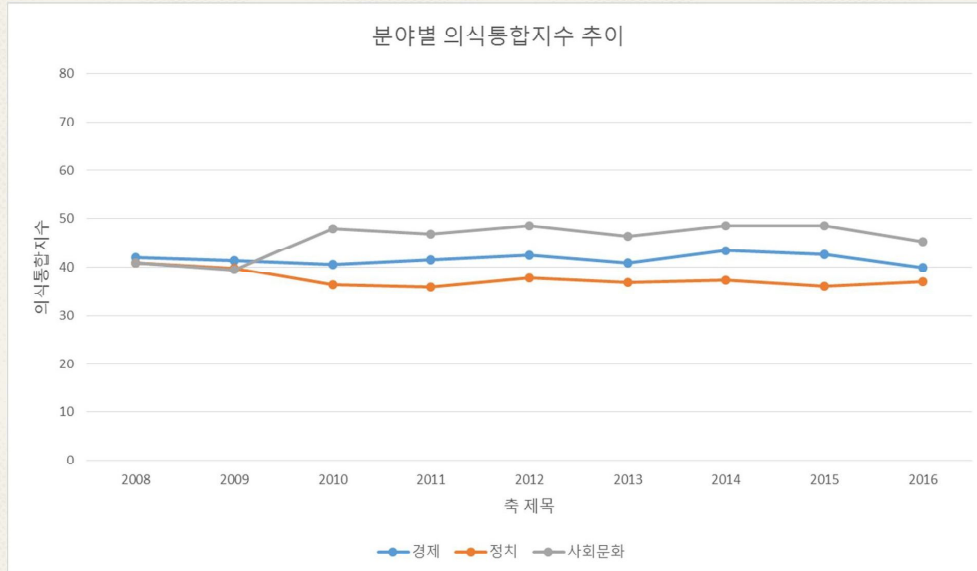
## 사회문화적 통합의 단계

- 0단계: 이질적인 사회문화 양식이 존재함
- 1단계: 비정기적인 인적 교류가 있으나 접촉빈도가 낮음
- 2단계: 비정기적인 인적 교류가 있고 접촉빈도가 높음
- 3단계: 정기적인 접촉은 있으나 다루는 의제가 제한적임
- 4단계: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정기적인 접촉이 있으나 성과는 미미
- 5단계: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정기적인 접촉이 있으며 주목할 성과
- 6단계: 정기적인 접촉의 단계를 넘어서 교류활성화와 협력의 증진을 위한 공동의 제도를 모색하나 성과는 미미
- 7단계: 정기적인 접촉의 단계를 넘어서 교류활성화와 협력의 증진을 위한 공동의 제도 모색하며 주목할 성과
- 8단계: 사회문화 정책을 수립, 조정하는 공동의 기구와 제도 수립 단계
- 9단계: 모든 사회문화 정책의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 10단계: 공동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이 확립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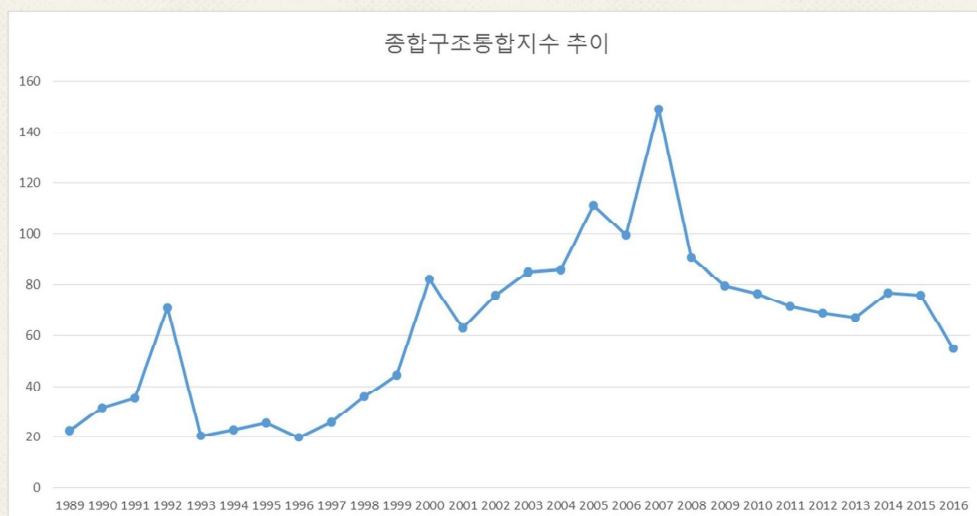
## 분야별 구조통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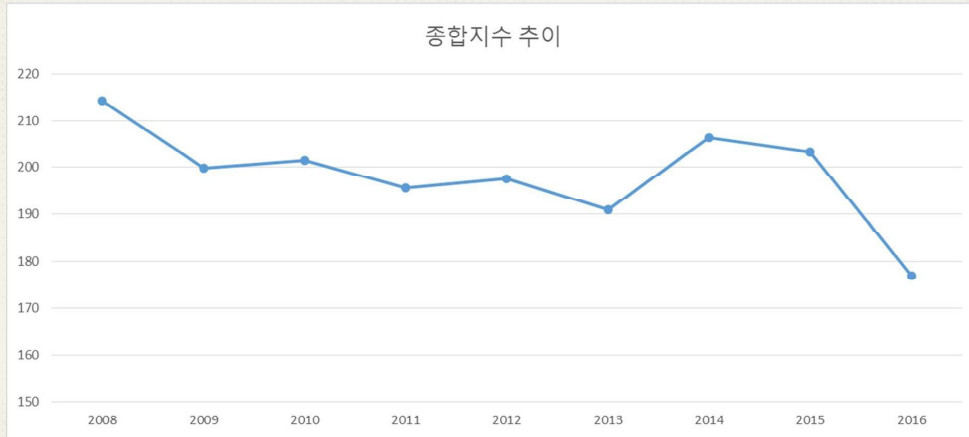
## 분야별 의식통합지수 추이



## 종합구조통합지수 추이



## ● 종합지수 추이 ●



## Ⅱ. 탈북연구자가 본 남북갈등과 통일논쟁

전주기전대 군사학과 주 승 현

# 탈북연구자가 본 남북갈등과 통일논쟁

주승현: 전

## 주기전대 군사학과

지난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통일 정책 목표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정부를 비롯한 우리사회 곳곳에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여기저기서 남북한 화해를 떠들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나 실질적 논의는 미약해 보인다. 남북갈등에 대한 정부 및 전문가들의 진단도 아직까지도 매우 어설프고 미숙하기까지 하다.

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랜 분단시대에 살면서도 분단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나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분단에 대한 인식과 담론은 대체로 적과 야군이라는 이분법에 입각하여 북한을 비정상국가로 규정하는데 그치거나 냉전시대 이론에 기초한 전통주의적 이해만이 풀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분단과 통일에 대한 담론은 늘 정권이 독점해왔고 한국에서는 안보를 이유로 통일이라는 단어가 금기시되던 때도 있었고 분단을 내세워 반공의 논리를 사유화해온 문제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무력통일이나 합의통일, 흡수통일, 중립화 통일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 우리는 전문가 영역으로 치부해버린다. 셋째로, 통일의 상대는 북한정권 외에도 그곳 주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데서 비롯된다. 누가 뭐래도 통일은 북한의 주권자인 북한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오랫동안 그 사실을 간과해 왔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갈등해소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국민들의 역할과 과제가 평화와 통일의 담론으로 대북 및 통일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남북한 갈등구조와 다면적 실재들로서 분단

남북한의 72년의 분단은 분단에 대한 다면적인 인식을 배태했으며 분단, 분단상황, 분단질서, 분단구조, 분단체제, 분단국가, 분단시대, 분단모순, 분단권력 등의 용어와 함께 다양한 성격과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리들은 아직까지도 분단이 갖고 있는 복잡한 구조, 즉 우리의 분단현상이 보여주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기도 한 다양하고도 다중적 실제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분단을 ‘체제’ 나 ‘구조’ 혹은 ‘시대’ 로 설명하는 논의들의 틀 안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분단의 모습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분단은 다음의 다섯가지의 기본 요소를 내장內藏하고 있다고 보면서 그 에 접근하고자 한다.

분단의 첫 번째 내장 요소는 분단의 중층적 성격이다. 이는 단층성의 반대되는 의미로써 남과 북 사이에는 다양한 분단이 중첩적으로 누적되어 분단의 중층성을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분단문제의 중층성은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으로 인한 지리적·정치적·민족적 분단을 모두를 일컫는다. 먼저 지리적 분단(국토의 분단)은 해방과 함께 남북한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에 의한 38도선을 경계로 진행되었고 한국전쟁 후 비무장지대로 고착화되었다. 정치적 분단(이념의 분단)은 1948년 8월에는 남쪽에 대한민국이, 9월에는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이 수립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분단은 경제적 분단(남한의 시장경제, 북한의 계획경제)을 함께 가져왔다. 민족적 분단(심리적 분단)은 한국전쟁을 통해 심화되었다. 남북한이 서로 싸워 빚어낸 600만에 가까운 사상자와 국토의 황폐화는 민족적 분단과 심리적 분단을 가져왔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분단문제의 복합적 성격을 그 두 번째로 들 수 있다. 분단의 복합성으로 볼 수 있는 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치, 생활양식 등 전 분야에서 이질화를 뜻하며 남북한 사이에는 끊임없는 제도적·문화적 분단이 더해졌음을 뜻한다.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는 각각의 상이한 체제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체제 내에서는 일련의 연계 고리를 형성하며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특히 분단의 장기화·고착화에 영향을 주면서 다시 남북 서로간, 남북 내부의 제도 간, 그리고 남북 구성원 간의 심화된 이질화로 재생산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이질화는 외적 이질화와 내적 이질화로 구분되어 논의될 수 있는데, 외적 이질화는 남북한의 표면적 분단에 원인과 출발을 두고 있으며 남북한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적대할수록 이질화는 심화된다. 이러한 이질화는 분단이 지속될수록 내부의

이질화에 영향을 주며 강화되어 민족적 동질성을 파괴, 소멸하며 분단의 고착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듯 심화된 이질화는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 상황 및 단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분단문제의 이중성은 국제적 시각과 국내적 시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국제적 시각에서는 냉전 붕괴 후 탈냉전의 세계화 속에서도 여전히 냉전의 ‘섬’ 혹은 ‘고도’가 되어 있는 한반도 분단의 이중적 성격을 뜻한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경계의 대상이자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관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적으로의 북한과 민족으로서의 북한이 분단의 이중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의 동포를 민족으로 보는 시각과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괴뢰정권’을 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이중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서로를 위협세력이자 한민족으로 보는 이중성은 아직도 분단극복을 위한 교통정리가 남아 있음을 말해준다.

네 번째로 분단이 안고 있는 다면성이다. 72년간의 오랜 분단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여러 얼굴을 분단 속에 내장하게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남과 북의 법률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한국의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헌법 4조의 통일조항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위법률인 국가보안법은 북한정권을 한국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헌법 3조와 시각을 함께 한다. 하지만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했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근거하여 “때로는 통일을 위하여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함도 불가피하게 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특히 하위법률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05)’, ‘남북교류협력법(1990)’ 등은 북한을 대화와 교류협력의 동반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처럼 북한 또한 한국을 ‘괴뢰’, 혹은 ‘괴뢰정권’으로 규정하며 국가성을 부정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라고 규정했고 노동당규약(2012년 개정)에서는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

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 하는데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며 남한은 혁명의 대상임을 선언했다. 이러한 다면성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에서도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는 데 주지하듯 1991년 9월 18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또한 유엔으로부터 국가의 지위가 승인되고 인정되었다. 유엔헌장 4장 1항에 따르면 오직 국가만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특수성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 분단의 특수성은 국가간의 관계보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규정은 1991년 12월에 채택되고 1992년 2월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서문에서는 남과 북의 관계를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이러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분단 상황에서 상대를 ‘외국’이 아닌 ‘민족’으로 보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동시에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부정하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단의 특수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단의 다면적 실제들은 통일논의와도 직결되는 데 그 이유는 통일의 실현은 분단 현실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분단과 통일논의는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안보나 정권유지의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허용치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 담론을 독점해왔다. 분단초기 북한에 의한 동족상잔의 한국전쟁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 노선에서 우리사회에서는 통일논의보다는 ‘반공’과 ‘안보’가 우선시되어야 했고 분단논리 또한 적아의 이분법 속에서 이에 가세하며 다양한 의견들과 시각을 사장死藏시켰다. 따라서 72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선행되고 그 기초위에서 구체적인 통일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II. 통일의 기초적 이해와 다중적 실제들로서 방법론

통일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통일이란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

에서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열린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  
의 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통일의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 남북  
의 견해는 서로 달랐다. 한국은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통일 방  
식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유민  
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통일을 원했고 북한은 북한대로 ‘하나의 조선’ 이  
라는 통일관에 기초한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서 접근했다. 분단초기부터  
상당기간 통일에 대한 방법론이나 공세는 북한에서 제시되어 왔고 반대로  
한국은 수동적 이였고 수세적 이였다. 그러나 체제경쟁이후 입장이 바뀌어  
한국은 공세적이고 반대로 북한은 방어적이다. 통일논의와 관련하여 분명한  
것은 72년의 분단시기에 남북한 모두가 통일 문제를 양 정권이 오랫동안 독  
점하고 통일의 주체인 양쪽 주민을 그 과정에서 소외시킨 것이다.

다음으로 여러 통일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불필요한 통일방안이나 시나리오로 통일문제를 더 어렵고 난해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관심을 저하시켜 온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차용해온 분단통  
일국의 통일경로와 통일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도 적지 않다. 그  
러나 어디까지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 상황에 맞는 방법과 시나리오가 있  
다는 점에서 수많은 분단통일국의 통일방안과 사례는 매개변수 일뿐 절대상  
수 일수는 없다. 문제는 한반도 상황에 따른 통일방법이나 시나리오조차 제  
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통일의 방식이 흡수나 무력이  
냐, 아니면 합의나 신탁방식이나, 중립화냐에 따른 복잡하고 원론적인 이론  
만 남발됐을 뿐 국민들의 참여와 지혜가 담긴 원숙한 논의나 구체적 로드맵  
은 부족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일은 결코 미리 그려진 경로나 시나리  
오 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분단통일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사례가 있다면 어느 국가도 공식 선언된 통일방안대로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의 상대인 북한지도체제와 북한주민에 대한 시각이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통일의 상대를 북한정권으로만 막연하게 생  
각해왔지만 이제는 ‘투트랙(two-track)’ 즉 북한정권과 주민주민을 분리하  
여 접근하는 통일전략이 필요하다. 통일의 궁극적 주체는 남북한 주민이다.  
어떤 방식의 통일이든 최종선택은 주민의 몫이다. 한국사회에서 통일론이 호  
응을 얻으려면 전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필수이듯 북한에 있어서도 어떻게  
그곳 주민들의 마음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북한이 망해도 북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구체적 통일방안이나 실제적 통일준비를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담론은 어느 일방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독점해온 통일논의를 사회저변으로 확대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민간차원에서 통일담론을 구체화하며 확산시켜야 한다. 주지하듯이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그 참여자들을 보면 어색하고 실체가 불분명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남북관계와 북한정권을 상대로 한 ‘분단정책’이 ‘통일정책’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의 할 일과 민간차원에서의 할 일을 분담하고 협력하면서도 통일을 열개로 한 민간의 통일운동이 정부의 분단정책을 견인할 때 통일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정부의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베를린장벽이 붕괴했을 때 서독정부는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

둘째, 다기다양한 수많은 통일논의와 통일시나리오의 현실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무력통일, 합의통일, 중립화통일, 흡수통일, 신탁후통일 등이 한반도의 통일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전쟁의 교훈은 어떤 경우라도 무력으로 인한 통일은 막아야 하며 또한 무력통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합의통일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통일은 합의에 의한 대등통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이 시작되는 순간 이후 통일과정은 가장 냉정하고 냉혹한 힘의 관계를 반영하며 무엇보다도 이미 남과 북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한 통일은 힘의 반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립화통일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지전략적 환경을 둘러보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통일인지는 명약관화하다. 남한주도의 통일이면서도 그것을 북한주민들이 원할 때 통일은 가능하다. 통일의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서독의 경우 베를린장벽이 붕괴했을 때 서독정부의 ‘선택’과 목표는 놀랍게도 동독의 붕괴가 아닌 “동독상황의 안정화”였다.

셋째, 최근 통일과 관련된 최대 관심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여부와 급변사태 가능성 여부다.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급작스러운 정권붕괴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과 분석이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면 이를 통일로 봐야 할 것인가? 북한이 붕괴하면 통일의 가

능성이 커지긴 하지만 그것이 곧 통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독립성·국가성·주권성을 인정받은 국가이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가 붕괴한 다해도 다른 정치지도세력이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통일에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새로운 정치세력과 북한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 통일 혹은 영구분단으로 갈 것이다. 따라서 통일준비의 최대과제는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주역은 동독주민들이었다. 정권에 항거하여 거리로 나서서 베를린장벽을 붕괴시켰고 투표로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여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고 서독에 흡수편입된 것이다.

### Ⅲ. 통일공동체를 향한 남북한 주민의 역할

통일의 과제는 통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실상 통일을 이룬 순간부터 시작된다. 남북한의 노력으로 72년 분단 상황을 끝낼 수는 있지만 오랜 분단이 낳은 적대성과 이질성이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특히 통일이후에 나타나게 될 이념갈등, 경제 갈등과 같은 법적·제도적 갈등뿐만 아니라 언어의 이질화, 교육수준의 차이, 윤리·도덕적 개념, 생활습관, 가치관 등 수많은 문제가 노출되면서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특히 통일의 주체가 될 한국사회의 통일 자세나 포용력은 통합의 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기본이 된다. 한국사회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양극화와 빈곤, 지역갈등과 차별 등 한국사회에 산적된 문제들이 적지 않다. 한국사회가 건강해야 통일된 나라도 건강할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

또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북한주민들은 남한과 통일한 뒤 자신들이 받을 대우, 자신들의 삶을 질을 미리 탈북 하여 남한에 살고 있는 고향사람들(탈북민)의 삶을 보면서 가늠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의 삶과 현실은 밝지만은 않다. 정부의 통계로도 3만 1천의 탈북민 중 대다수가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차별과 냉대, 빈곤과 배제가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적지 않는 탈북민이 탈남하고 있고 그중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숫자도 늘고 있다. 실업률과 자살률은 남한사람의 3배를 넘고 있는데 이들의 정착의지와 태도, 그리고 정부와 사회의 정착지원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3만 1천명의 탈북민도 품지 못하는 한국이 2천 4백만의 북한주민과 8천만의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해결에 전제되는 것은 남한사회의 통합과 포용력이다. 남한 내부가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남북한 통일은 그 자체가 재앙일 가능성이 많다. 정치권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분단과 통일문제에서조차 극단으로 나누어져 대립해 왔고 그 결과 통일은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한 주민차원에서 남북 화해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의 해결도 함께 모색하며 이를 통한 통일의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분단과 그 갈등을 들여다볼수록 남북한의 적대와 증오, 원한과 분노, 왜곡과 대립의 골은 너무나 두텁고도 깊은 것 이어서 설사 통일을 이루어도 상생하기는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분단의 아픈 역사나 통일의 실천과제들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통일을 이룬 후에도 또다시 ‘재분단’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그 고통은 모두가 짊어져야 짐이다.



**남북갈등과**

**통일논쟁**

**전주기전대학교 주승현**





## 남북갈등과 분단구조

갈등

- 1 분단의 중층성
- 2 분단의 복합성
- 3 분단의 이중성
- 4 분단의 다면성
- 5 분단의 특수성

통일방법론

통일  
정반합

- 1 함수 통일
- 2 무력 통일
- 3 중립화 통일
- 4 신탁후 통일
- 5 합의(협상) 통일
- 6 1국 2체제 → 1국 1체제 통일

# 통일의 방법론적 접근과 이해




---



---



---



---



---



**유태준**



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시위했다가 공주에서 12년을 감옥살이하고(법원판결은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3월 석방과 동시에 나주남평미래병원(정신병원)폐쇄 병동에 입원시킨 사람입니다 .보호관찰기간이 3년인데 3년동안 여기있다가 나가래요.폰번호 010

**검거보상금 최고 1,000만원**

**인적사항·특징 및 사건개요**

- 인적사항: 유 태 준 (48세, 남)
- 신체특징: ① 신장 165cm 체중 68kg; 보통체격, ② 약간의 흰머리에 복한 말투
- 사건개요: 2017. 8. 1. 15:36경 나주시 소재 ○○병원에서 전자팔찌 훼손 후 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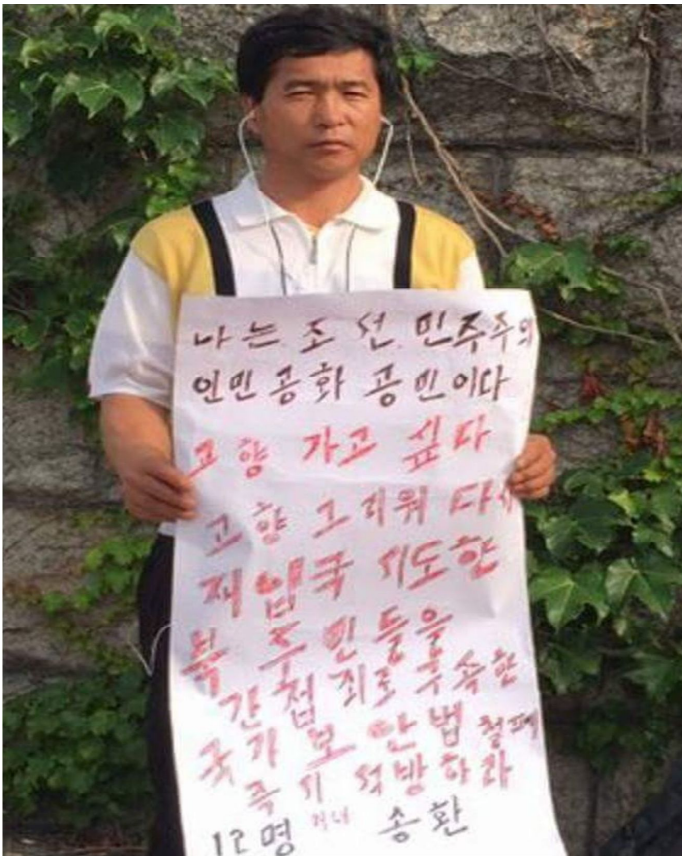


도주 당시 모습 (2017. 8. 1)

**신고 전화번호 및 안내사항**

- 국번 없이 112, 광주보호관찰소 062-370-6520  
나주경찰서 061-339-0112
- 검거보상금\*은 신고 내용의 난이도·기여도 등 심사, 지급금액 결정
- \*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고시)」
- 신고자·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절대 보장

- 南은 냉혹한 사회, 인간 이하 취급, 천대와 수모로 절망, 생지옥
- 北, “조국은 그 사이 천지개벽, 죄를 묻지 않고 받아주겠다”



- 나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나를 북으로 보내주오
- 뜻을 함께 하는 탈북자 100명

북한탈주자들은  
리북으로 돌아가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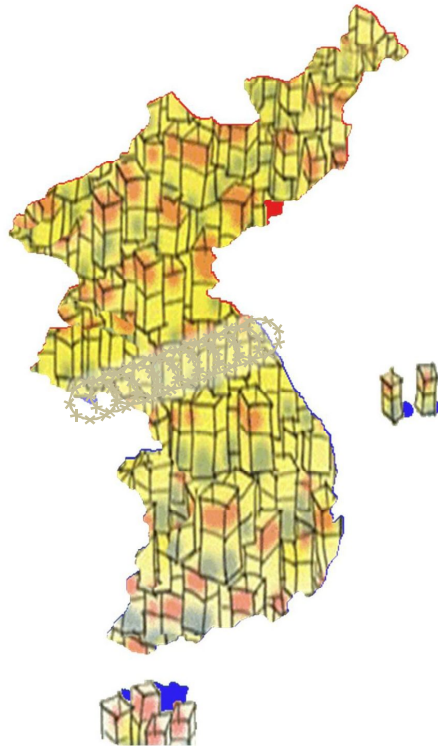
우리고장  
우리 삶의터전에서 버저시  
우리들의 주머니를 털고있는가  
내고장사람들도 먹고살기힘들다  
우리들은 주시한다! 그대의행동을!

김건0 00식당, 리순0 00의류, 김철0 00식당,  
오애0 00미용실, 강0희 00의류, 송명0 00미용실  
김두0 00음식, 리국0 00분식, 태0희 00의류점

내고장지킴이 운동본부 연합회  
탈주민추방시키기 자율운동 평택지회

Jetzt waechst zusammen,  
was zusammen gehoert

Willy Brandt



## 통일시대: 표어인가? 현실인가?





감사합니다

### Ⅲ. 독일의 통일 후 통합 현황과 과제

통합지수의 국제비교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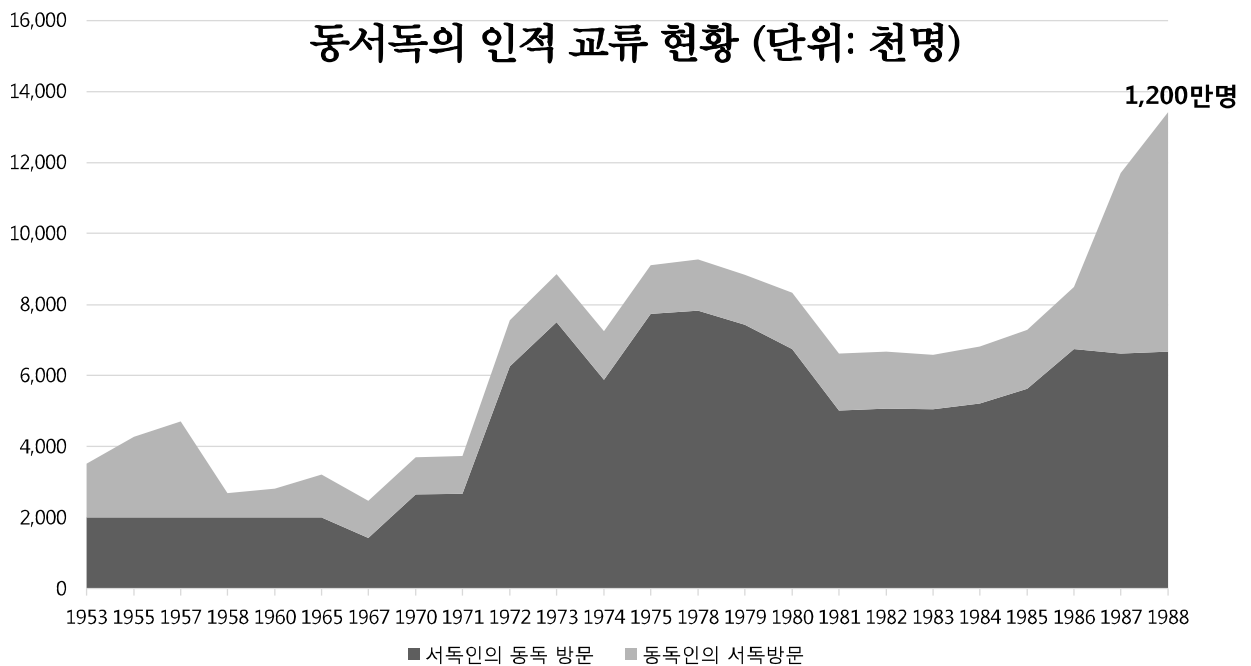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 학 재

# 독일의 통일 후 통합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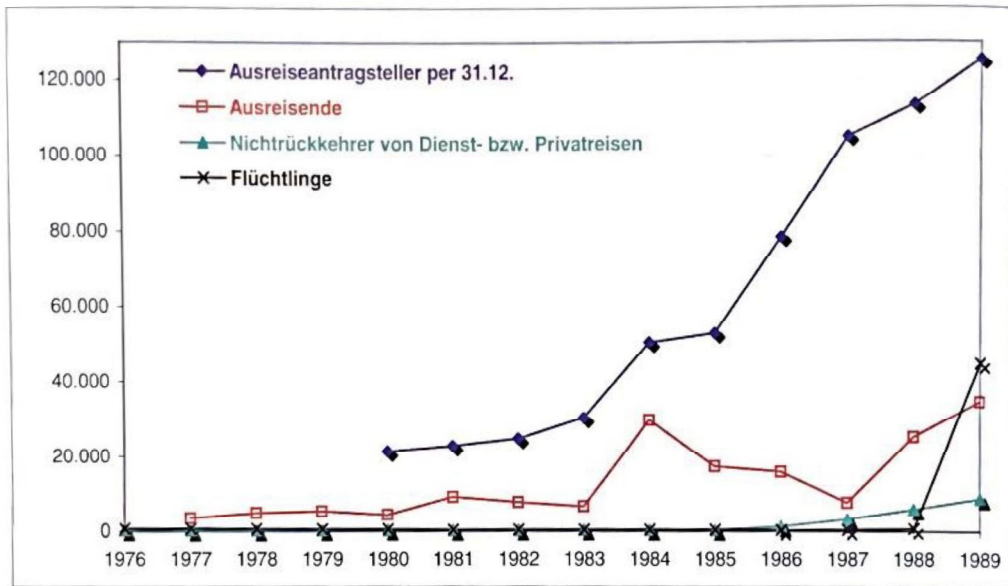
## 통합지수의 국제비교 가능성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동서독의 인적 교류 현황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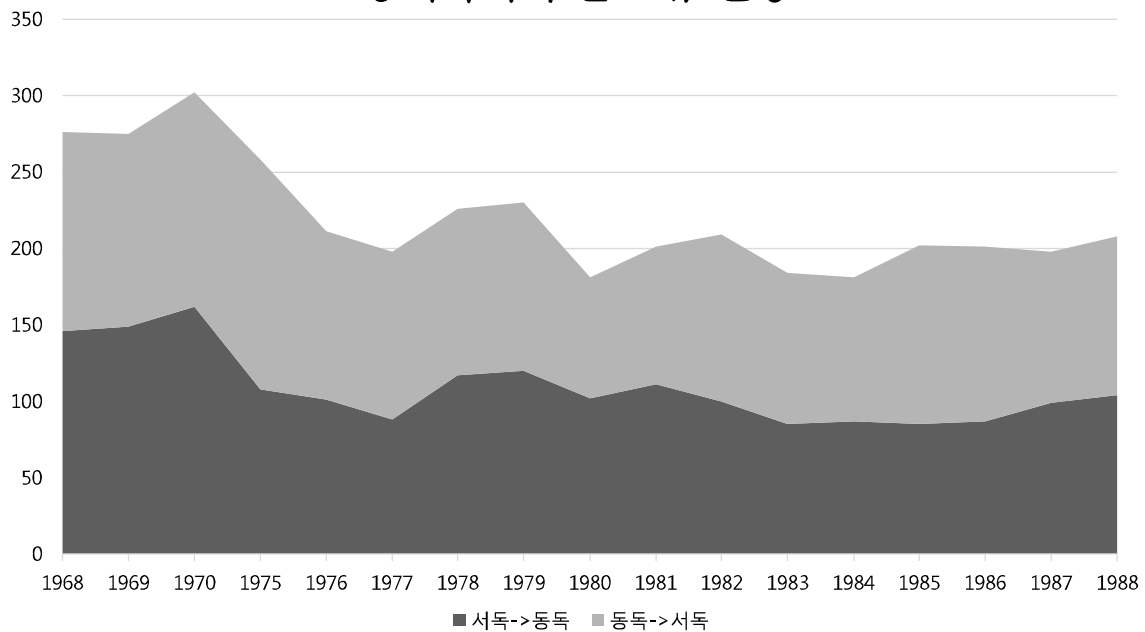


##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와 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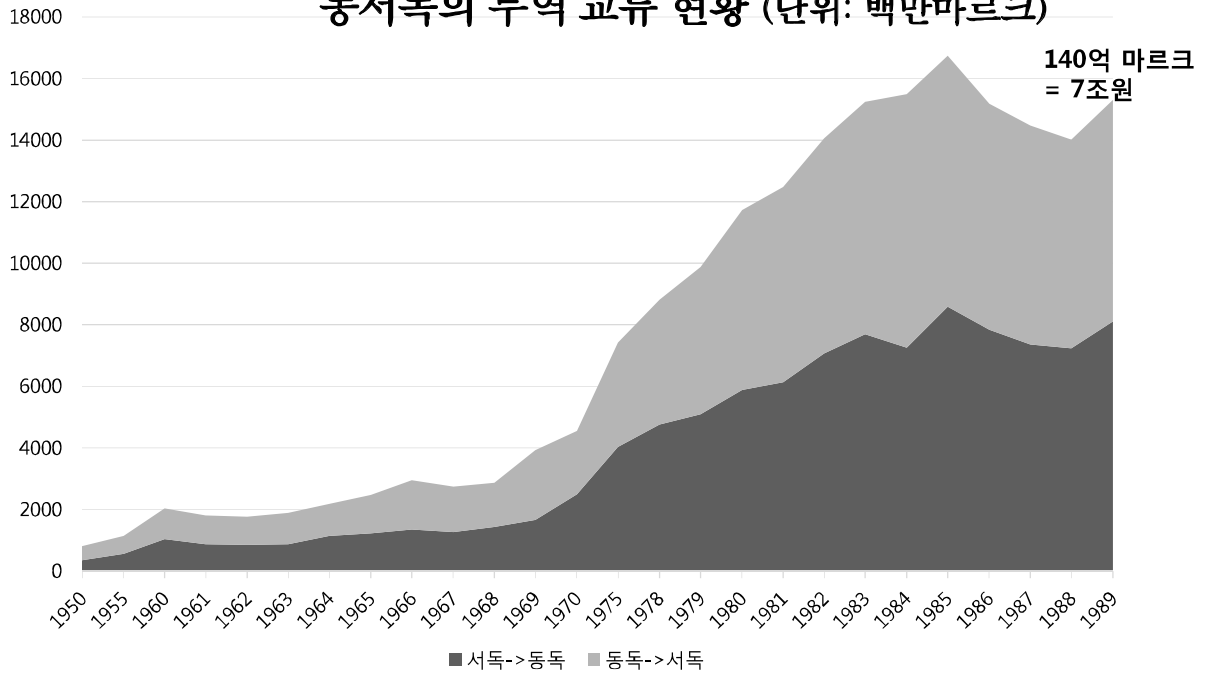


Quelle: Eisenfeld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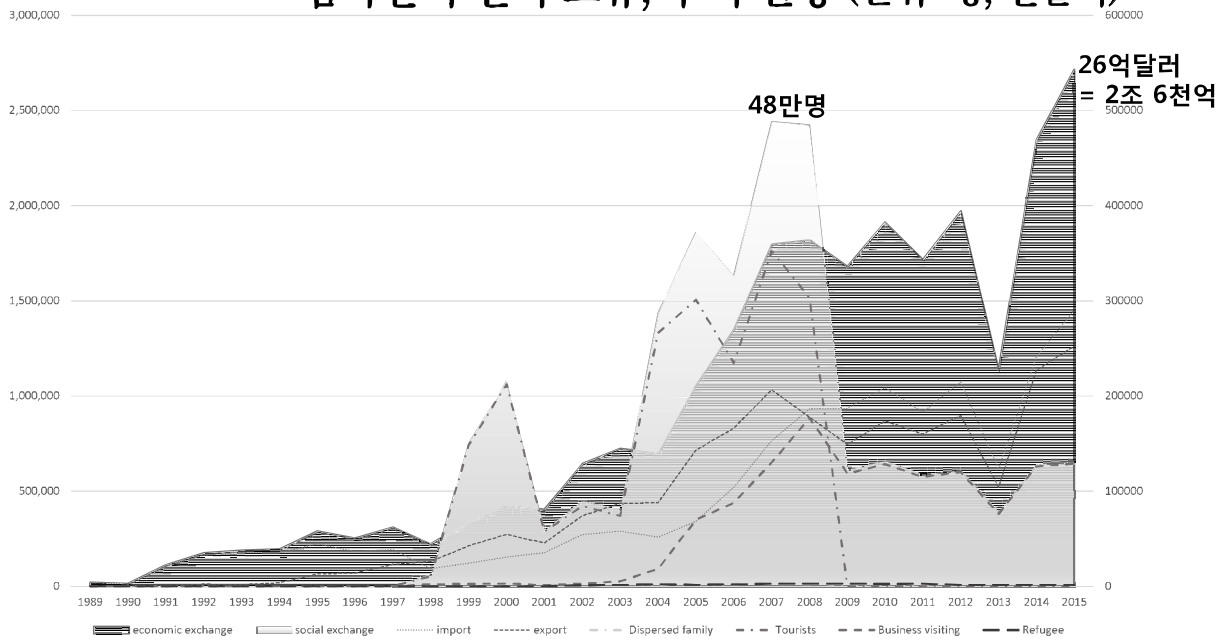
## 동서독의 우편 교류 현황



### 동서독의 무역 교류 현황 (단위: 백만마르크)



### 남북한의 인적 교류, 무역 현황 (단위: 명, 천달러)





Im Juni 1990 stehen DDR-Bürger vor der Sparkasse in Görlitz Schlange um DDR-Mark in DM umzutausc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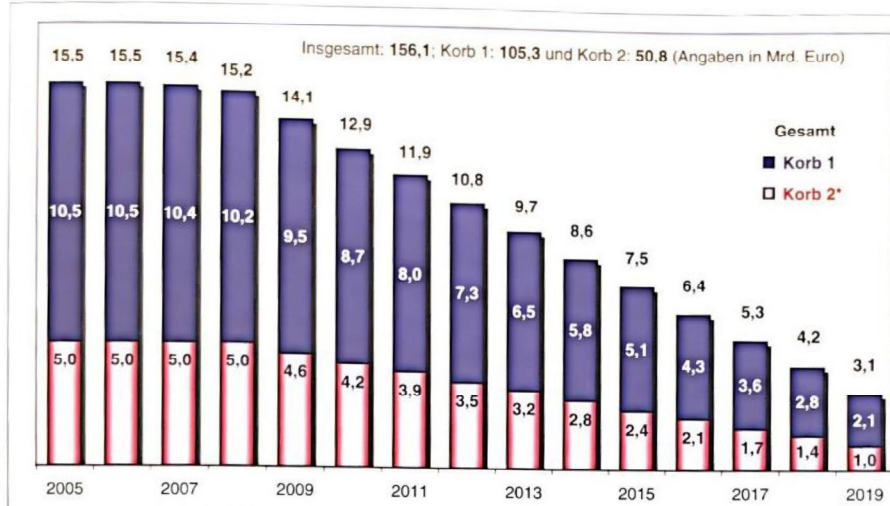
## 독일 통일 이후의 과제들

- 1) 독일의 주권 회복
- 2) 동서독 주둔 외국군 철수
- 3) 동독 대외 관계 처리
- 4) 군사분야 통합
- 5) 헌법 개정
- 6) 베를린으로 수도 이전
- 7) 동독 행정기관 근무자 처리
- 8) 동독 독재 과거 청산 정책
- 9) 동독의 재산 문제 처리
- 10) 동독 경제 재건 계획
- 11) 통일 비용 조달 정책
- 12) 동독 시장화와 기업 사유화
- 13) 실업자 대책, 복지 개편
- 14) 환경문제 개선 조치
- 15) 사회내적 통합 조치

## 독일 통일 이후의 과제들

- 동독 마을, 거리, 건물, 지방 이름이 변화 (동독 지우기?)
- 통일 비용: 통일이후 3년간 서독이 동독으로 지원한 자금이 1,200 billion euros(1,200억); 2003년까지 1.2 trillion (1.2조 e uros)
- 헬무트 콜 총리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정부 부채를 늘림.
- 1991년부터 연방 은행이 서서히 이자율을 인상
- 이자율이 인상되자 실업률이 오르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고, 유럽 전체에 영향을 줌.
- 헬무트 콜은 통일 비용을 유럽국가들과 나누었음.

Abb. 29: Solidarpakt II (총 1,561억 유로 = 190조)



Korb 1: auf dieses Geld haben die ostdeutschen Länder einen Rechtsanspruch, Raten sind bereits festgelegt;  
Korb 2: freiwillige Selbstverpflichtung des Bundes, dessen Beitrag für „überproportionale“ Investitionen im Osten auszugeben.

\* Zahlungsweise steht noch nicht fest, unterstellt sind gleiche Raten wie für Korb 1.

Quelle: Die Welt vom 30. Dezember 2004

Abbildung 5: Äquivalenzgewichtetes Jahresnettoeinkom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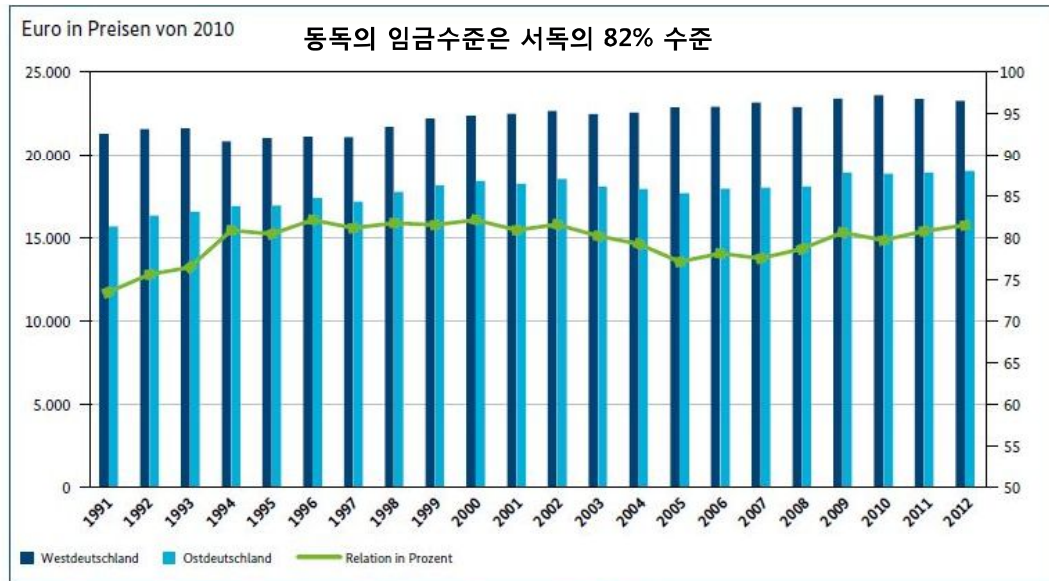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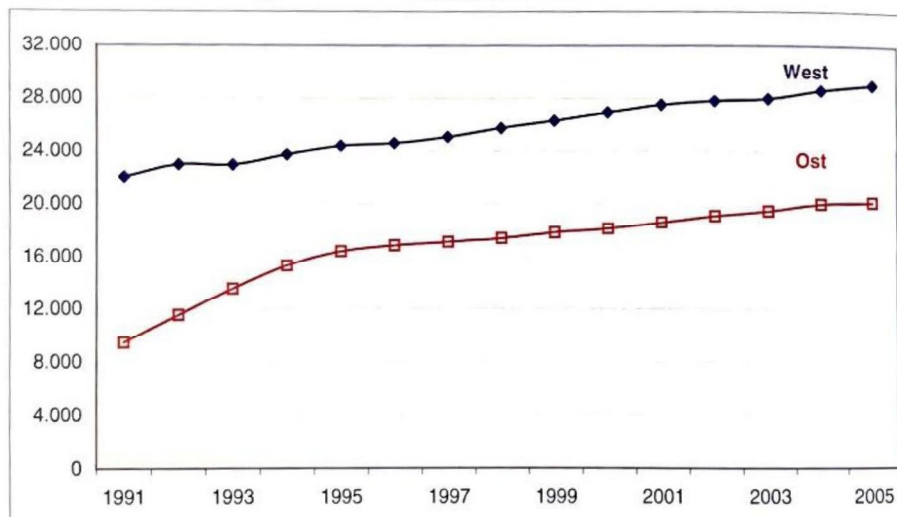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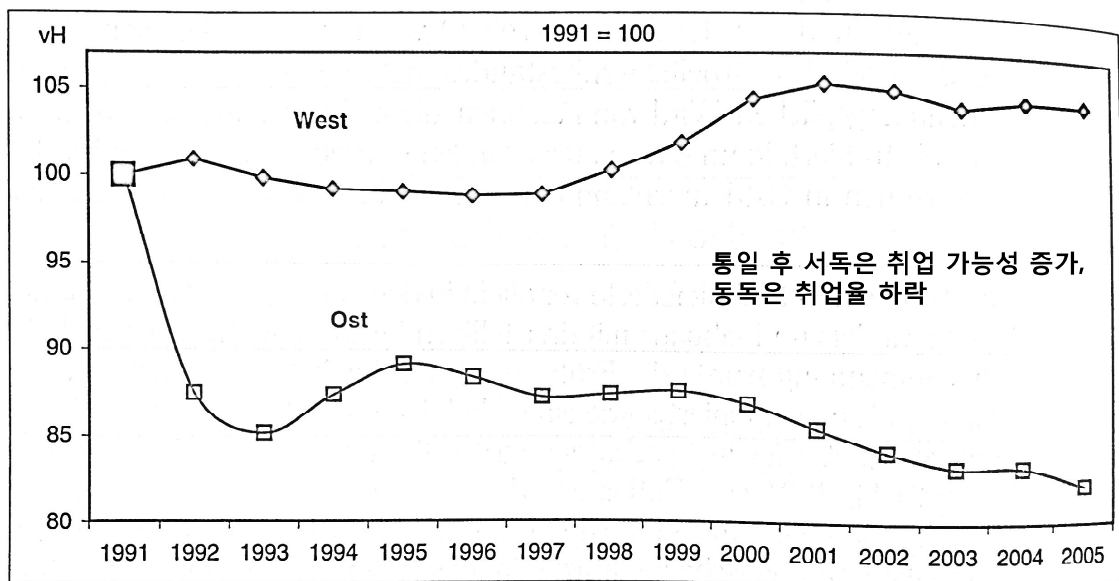


Abb. 13: Entwicklung der Wirtschaftskraft 1991-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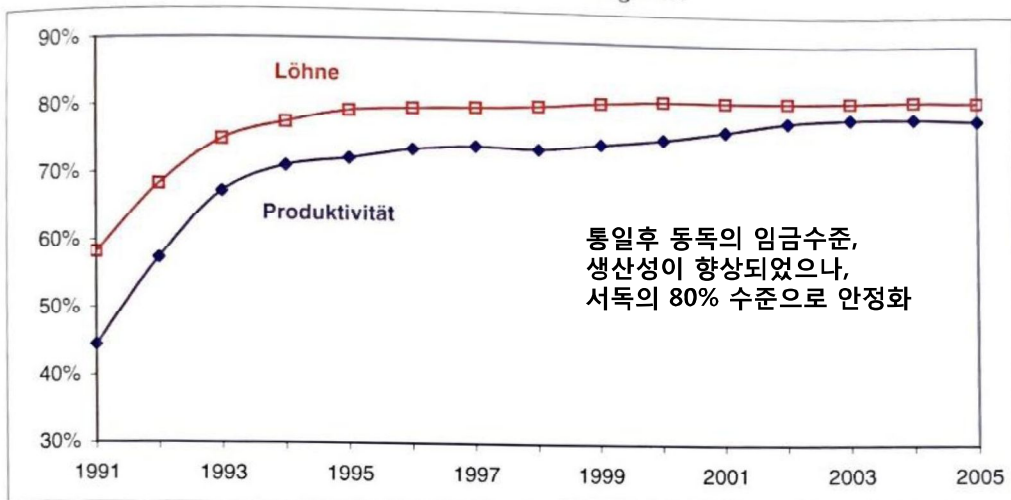
Bruttoinlandsprodukt in Halbjahresergebnissen je Einwohner in West- und Ostdeutschland in Euro zu jeweiligen Preisen. Berlin wurde Ostdeutschland zugerechnet.  
Datenbasis: Statistisches Bundesamt; Arbeitskreis VGR der Länder

Abb. 20: Entwicklung der Erwerbstätigkeit im Ost-West-Vergle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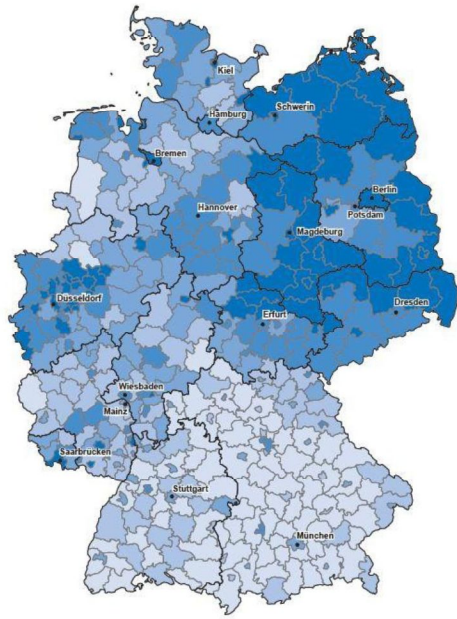
West einschließlich Berlin, Ost ohne Berlin.  
Quelle: Arbeitskreis der VGR der Länder

Abb. 16: Löhne und Produktivität im Ost-West-Vergleich



BIP je Erwerbstätigen und Bruttolohn- und Gehaltssumme je Arbeitnehmer. Berlin wurde Ostdeutschland zugerechnet. West = 100%.  
Datenbasis: Arbeitskreis VGRD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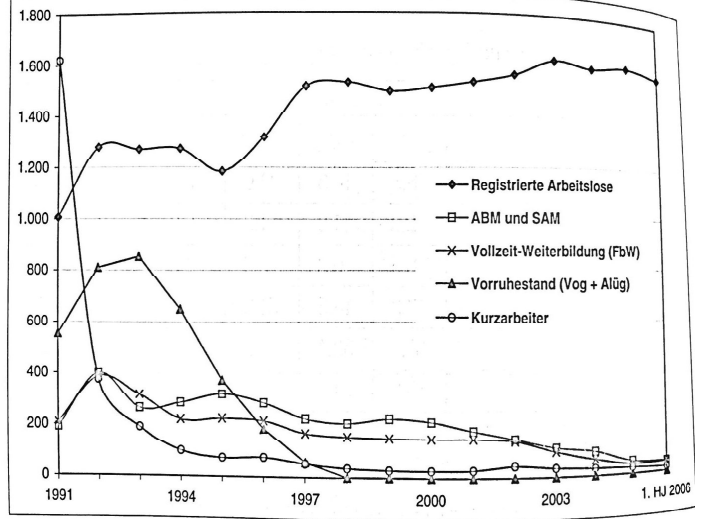
Arbeitslosenquote 2014  
Anteil der Arbeitslosen an allen zivilen Erwerbspersonen in %



unter 3,0 3,0 bis unter 5,1 5,1 bis unter 6,6 6,6 bis unter 8,7 8,7 und me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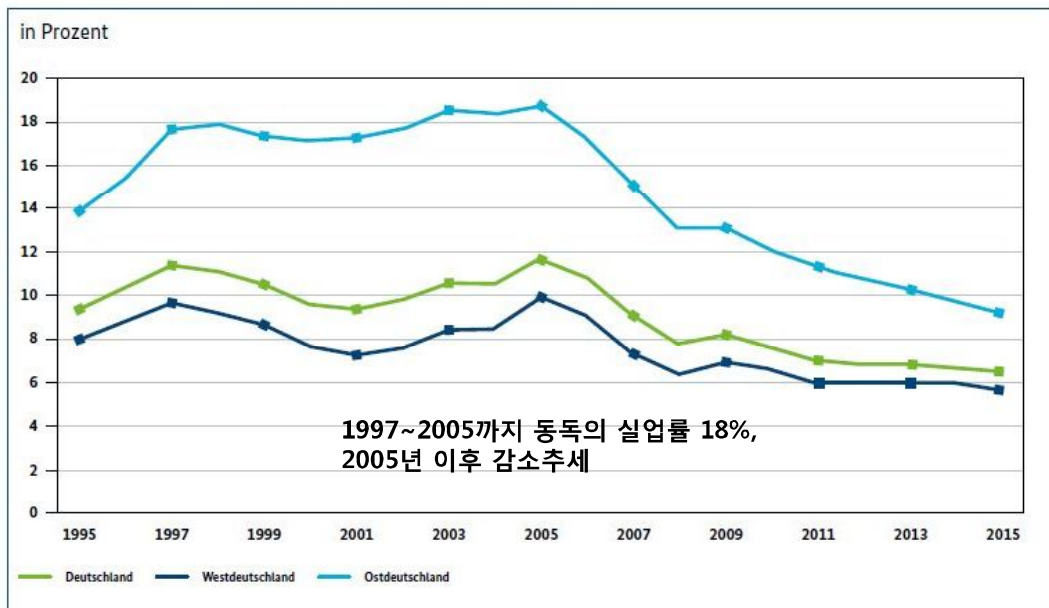
Kartengrundlage: © GeoBasis-DE / BKG 2014  
Quelle: Bundesagentur für Arbeit

Abb. 19: Arbeitsmarktdaten der neuen Bundesländer 1991-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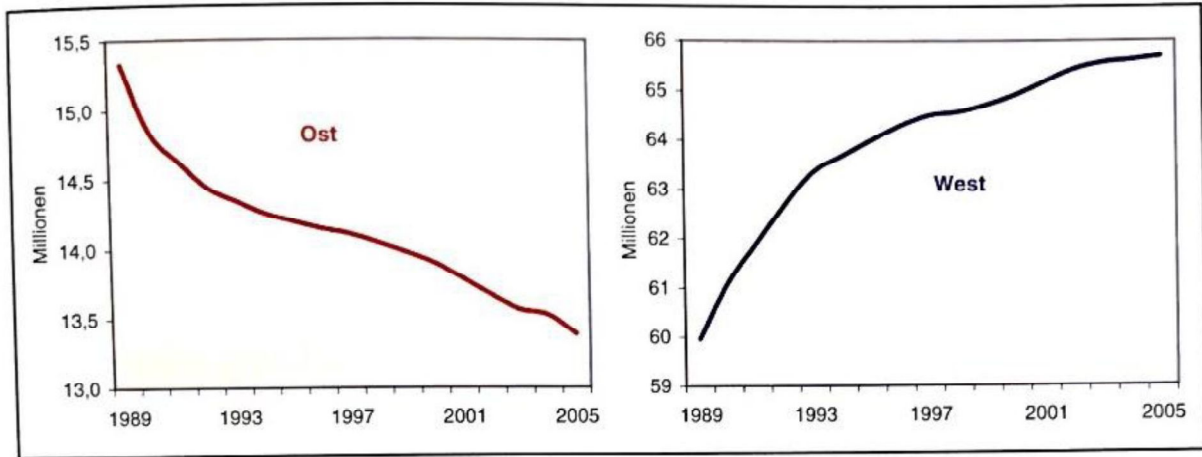
Neue Bundesländer einschließlich Berlin. In Tausend Personen.  
Quelle: IAB

Abbildung 2: Entwicklung der Arbeitslosenquoten von 1995 bis 2015



Quelle: Eigene Darstellung nach Daten der 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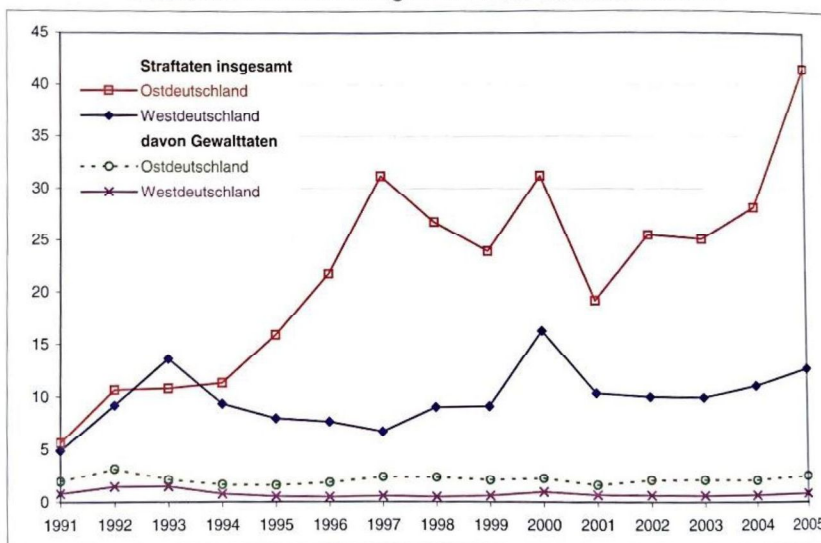
Abb. 61: Bevölkerungsentwicklung in Ost und West



Ost und West jeweils ohne Berli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동독의 인구 감소 1,540만에서 1,350만으로  
서독의 인구 증가 6,000만에서 6,550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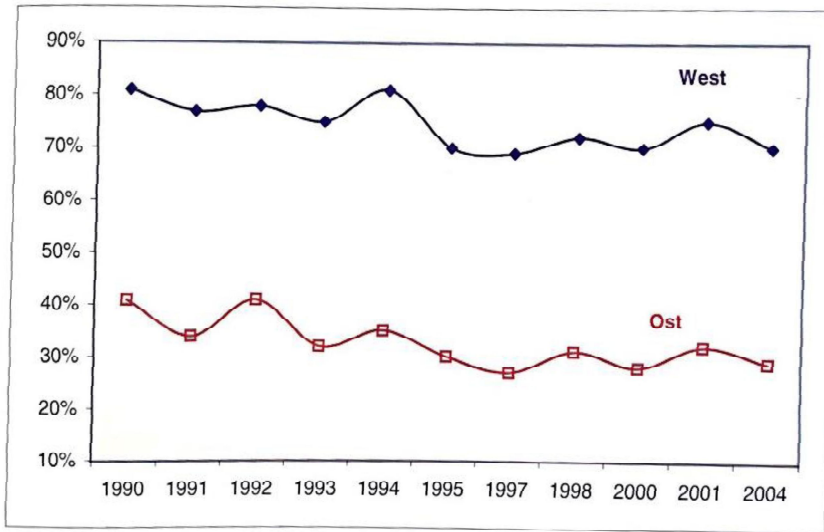
Abb. 71: Entwicklung der Straftaten mit erwiesenem oder zu vermutendem rechtsextremistischem Hintergrund in West- und Ostdeutschland



동독지역에서  
우익극단주의 배경의  
분쟁과 상해 발생  
10만명당 50건

Ostdeutschland einschließlich Berlin, Straf- und Gewalttaten je 100.000 Einwohner.  
Quelle: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2001),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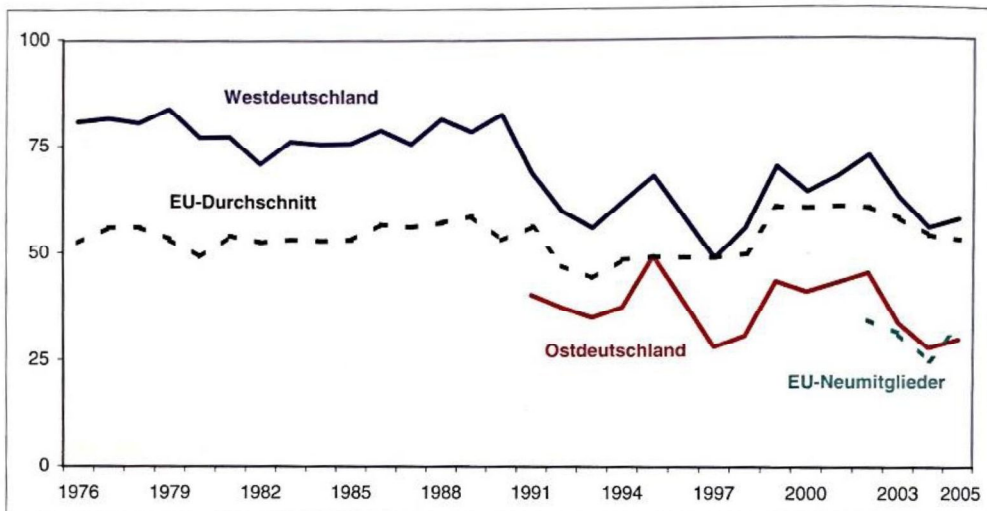
Abb. 74: Demokratiezufriedenheit\*



민주주의 만족도  
서독은 80% 수준  
동독은 30% 수준

Positive Antworten auf die Frage: „Glauben Sie, die Demokratie, die wir in der Bundesrepublik haben, ist die beste Staatsform, oder gibt es eine andere Staatsform, die besser ist?“  
Datenbasis: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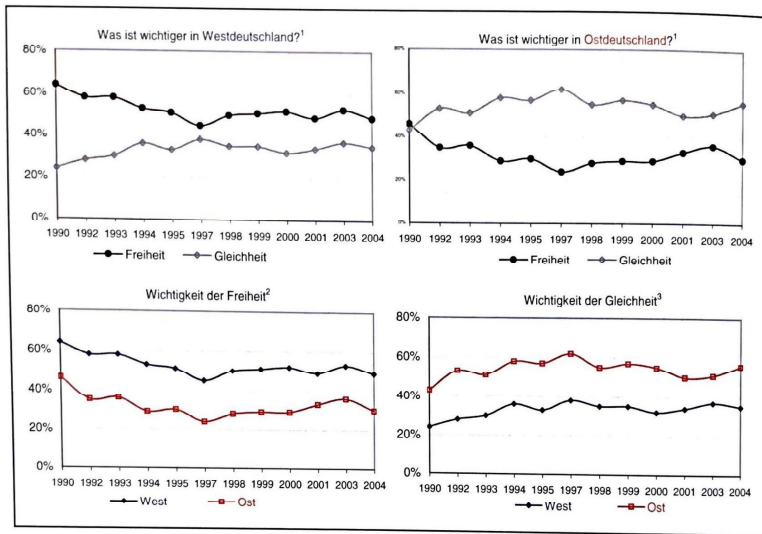
Abb. 76: Demokratiezufriedenheit in Deutschland und Europa



Antworten auf die Frage: „Sind Sie mit der Art und Weise, wie Demokratie in (Land) funktioniert, alles in allem sehr zufrieden, ziemlich zufrieden, nicht sehr zufrieden oder überhaupt nicht zufrieden?“ Dargestellt sind die addierten Prozentanteile „sehr zufrieden“ und „ziemlich zufrieden“.

Datenbasis: The Mannheim Eurobarometer Trend File 1970–1999, Eurobarometer 2000–2005

Abb. 81: Freiheit oder Gleichheit?



자유가 중요한가 (50%)  
평등이 중요한가? (30%)

Aussa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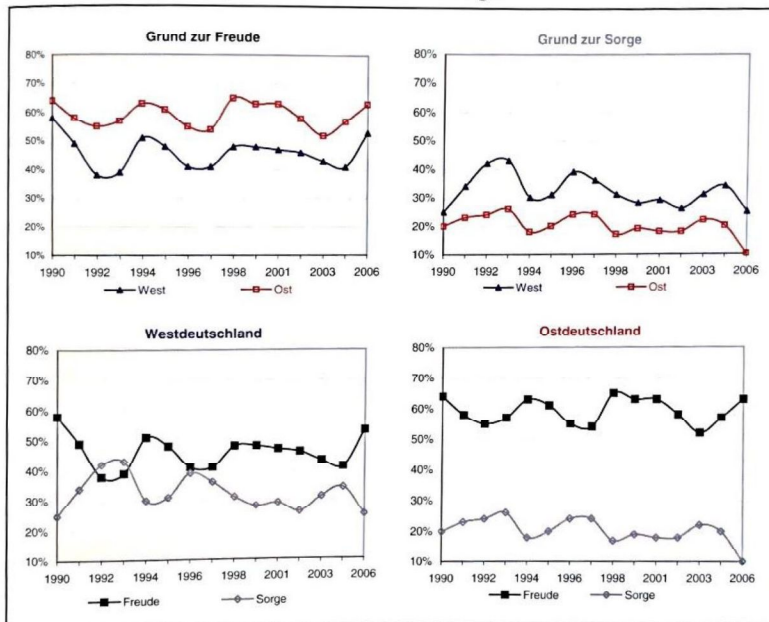
<sup>1</sup> „Wenn ich mich entscheiden müsste, ist mir die Freiheit/Gleichheit wichtiger.“

<sup>2</sup> „Wenn ich mich entscheiden müsste, ist mir die Freiheit wichtiger.“

<sup>3</sup> „Wenn ich mich entscheiden müsste, ist mir die Gleichheit wichtiger.“

Datenbasis: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Abb. 82: Vereinigung: Grund zur Freude oder So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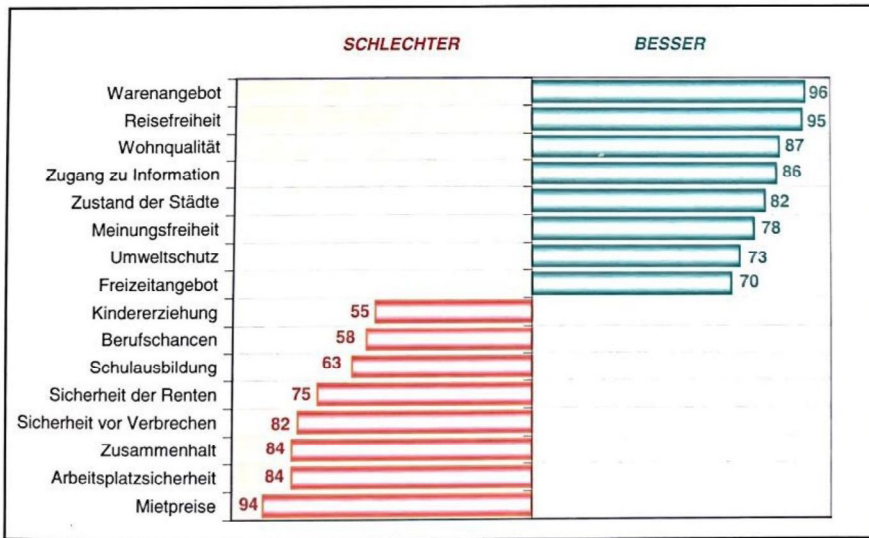


통일은 기쁨인가?  
(60~65%)

걱정거리인가?  
(25%,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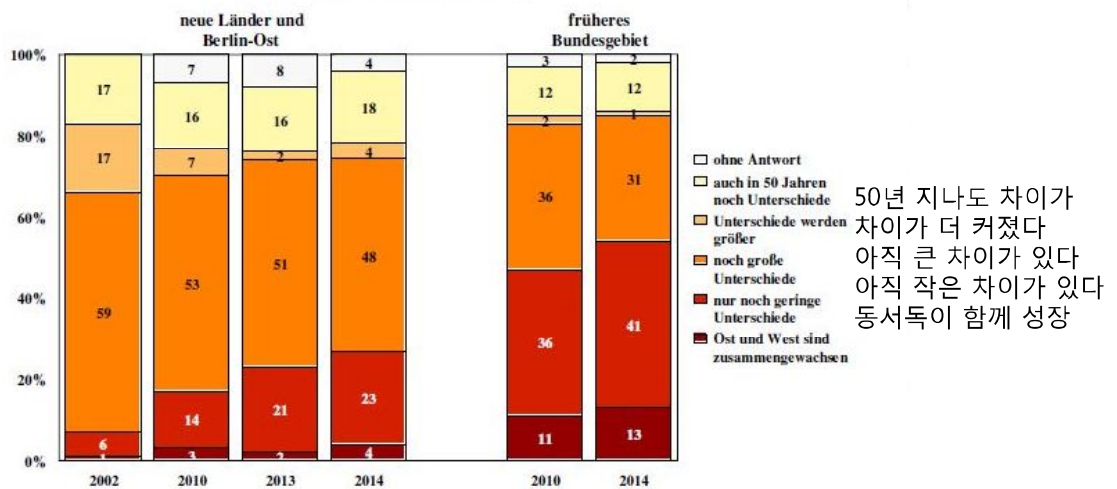
Datenbasis: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Abb. 83: Besser/schlechter nach der Wiedervereinigung



Frage: „Was ist nach der Wiedervereinig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sser und was schlechter geworden?“ Angaben der Bevölkerung in den neuen Ländern in Prozent  
 Datenbasis: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Quelle: FAZ vom 19. September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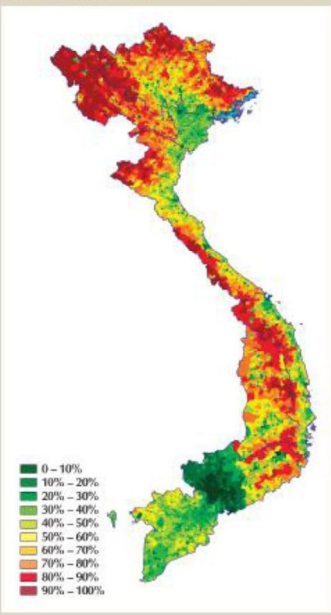
Abbildung 1.11: Wie schätzen Sie den Stand der Einheit Deutschlands ein? - nach Regionen |4/  
 - 2002/2010/2013/2014 - in Prozent -



Datenbasis: stz/leben 2002/2010/2013/2014 (g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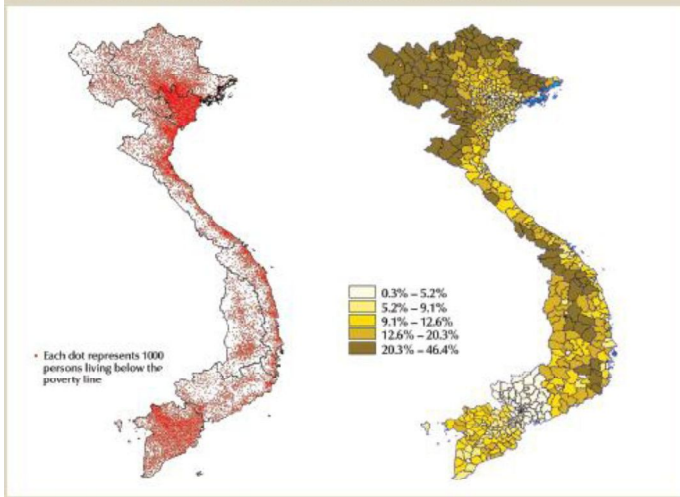
Gunnar Winkler (2016), *Friedliche Revolution und deutsche Vereinigung 1989 bis 2016: Positionen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Figure 14.2 Incidence of Poverty in Communes, Vietnam



Sources: Minot, Baulch, and Epprecht 2003.

Figure 14.3 Density of Poverty and Poverty Gap by District, Vietnam



Sources: Minot, Baulch, and Epprecht 2003.

## 통합 역량 발전에 대한 역사적 & 사회학적 설명

### • 외적 요소

- ① Historical experiences of integration after WW II
- ② The Cold War competition(~1961, Berlin Wall), 'Youth D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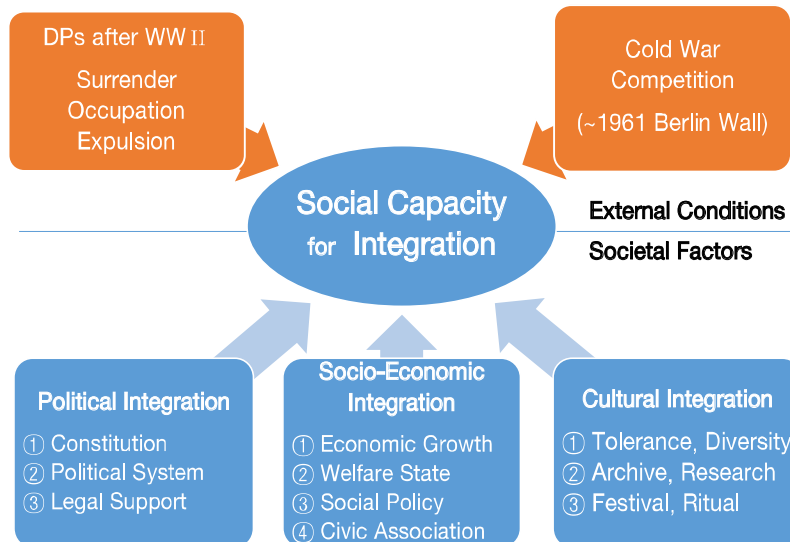
### • 내적, 사회적 요소

- ① Constitutional Rights, Political Representation, Legal Support
- ② Welfare State, Social Policy, Emergency help
- ③ Economic Growth in 1950s~60s (라인강의 기적)
- ④ Cultural Tolerance, Diversity, Plurality



**A Layered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Peace**

# 사회적 평화의 제도화와 통합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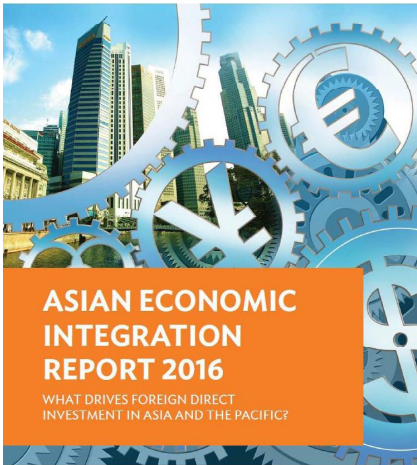


## 대표적인 지역 통합지수(Regional Integration Index)

- European Union 14/ 25 Index (Single Market, Homogeneity, Symmetry, Conformity)
- European Union Index For Eastern Partnership Countries
- Asian Economic Integration Index (ADB)
- Asia-Pacific Regional Integration Index (ADB)
- Africa Regional Integration Index

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on 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 Studies  
(벨기에)

<http://cris.unu.edu/unu-cris-pub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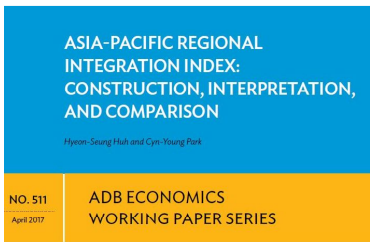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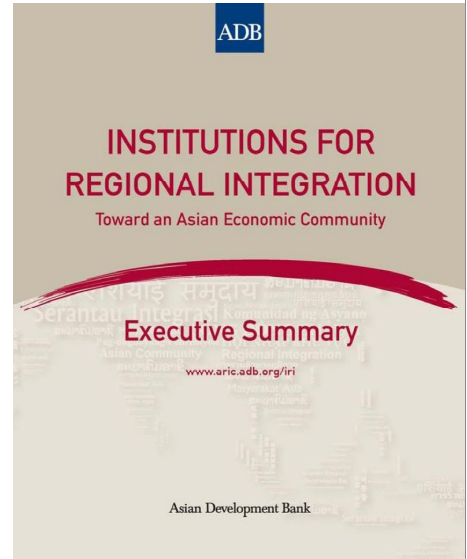
ASIAN DEVELOPMENT BANK



*Africa Regional Integration Index Report 2016*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ASIAN DEVELOPMENT BANK



Indicators used in the EU-Index:

**Single Market**

*EU openness*

- [Trade in goods](#)
- [Trade in services](#)
- [Capital movement](#)
- [Labor migration](#)

*EU importance*

- [Trade in goods](#)
- [Trade in services](#)
- [Capital movement](#)
- [Labor migration](#)

**EU Homogeneity**

- [Per capita income](#)
- [Purchasing power standard](#)
- [Labor cost](#)
- [Long-term interest rate](#)
- [Public debt ratio](#)
- [Consumer tax rate](#)
- [Capital tax rate](#)

**EU Symmetry**

- [Economic growth](#)
- [Inflation](#)
- [Change in unemployment](#)
- [Government budget deficit](#)


**Institutional Conformity**

*EU participation*

- [EMU membership](#)
- [Schengen participation](#)

*EU compliance*

- [Infringement proceedings](#)
- [ECJ verdict: Single Market](#)
- [ECJ verdict: Environment and consumer protection](#)
- [ECJ verdict: Other sectors](#)



EU-25-Index 2004			EU-25-Index 2012		
Rank	County	Rank-Points	Rank	County	Rank-Points
1	Belgium	66.32	1	Belgium	75.30
2	Netherlands	59.92	2	Ireland	70.45
3	Ireland	58.33	3	Austria	69.64
4	Finland	57.81	4	Germany	66.06
5	Cyprus	56.13	5	France	65.98
6	Germany	56.13	6	Netherlands	65.51
7	Austria	55.99	7	Slovakia	65.49
8	Spain	55.30	8	Finland	65.11
9	France	52.94	9	Spain	64.25
10	Denmark	51.74	10	Slovenia	63.33
11	Portugal	51.54	11	Malta	62.54
12	Sweden	50.92	12	Czech Republic	61.33
13	Italy	50.13	13	Cyprus	60.81
14	Malta	49.96	14	Italy	60.43
15	United Kingdom	48.16	15	Portugal	59.57
16	Slovenia	47.81	16	Denmark	57.29
17	Estonia	47.55	17	United Kingdom	56.75
18	Czech Republic	47.39	18	Estonia	56.30
19	Slovakia	46.92	19	Sweden	55.25
20	Greece	46.24	20	Lithuania	53.45
21	Poland	44.92	21	Hungary	51.85
22	Hungary	43.73	22	Latvia	51.65
23	Lithuania	39.94	23	Poland	50.68
24	Latvia	36.20	24	Greece	46.80

## 동서독의 사회통합 지수 (Inclusion Index)

- Burda, Michael C. 2006: What kind of shock was it? Regional Integration and Structural Change in Germany after Unification, *Kieler Arbeitspapiere* 1306 (동서독간의 복지 격차 서베이)
- *Daten Report* 2006 (동서독간 수렴과 통합관련 조사)
- *German Socio-Economic Panel* 조사 (1984년부터 서독에서, 1990년부터 동독에서도 패널조사)
- *ALLBUS*: 1991년부터 동서독에서 실행되는 사회통합 여론조사
- *Sozialreport* 1990년 이후 2년마다 시행되는 조사
- *European Civic Citizenship inclusion index* (유럽차원의 이주민 통합지수)
- *COMPSTATE* EU차원에서 시행된 이민자 통합비교
- European Commission 2004: *Handbook on Integration for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written by Jan Niessen and Yongmi Schibel)
- Leonard, Mark & Griffith, Phoebe 2004: *The European Inclusion Index, Framework Document*

## 분단/통일과 통합지수

### • 독일식 통일과 통합지수

- 70년대 이후 교류 협력(경제, 인적)에 의한 통일
- 협력의 안정적 제도화 (1960~1990)
- 통일후 사회통합, 사회발전의 측정
- 통일후 유럽 통합의 측정

### • 중국식 일국양제와 통합지수

- 정치적 공존, 경제적 협력
- 양안의 경제교류, 인적 교류
- 양안관계의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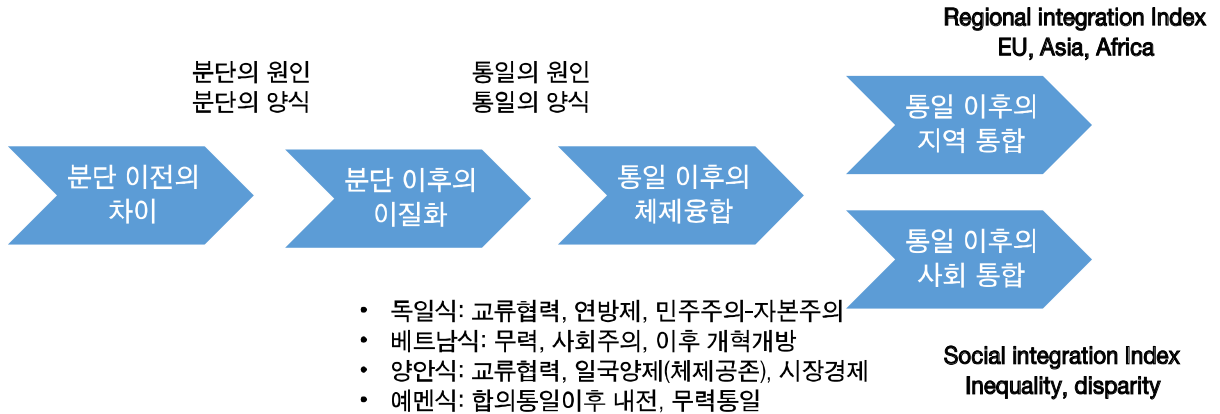
### • 베트남식 통일과 통합지수

- 54년 이전의 북남 베트남 차이(식민지)
- 75년 이전의 북남 베트남 발전의 차이(체제 이질화)
- 75년 이후 86년 이전까지 차이(체제 융합)
- 86년 도이머이 이후 지역통합/사회통합

### • 한반도식 통일과 통합지수

- 45~90년까지 남북한 발전의 차이
- 90년 이후 남북한 교류 협력 측정
- 90년 이후 남북관계 제도화

# 분단-통일 방식과 통합지수의 측정 대상



## 통일방식별 통합지수의 종류

- 독일의 통합지수
  - ①통일이전 교류협력, 제도통합 ②통일이후 사회통합 ③통일이후 지역통합
- 양안의 통합지수
  - ①통일이전 교류협력, 제도통합 ②통일이전 사회통합 ③통일이전 지역통합
- 베트남의 통합지수
  - ①통일이전 차이/격차 ②통일이후 체제융합 ③통일이후 사회통합 ③통일이후 지역 통합
- 한국의 통합지수
  - ①통일이전 차이/격차 ② 통일이전 교류협력, 제도통합 ③통일이전 지역통합 ...

## IV.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적응

인천지역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이영애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적응

인천지역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이 영 애



## CONTENTS

- 01 | 문제제기 및 연구 필요성
- 02 | 북한이탈주민 현황
- 03 | 적용된 연구방법의 개관
- 04 | 연구결과 및 요약
- 05 | 정책적 제언

# 01 | 문제제기 및 연구 필요성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적응의 어려움

출처: 2011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부적응 문제

### 남한 사회의 부담 가중

- ✓ 의무정착교육(12주) 및 지역집중적응교육(1년간의 거주지 보호기간 내 3주) 등의 초기정착에 대한 집중 투자
- ✓ 정착지원분야 특히 경제적 적응에 대한 우선 목표 설정  
⇒ 상당한 예산 및 정책적 역량 투입

- 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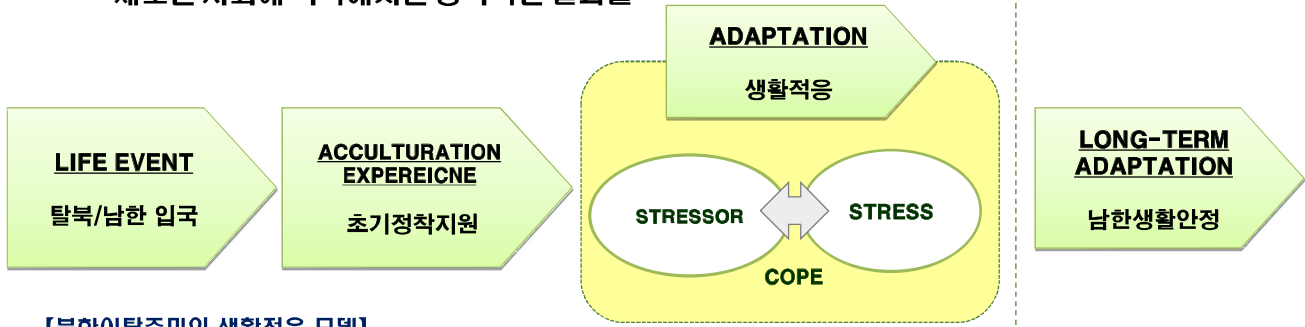
### 남한 생활의 어려움

- ✓ 실업 및 직업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가족내 갈등 증대
- ✓ 사회부적응자의 증대로 인한 비합리적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 증대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 야기
- ✓ 편협한 사회적 연결망의 보유 및 사회안전망 이용의 제한성

남한생활에 대한 적응(ADAPTATION) 실패

###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적응” (Adaptation) 문제 제기

· **적응**: 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에 대처하는 개인의 노력 및 능력을 의미하며, 새로운 사회에 익숙해지는 궁극적인 결과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적응 모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에 대한 갈등 및 부적응 유발 등의 **생활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 필요

### •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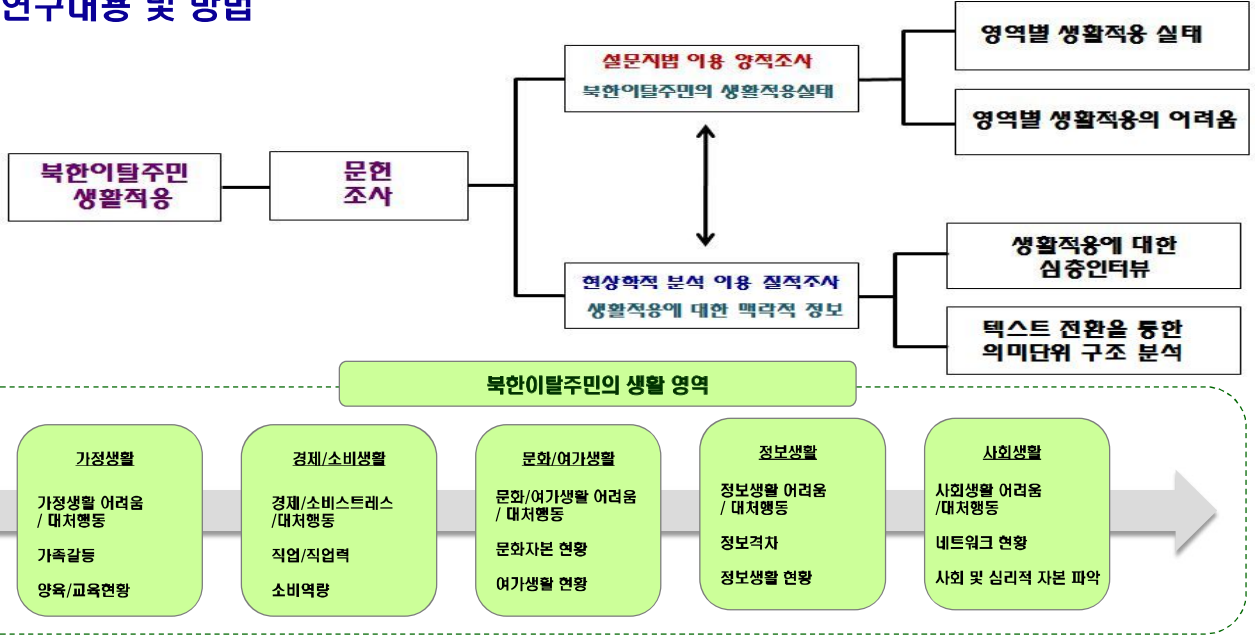
####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지역지원정책의 방향성과 효과성 검증 필요**
- 초기정착단계를 벗어난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각 생활영역에 대한 적응교육 및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선제적 정책이슈 발굴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적응을 통합적인 측면에서 다룸으로써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의 사전 발굴을 통한 통일시대 대비 및 공적 자원의 적절한 투입과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에 기여**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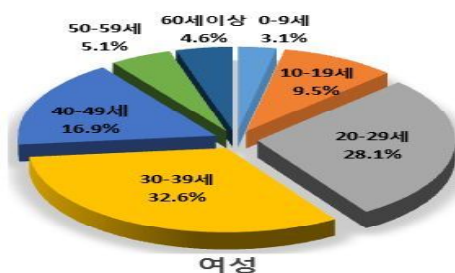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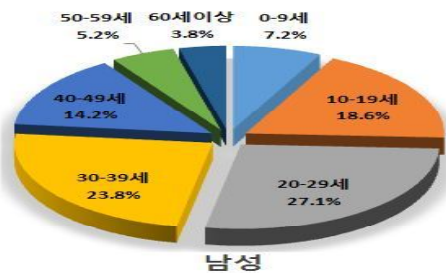
- 인천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전과 자립 및 자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밀착형 생활적응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자료 제공**
- 북한이탈주민 생활적응 및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증진을 위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적 접근의 가능성 확대**

• 연구내용 및 방법



02 |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주민 남한 입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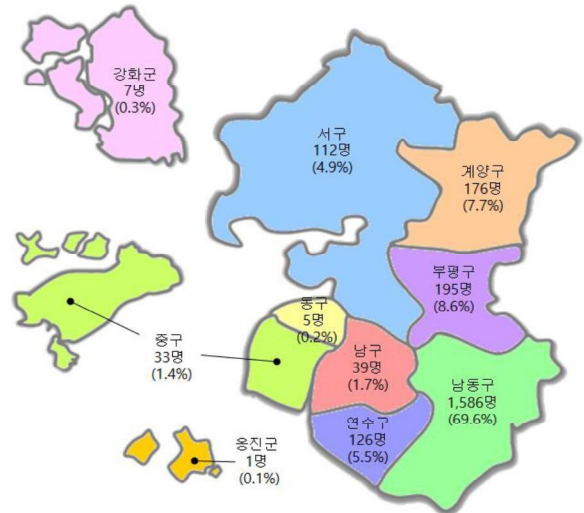


【지자체별 상위 거주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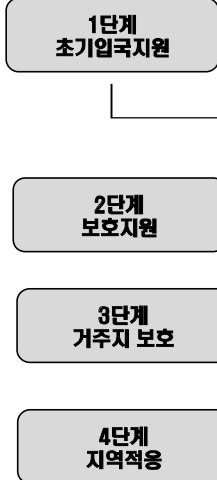
출처: 북한이탈주민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2013년 기준)

【인천시 군구별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출처: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재구성 2014년 6월말 거주자 기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단계 초기입국지원	<b>보호요청 및 국내 이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요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li> <li>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li> <li>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 입국 지원</li> </ul>
	----- 국내 입국 -----	
2단계 보호지원	<b>합동신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국 후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li> <li>조사 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li> </ul>
	<b>보호결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li> <li>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li> </ul>
3단계 거주지 보호	----- 거주지 전입 -----	
	<b>거주지보호 (5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li> <li>취업지원: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li> <li>교육지원: 특별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li> <li>보호담당관: 거주지 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li> </ul>
4단계 지역적응	<b>민간참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li> <li>지역적응센터 (전국 27곳, 지부 4곳) 지장·운영 (인천 남/북부 하나센터)</li> <li>정착도우미제도: 민간자원봉사자 연계</li> <li>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100여명)</li> <li>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li> </ul>

### 03 | 적용된 연구방법의 개관

구분	질적 연구 (Qualitative method)	양적 연구 (Quantitative method)
목적	-이론전개 및 개념을 개발 -맥락화(contextualization) -행위자의 시각이해	-이론검증 -일반화 -인과관계의 규명
가정	-현실은 사회적으로 구성 -복잡하고 측정이 어려우며, 상호관련성 있는 변수	-현실은 객관적으로 존재 -확인 가능한 변수, 관계의 측정
중요개념	-의미, 상징적 이해 -상황의 정의 -일상생활의 이해, 실제적 목적, 사회의 구성	-변수, 조작적정의 -가설, 신뢰도, 타당도 -통계적 의미의 일반화
표본추출 목적	-설명력: 변이와 풍부성 추구	-일반화: 표본의 대표성 추구
분석과정	-귀납적: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의 해석을 통한 이론화	-연역적: 미리 설정된 가설의 검증
장점	-심층분석적 -현상에 대한 이해 및 설명이 가능	-객관적 -일반화의 모색
단점	-긴 연구기간 -연구의 외적타당도를 높이기 어려움 -개인의 편견을 배제하기 어려움	-외생변수들의 통제기 어려움 -연구의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어려움 -통계적 오류가능성

### 현상학적 분석(질적 연구)을 위한 자료분석 과정

※ Colaizzi의 구체적인 주제분석과정의 적용



현상학  
연구특징

출처: Creswell, J.W.(2010)

	초점	분석단위	자료수집	자료분석	보고서
현상학	경험의 본질 이해	경험을 공유해 온 여러 개인들	개별면접중심	-의미있는 진술 의미단위 -텍스트에 근거한 기술 -구조적 기술	경험의 본질 기술

질적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sup>1)</sup>	성별	연령	입국시기	제3국 경유	재북시 거주지
1	한○○	여	40대초	2007년	중국	함경북도
2	성○○	여	40대중	2008년	중국(거주)	함경북도
3	조○○	남	60대초	2009년	중국	함경북도
4	김○○	여	50대후	2004년	중국(거주)	평양
5	윤○○	여	40대중	2007년	중국, 몽골	함경북도
6	김○○	여	30대초	2002년	중국(거주), 몽골	함경북도
7	이○○	남	50대후	2006년	중국(거주)	함경북도
8	손○○	여	50대중	2011년	중국, 태국	강원도
9	정○○	여	50대초	2005년	중국	함경북도
10	남○○	남	20대후	2001년	중국(거주)	함경북도
11	김○○	남	60대후	2007년	중국	함경북도
12	고○○	여	50대초	2010년	중국(거주)	양강도

· 양적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



▪ 양적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수	응답률(%)
성별	남자	44	28.2
	여자	112	71.8
연령	20대	29	18.6
	30대	49	31.4
	40대	43	27.6
	50대	16	10.3
	60대 이상	19	12.2
결혼상태	미혼	41	26.5
	기혼	77	49.7
	기타(이혼/별거포함)	37	23.9
동거형태	독신	40	25.6
	본인+자녀	35	22.4
	부부만	24	15.4
	부부+자녀	43	27.6
	기타	14	9.0
현재직업유무	있음	67	43.5
	없음	87	56.5

▪ 양적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구분		빈도수	응답률(%)
현재 직업	자영업	9	5.8
	판매/서비스업	6	3.9
	생산/기술업	23	14.9
	단순노무	18	11.7
	일반/사무	11	7.1
	주부	27	17.5
	학생	19	12.3
	무직	41	26.6
월평균 소득	50만원미만	38	24.7
	100만원미만	34	22.1
	150만원미만	32	20.8
	200만원미만	26	16.9
	250만원미만	13	8.4
	250만원이상	11	7.1
남한체류 기간	3년 이하	45	28.8
	4~7년 이하	62	39.7
	8년 이상	49	31.4
합 계		156	100.0

## 04 | 연구결과 및 요약



### 가정생활영역

- 남한생활적응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해체나 결합 경험 증가 → 남성들의 새로운 남한체제에 대한 두려움 및 부적응 현상 증가 → 여성의 일방적 희생과 인내 강요
- 남한에서의 결혼 → 경제적 곤궁함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 큼
- 부모세대의 책임감 & 심리적 부담 → 자녀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방해 요소 ↑



### 경제생활영역

- 경제활동의 제약 및 한계 증대 → 취업의 어려움 및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 경제생활 적응의 어려움 가중시키는 조건 → 높은 노동강도의 적응력 ↓
- 40대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높음 → 안정적 소득창출 기회 제한 & 임시방편



### 소비생활영역

- 자본주의 사회 경험 부족 → 거래방식의 선택 및 낮은 소비생활 역량 보유
- 초기 정착기를 벗어난 장기 생활자로 표집된 표본의 특성 반영 → 과시/중등소비 성향의 완화 및 절제된 소비경험을 지속함
- 지속적인 의료비 및 병원비의 지출 ↑ → 가정내 자원배분 왜곡현상 심화



### 사회문화생활영역

- 연령 ↓, 직업활동 ↑ →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
- 남한생활에 있어서의 이질감 및 차별적 시선 경험 → 북한역량의 사용 및 남한 언어 사용의 부자연스러움을 극복하기 어려움 → 남한사람들과의 접촉 기회 제한적이며, 강한성격 및 서툰 감정 표현으로 내외부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남한의 체류기간의 증가(4~7년거주) →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분리형이나 주변형의 비중이 높음



### 정보생활영역

- 연령이 낮을수록 유희적 정보 활용의 이용 정도가 높음 (기본적 정보활용에 비해)
- 정보기기 보유율은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정보활용에 대한 정보격차 증가



### 건강생활영역

-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거나 실제 우울증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남 → 복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그리움, 미안함 등의 복합적 원인
- 대체로 극단-부정적 사고의 인지적 스트레스 반응을 보임

## 05 | 정책적 제언

### 1ST 제언

- **경제적 어려움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무직, 실업, 저소득 등의 경제적 곤궁함 → 남한생활의 부적응 속도를 가속화 시킴
  - 취업을 통한 안정적 소득원의 확보를 장려하는 기반 시스템의 마련 필요
  - 거주지도우미 제도 + 직업상담 및 매칭 서비스 부가 → 거주 기간별, 관련 교육의 숙련정도별 등의 평가기준의 제정을 통한 맞춤형 직업 제공 시스템 기반 확충 필요증가
  - 기존 상담업무에 단순한 직업상담의 업무 가중 →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의 배정 없이 진행 될 경우 효과가 미비할 것임
  - 유휴노동력활용, 안정적 노동기회의 확보 및 유지 → 가정/사회/소비생활의 시너지 창출

## 2<sup>nd</sup> 제언

- **현행 지역하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변화 및 질적 향상 필요**
  - 무작위로 진행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프로그램 적용으로 개별 지역하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여부가 안정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임
  - 남한사회의 성공적인 적응 사례 발굴 및 홍보 → 해당 프로그램의 집중 지원 및 육성(발굴)
  - 실제 자격증 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에 노출빈도 증가 → 남한 생활 적응 속도와 역량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오게 됨

## 3<sup>rd</sup> 제언

- **새로운 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소비자역량 강화 및 지원 필요**
  - 일반적인 거래 및 상품 선택에 대한 (절대적)소비자지식의 축적 기회 제공 필요
  - 소비자소외 현상이 확대 및 심화되지 않도록 경계

## 4<sup>th</sup> 제언

- **인천거주 북한이탈주민 내 취약계층의 선별을 통한 집중 지원 필요**
  - 취약계층: 연령이 낮거나 높은 이탈주민, 남한거주기간 4~7년정도
  - 인천거주 북한이탈주민 내 취약계층을 분류된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의 제공 및 차별적인 지원체제의 확립 & 집중적 직업교육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 필요성 증가
    - 지자체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는 교육환경 및 정책 배려 확대
    - 삶의 만족도 및 남한생활 적응도의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Q/A 고맙습니다

**V. 양안의 관계적 통합지수에 관한 연구 :  
1989~2016**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박 우

# 양안의 관계적 통합지수에 관한 연구: 1989~2016<sup>1)</sup>

박우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 목차

1. 서론
  2. 자료와 방법
  3.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4. 사회문화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5. 경제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6. 결론
- [참고문헌]  
[부록]
- 

## 1. 서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개발한 “남북통합지수”가 10년 여의 누적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적 통합을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 하였다. 하지만 이 지수를 통한 남북한의 통합양상을 더욱 입체적으로 설명 및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그 비교의 대상으로 체제의 분단과 통일을 이미 경험한 독일과 베트남, 통일을 지향하는 체제로서 중국-대만(이하 양안) 등이 주목받았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비교사회과학이다”라는 명제에 근거하여 남북한의 통합 양상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비교연구는 “동아시아 통합 모델”의 개념화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의 내용은 양안의 통합지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양안, 즉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대륙)”과 경

---

1) 본 연구보고서는 미완성의 초고이다.

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중화민국(이하 대만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적 통합의 양상을 남북통합지수의 틀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주지하다시피 남북통합지수는 제도적 통합, 관계적 통합으로 나뉘었고 두 통합의 “합”이 구조적 통합을 이룬다(김병로 외, 2007; 김병연 외, 2009). 제도적 통합은 통합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기초했다. 관계적 통합은 여러 가지 양적, 질적 관계 변수들에 기초했다. 제도적 통합은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더 많이 필요로 하였고, 관계적 통합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요구가 더 엄밀하게 요구되었다. 따라서 양안 통합지수 산출은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제도적 통합보다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산출 가능한 관계적 통합의 양상을 정리한다.

다른 한편 양안의 관계적 통합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자료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남북통합지수는 10년 전에 개발되었지만 개발 초기에 이미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지수의 시작점을 1988년으로 옮겨갔다. 따라서 본 연구도 가급적 1989년을 시작점으로 설정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양안의 관계가 본격적인 해빙모드로 전환된 것 역시 1980년대 말이라는 점, 그리고 양적, 질적 자료 역시 1980년대 말부터 정리 및 공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89~2016년 양안의 관계적 통합지수를 측정한다.

## 2. 자료와 방법

### 1) 자료의 출처

양안의 관계적 통합 지수는 상당한 규모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이 자료는 크게 객관적인 양적 자료, 이벤트 자료, 연구자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양적 자료와 이벤트 자료에 대해 살펴보겠다.

양안 당국은 적극적으로 양안 관계에 관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양안 관계를 전담하는 기관에는 대륙의 “국무원대만사무관공실(国务院台湾事务办公室, 이하 ‘국대판(国台办)’)”과 대만의 “행정원대륙위원회(行政院大陆委员会, 이하 ‘육위회(陆委会)’)”, 이 두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대륙의 “사단법인해협양안관계협회(社团法人海峡两岸关系协会, 이하 ‘해협회(海协会)’)”와 대만의 “재단법인해협교류기금회(财团法人海峡交流基金会, 이하 ‘해기회(海基会)’)”가 있다. 양안의 공식 통계와 이벤트 자료는 “국대판”과 “육위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해협회”와 “해기회” 역시 두 협회가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 등의 이벤트와 통계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쌍의 네 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가장 많이 의존하였다.

하지만 양적 데이터 중 일부는 이 네개 기관 모두에서 수집할 수 없었다. 따라서 UNDP, WB 등 국제기구의 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외에 부분적으로 누락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연구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 2차문헌을 참조했다.

## 2) 자료의 시계열성과 일관성 문제

본 연구가 측정하는 관계적 통합지수는 1989년부터 2016년이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는 시계열적이고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양안 관계통합의 측정에 필요한 자료들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고 파편적으로 부분적 연도의 자료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자료를 시계열적인 분석틀에 대입하기 전에 방법론적으로 먼저 이 자료들에 대한 교차검증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발적으로 분산된 자료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시계열 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필히 이 자료들의 출처를 모두 확인하고 검증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가능한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각 기관(또는 기구)이 공개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 자료들이 양안의 정치, 경제, 사회 부분 관계적 통합 지수의 측정에 얼마나 사용가능한지를 정리해 보았다. 결과 대만의 “육위회”가 전체 변수의 약 90% 가까이를 공개하고 있었다. “육위회”는 대만측 자료뿐만 아니라 대륙측 통계도 함께 공개하고 있었다. 또한 “육위회”는 대만통계당국과 자료가 연동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공식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 “국대관”을 통해서도 부분적인 자료들만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공개된 자료의 총량만 따지면 양안 관계적 통합 지수의 변수 중 약 40% 정도는 “국대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전혀 시계열적이지 않고 자료의 분류 또한 굉장히 성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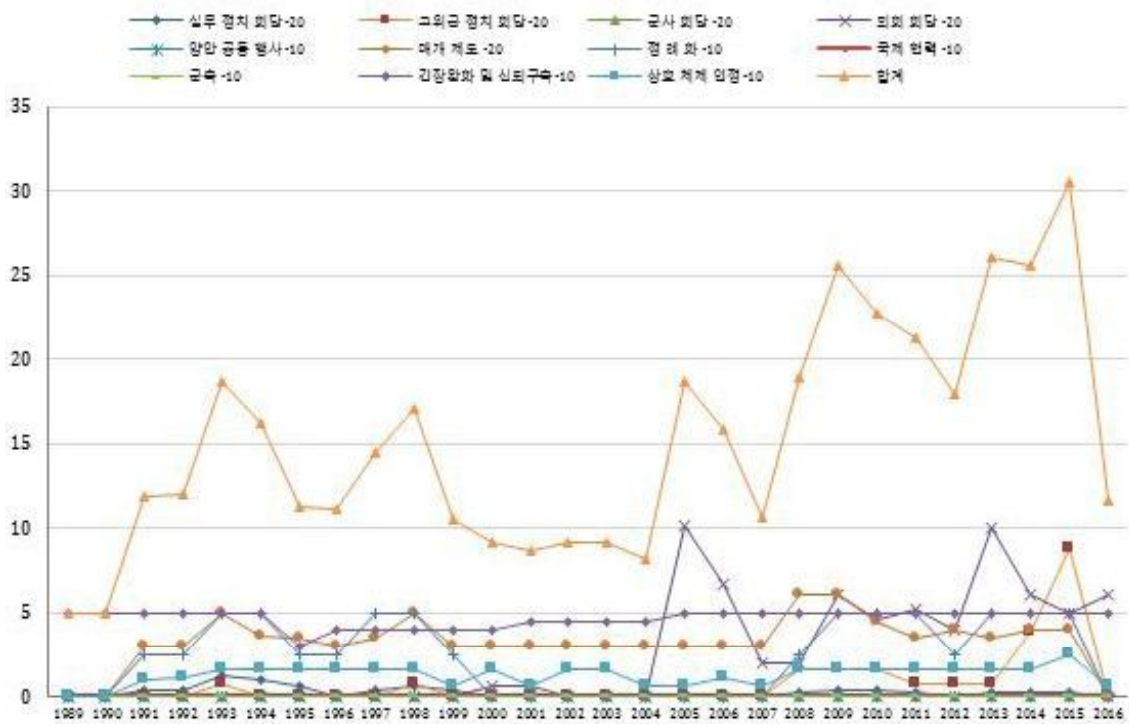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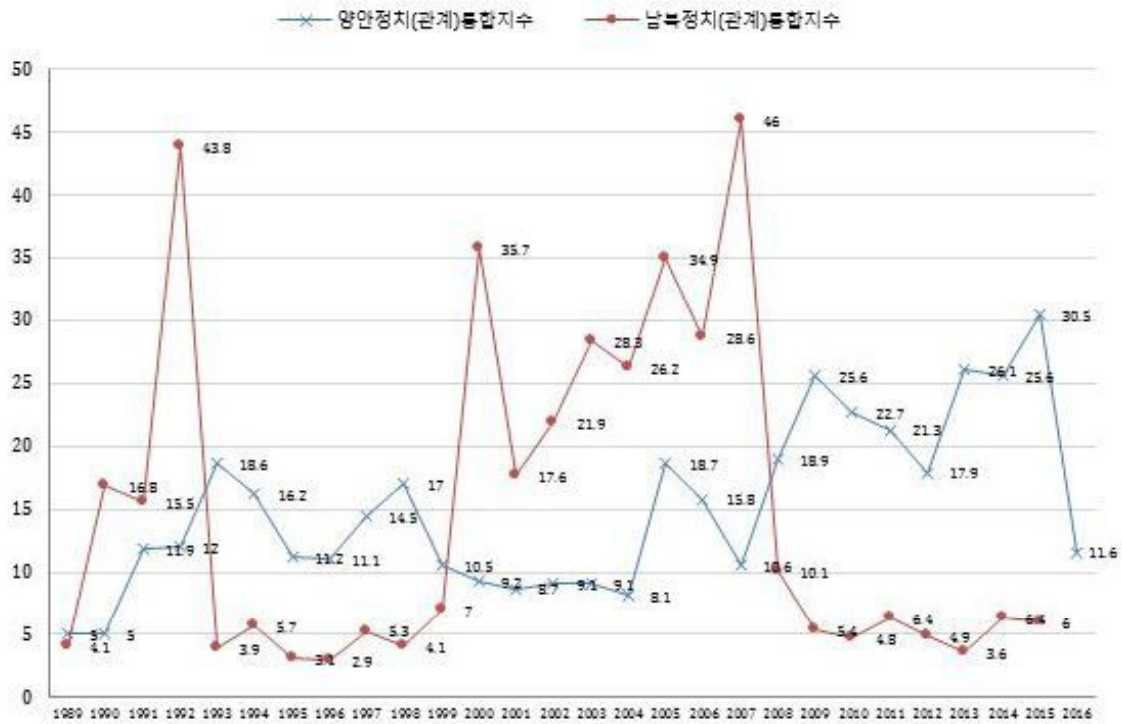
UNDP, WB 등의 국제기구 자료는 부분적인 경제적 통합지수를 산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주권국가”로 인정되지 않기에 대만의 지표는 국제기구에서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국제기구는 대만을 “경제체”로 분류하여 부분적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 역시 시계열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서 사용이 불가능했다.

본 연구는 대만 “육위회”와 산하 “해기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기타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시계열성도 확보하고 자료의 편향성도 일관되게 함으로써 해석적 편차를 줄일수 있다고 보았다.

### 3. 정치 관계적 통합지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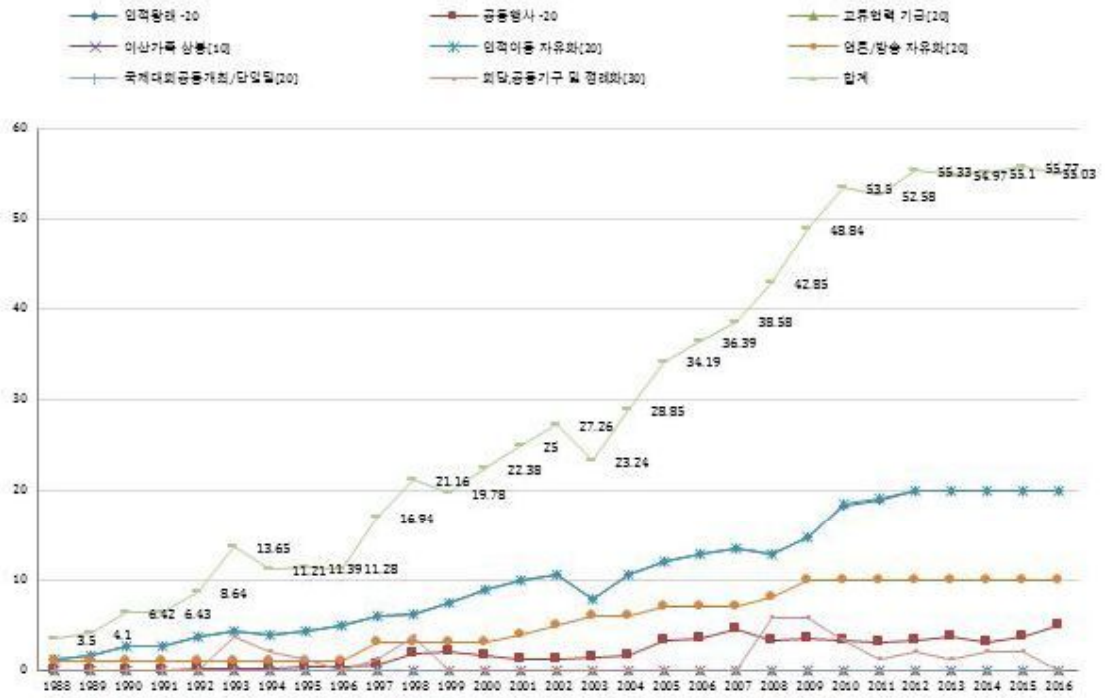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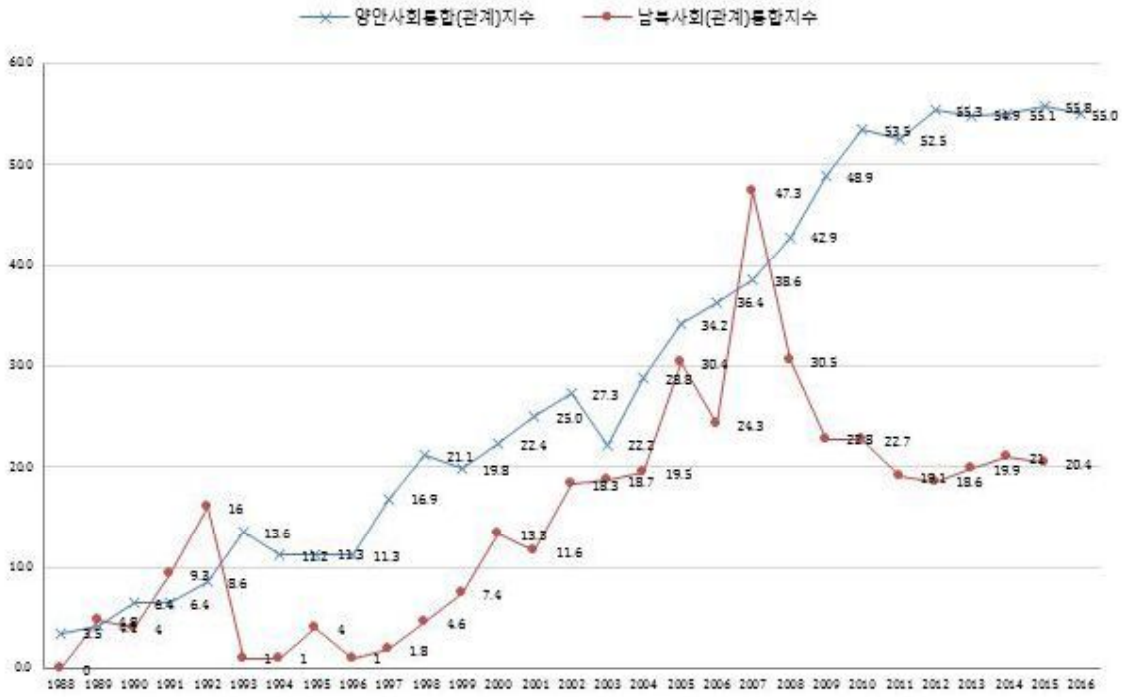
〈표 3-12-1〉 정치영역 관계통합지수 종합

연도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160)											합계
	실무 정치 회담 (20)	고위급 정치 회담 (20)	군사 회담 (20)	의회 회담 (20)	양안 공동 행사 (10)	매개 제도 (20)	정 례 화 (10)	국제 협력 (10)	군축 (10)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0)	상호 체제 인정 (10)	
1989	0	0	0	0	0	0	0	0	0	5	0	5
1990	0	0	0	0	0	0	0	0	0	5	0	5
1991	0.4	0	0	0	0	3	2.5	0	0	5	1	11.9
1992	0.4	0	0	0	0	3	2.5	0	0	5	1.1	12
1993	1.2	0.8	0	0	0	5	5	0	0	5	1.6	18.6
1994	1	0	0	0	0	3.6	5	0	0	5	1.6	16.2
1995	0.6	0	0	0	0	3.5	2.5	0	0	3	1.6	11.2
1996	0	0	0	0	0	3	2.5	0	0	4	1.6	11.1
1997	0.4	0	0	0	0	3.5	5	0	0	4	1.6	14.5
1998	0.6	0.8	0	0	0	5	5	0	0	4	1.6	17
1999	0.4	0	0	0	0	3	2.5	0	0	4	0.6	10.5
2000	0	0	0	0.6	0	3	0	0	0	4	1.6	9.2
2001	0	0	0	0.6	0	3	0	0	0	4.5	0.6	8.7
2002	0	0	0	0	0	3	0	0	0	4.5	1.6	9.1
2003	0	0	0	0	0	3	0	0	0	4.5	1.6	9.1
2004	0	0	0	0	0	3	0	0	0	4.5	0.6	8.1
2005	0	0	0	10.1	0	3	0	0	0	5	0.6	18.7
2006	0	0	0	6.7	0	3	0	0	0	5	1.1	15.8
2007	0	0	0	2	0	3	0	0	0	5	0.6	10.6
2008	0.2	1.6	0	2	0	6	2.5	0	0	5	1.6	18.9
2009	0.4	1.6	0	6	0	6	5	0	0	5	1.6	25.6
2010	0.4	1.6	0	4.6	0	4.5	5	0	0	5	1.6	22.7
2011	0.2	0.8	0	5.2	0	3.5	5	0	0	5	1.6	21.3
2012	0	0.8	0	4	0	4	2.5	0	0	5	1.6	17.9
2013	0.2	0.8	0	10	0	3.5	5	0	0	5	1.6	26.1
2014	0.2	3.8	0	6	0	4	5	0	0	5	1.6	25.6
2015	0.2	8.8	0	5	0	4	5	0	0	5	2.5	30.5
2016	0	0	0	6	0	0	0	0	0	5	0.6	11.6



#### 4. 사회문화영역 관계적 통합지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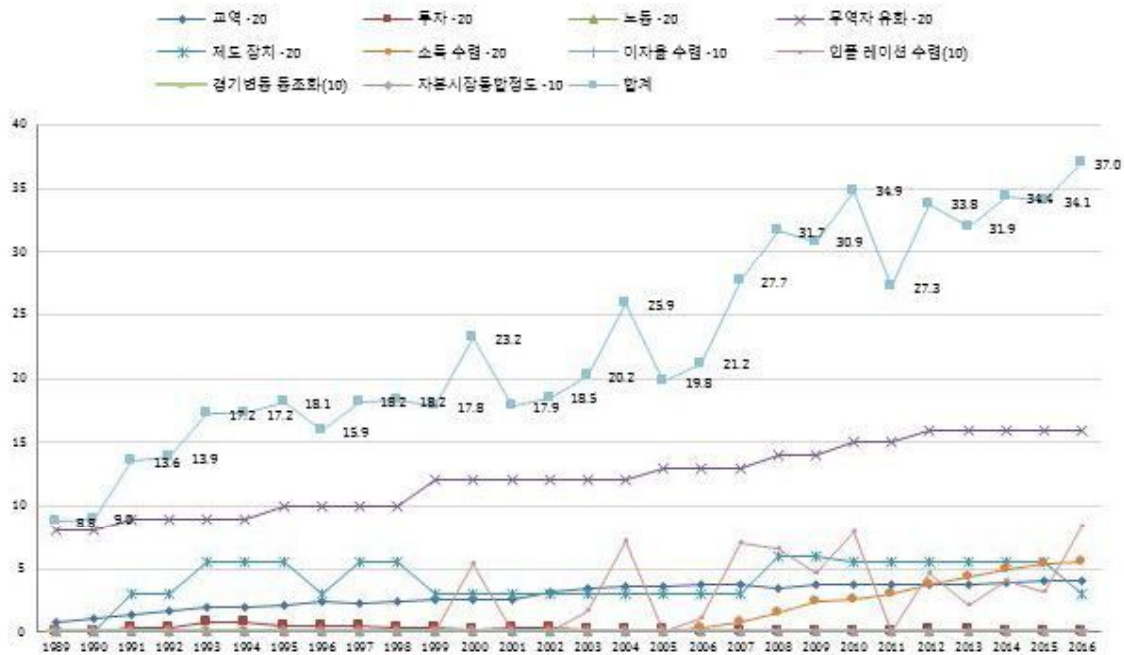
연도	사회문화부분 관계적 통합(160)								합계
	인적왕래(20)	공동행사(20)	교류협력기금(20)	이산가족상봉(10)	인적이동자유화(20)	언론/방송자유화(20)	국제대회공동개최/단일팀(20)	회담·공동기구 및 정례회(30)	
1988	1.25	0	0	—	1.25	1.0	0	0	3.5
1989	1.55	0	0	—	1.55	1.0	0	0	4.1
1990	2.71	0	0	—	2.71	1.0	0	0	6.4
1991	2.70	0.03	0	—	2.70	1.0	0	0	6.4
1992	3.77	0.10	0	—	3.77	1.0	0	0	8.6
1993	4.36	0.13	0	—	4.36	1.0	0	3.8	18.3
1994	3.97	0.17	0	—	3.97	1.0	0	2.1	12.9
1995	4.38	0.33	0	-	4.38	1.0	0	1.3	12.5
1996	4.95	0.37	0	—	4.96	1.0	0	0	11.3
1997	6.05	0.53	0	—	6.06	3.0	0	1.3	18.1
1998	6.21	1.93	0	—	6.22	3.0	0	3.8	25.8
1999	7.38	2.00	0	—	7.40	3.0	0	0	19.8
2000	8.88	1.60	0	—	8.90	3.0	0	0	22.4
2001	9.87	1.27	0	—	9.86	4.0	0	0	25.0
2002	10.52	1.23	0	—	10.51	5.0	0	0	27.3
2003	7.90	1.47	0	—	7.87	6.0	0	0	22.2
2004	10.63	1.60	0	—	10.62	6.0	0	0	28.8
2005	11.94	3.30	0	—	11.95	7.0	0	0	34.2
2006	12.95	3.47	0	—	12.97	7.0	0	0	36.4
2007	13.52	4.50	0	—	13.56	7.0	0	0	38.6
2008	12.87	3.27	0	—	12.91	8.0	0	5.8	49.9
2009	14.68	3.53	0	—	14.83	10.0	0	5.8	55.9
2010	18.34	3.33	0	—	18.53	10.0	0	3.3	57.0
2011	18.98	3.17	0	—	19.13	10.0	0	1.3	53.7
2012	20.00	3.23	0	—	20.00	10.0	0	2.1	57.7
2013	20.00	3.67	0	—	20.00	10.0	0	1.3	56.1
2014	20.00	3.00	0	—	20.00	10.0	0	2.1	57.4
2015	20.00	3.67	0	—	20.00	10.0	0	2.1	58.1
2016	20.00	5.03	0	—	20.00	10.0	0	0	55.0



## 5. 경제분야 관계적 통합지수 종합

연도	경제부문 관계적 통합(160점)										합계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자 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율 수렴 (10)	인플 레이션 수렴(10)	경기변 동 동조화(10)	자본시 장통합 정도 (10)	
1989	0.8	0	0	8	0	0	0	0	0	0	8.8
1990	1.0	0	0	8	0	0	0	0	0	0	9
1991	1.3	0.26	0	9	3	0	0	0	0	0	13.6
1992	1.6	0.29	0	9	3	0	0	0	0	0	13.9
1993	1.9	0.84	0	9	5.5	0	0	0	0	0	17.2
1994	2.0	0.72	0	9	5.5	0	0	0	0	0	17.2
1995	2.1	0.52	0	10	5.5	0	0	0	0	0	18.1
1996	2.4	0.49	0	10	3	0	0	0	0	0	15.9
1997	2.3	0.41	0	10	5.5	0	0	0	0	0	18.2
1998	2.4	0.34	0	10	5.5	0	0	0	0	0	18.2
1999	2.5	0.29	0	12	3	0	0	0	0	0	17.8
2000	2.6	0.23	0	12	3	0	0	5.4	0	0	23.2
2001	2.7	0.27	0	12	3	0	0	0	0	0	18.0
2002	3.2	0.33	0	12	3	0	0	0	0	0	18.5
2003	3.4	0.24	0	12	3	0	0	1.6	0	0	20.2
2004	3.6	0.19	0	12	3	0	0	7.1	0	0	25.9
2005	3.6	0.11	0	13	3	0.1	0	0	0	0	20.0
2006	3.7	0.09	0	13	3	0.4	0	1	0	0	21.2
2007	3.8	0.06	0	13	3	0.8	0	7	0	0	27.7
2008	3.5	0.05	0	14	6	1.5	0	6.6	0	0	31.7
2009	3.8	0.05	0	14	6	2.4	0	4.6	0	0	30.9
2010	3.8	0.07	0	15	5.5	2.6	0	7.9	0	0	34.9
2011	3.7	0.05	0	15	5.5	3.0	0	0	0	0	27.3
2012	3.7	0.12	0	16	5.5	3.8	0	4.7	0	0	33.8
2013	3.8	0.11	0	16	5.5	4.4	0	2.1	0	0	31.9
2014	3.9	0.10	0	16	5.5	4.9	0	4	0	0	34.4
2015	4.0	0.07	0	16	5.5	5.4	0	3.1	0	0	34.1
2016	4.0	0.07	0	16	3	5.6	0	8.3	0	0	37.0

교역부문은 평균값임.



## 6. 결론

양안의 정치, 사회문화, 경제 부문 관계적 통합지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관계적 통합지수에 반영된 변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조사를 거쳐 수집한 자료를 계량화하여 기입한 변인

△: 자료수집이 안되어 “0” 으로 기입한 변인

X: 남북통합지수의 틀에 적용될 수 없는 변인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지수는 총 160점으로 구성되었는데 양안의 경우 “군축(10점)” 변인은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0” 으로 입력하였다. 그 외 다른 변인들은 모두 계량화 하여 상대점수를 입력하였다. 따라서 양안의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지수는 총점 160점에서 150이 되겠다.

〈표 6-1〉 양안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 변인

		양안	남북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 (160)	실부정치회담 (20)	0	0
	고위급정치회담 (20)	0	0
	군사회담 (20)	0	0
	의회회담 (20)	0	0
	공동행사 (10)	0	0
	매개제도 (10)	0	0
	정례화 (10)	0	0
	국제협력 (10)	0	0
	군축 (10)	△	0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0)	0	0
상호체제인정 (10)	0	0	
총점		150	160

다음 사회문화 부문의 변인을 보면 양안의 “교류협력기금(20)” 은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역시 “0” 으로 기입하였다. “이산가족상봉(10)” 은 양안에 적용하기 어려운 변인임으로 제외해야 하지만 일단 모두 “0” 으로 기입하였다. 따라서 사회문화 부문 관계적 통합은 총점 160점 중 130점으로 산출되었다.

<표 6-2> 양안 사회문화부문 관계적 통합 변인

		양안	남북
사회문화부문 관계적 통합 (160)	인적왕래 (20)	0	0
	공동행사 (20)	0	0
	교류협력기금 (20)	Δ	0
	이산가족상봉 (10)	X	0
	인적이동자유화 (20)	0	0
	언론/방송의 자유화 (20)	0	0
	국제대회공동개최/ 단일팀 (20)	0	0
	회담 공공기구 및 정례화 (30)	0	0
총점		130	160

마지막 경제부문의 경우 양안은 “노동(20)” 변인, “이자율 수렴(10)”, “경기변동 동조화(10)”, “자본시장 통합 정도(10)” 등 변인 관련 자료는 수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양안의 경제부문 관계적 통합 지수는 총점 160점의 110점이 된다. 남북의 경우 “이자율 수렴(10)”, “인플레이션 수렴(10)”, “경기변동 동조화(10)”, “자본시장 통합 정도(10)” 등 변인 역시 북한측 자료의 “부재” 로 인하여 일단 모두 “0” 으로 기입하였다.

<표 6-3> 양안 경제부문 관계적 통합 변인

		양안	남북
경제부문 관계적 통합 (160)	교역 (20)	0	0
	투자 (20)	0	0
	노동 (20)	Δ	0
	무역자유화 (20)	0	0
	제도장치 (20)	0	0
	소득 수렴 (20)	0	0
	이자율 수렴 (10)	Δ	“0”
	인플레이션 수렴 (10)	0	“0”
	경기변동 동조화 (10)	Δ	“0”
	자본시장 통합 정도 (10)	Δ	“0”
총점		110	120 + “40”

이 변인들에 기초하여 산출한 양안의 관계적 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6-1] 양안 정치, 사회문화, 경제 부분 관계적 통합의 단계



정치 부분의 관계적 통합지수는 1980년대 말 양안의 정치관계의 호전에 힘입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정치통합지수는 “정치적 대화·회담 등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의 0단계에서 1991년에는 “대화·회담 등 교류가 있으나 빈도 및 비중이 낮음”의 1단계로 상승하였다. 이 수준은 1999년까지 이어졌다. 이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양안 정치통합지수는 다시 0단계로 하락하여 정치적 냉각기를 보였다. 2005년 이후 다시금 1단계로 상승하였고 2008년에는 “대화·회담 등 교류의 빈도·비중이 높음”의 단계인 2단계로 상승했다. 2002년 1단계로 하락한 후 2015년까지 2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6년 현재 다시 1단계로 하락했다.

사회문화 부분의 관계적 통합지수를 보면 1992년까지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인 0단계에 있었다. 1993년 사회문화 관계통합지수는 1단계인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낮음(제한적 범위에서 진행)”의 수준으로 상승했다. 1단계 수준은 1998년에 2단계인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높음”의 단계로 상승했다가 2000년부터는 본격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8년 사회문화 통합지수는 “정기적인 교류, 공동 협의기구(매개제도) 구성”의 3단계로 상승했고 2016년 현재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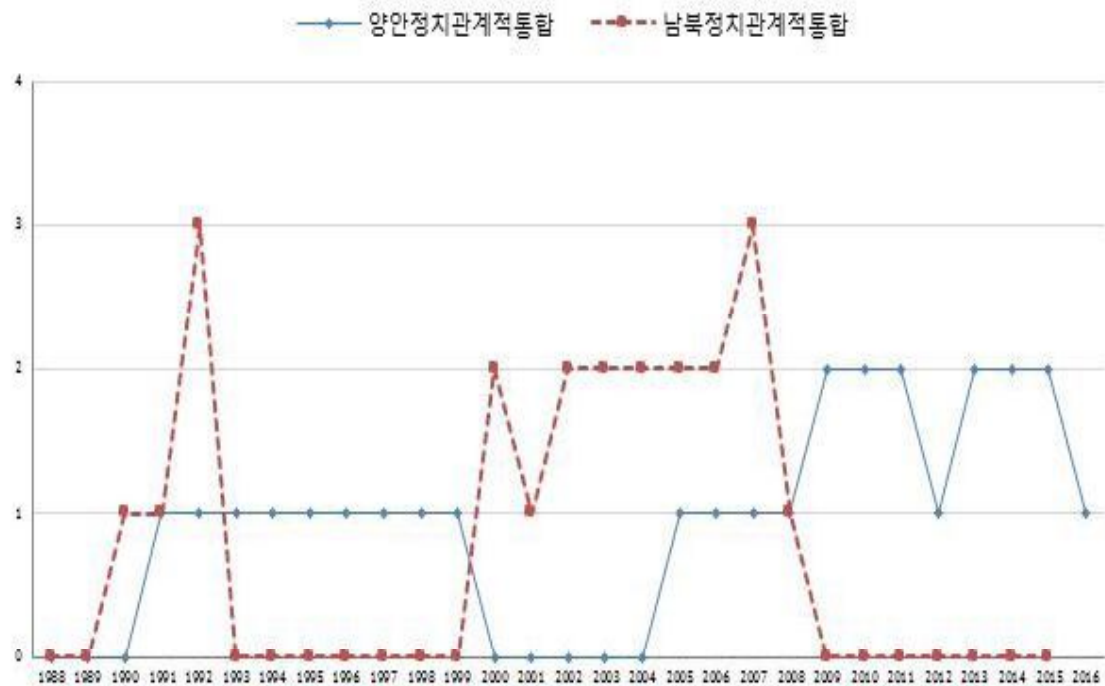
경제 부분의 관계적 통합지수를 보면 1990년까지 “물적 자원의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인 0단계였다. 그러다가 1991년부터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이 낮음”의 1단계로 상승했다. 1단계 수준은 2002년까지 이어졌다. 그 중 2000년에 이 지수는 2단계에 해당하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이 높음”의 수준으로 상승했다. 2003년부터 경제 관계적 통합지수는 2007년까지 2단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부터 “물적 자원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자원(주로 매개적 제도)이 마련됨”의 3단계로 상승한다. 2011년에 이 2단계로 하락하긴 했으나 2016년 현재까지 3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상 양안의 정치, 사회문화, 경제 부문 관계적 통합수준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첫째, 세 부문 관계적 통합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정치적 통합의 수준이 낮았고 지수의 등락이 컸다. 셋째, 경제부문과 사회문화부문의 상관관계(0.94)가 정치와 경제(0.73), 정치와 사회(0.77)보다 컸다.

다음 양안과 남북의 관계적 통합단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6-2] 양안과 남북한의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의 단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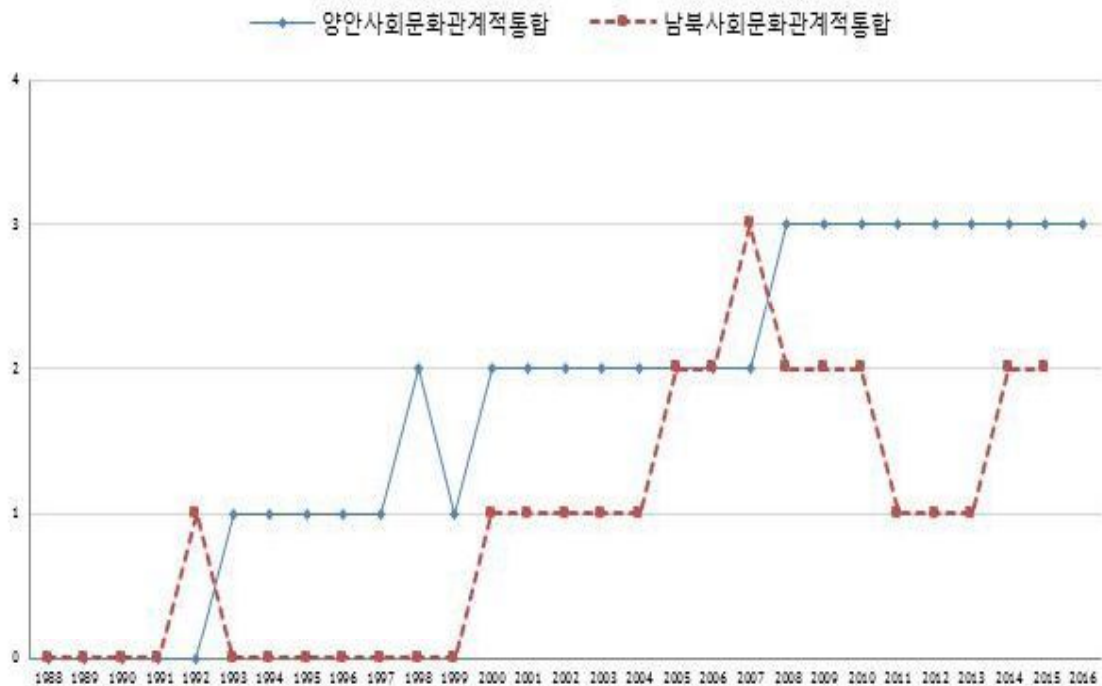


정치 관계적 통합의 경우 흥미로운 차이가 보인다. 1990년대 양안의 정치관계통합이 1단계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 남북은 비록 1992년에 3단계로 상승했지만 금방 0단계 수준으로 하락하여 1999년까지 이어졌다. 그 뒤 양안이 오히려 0단계로 하락하였다가 2004년 1단계 수준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남북은 2단계를 유지하다가 2007년에는 3단계로 상승하기도 했다. 이후 남북은 급락하여 0단계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양안은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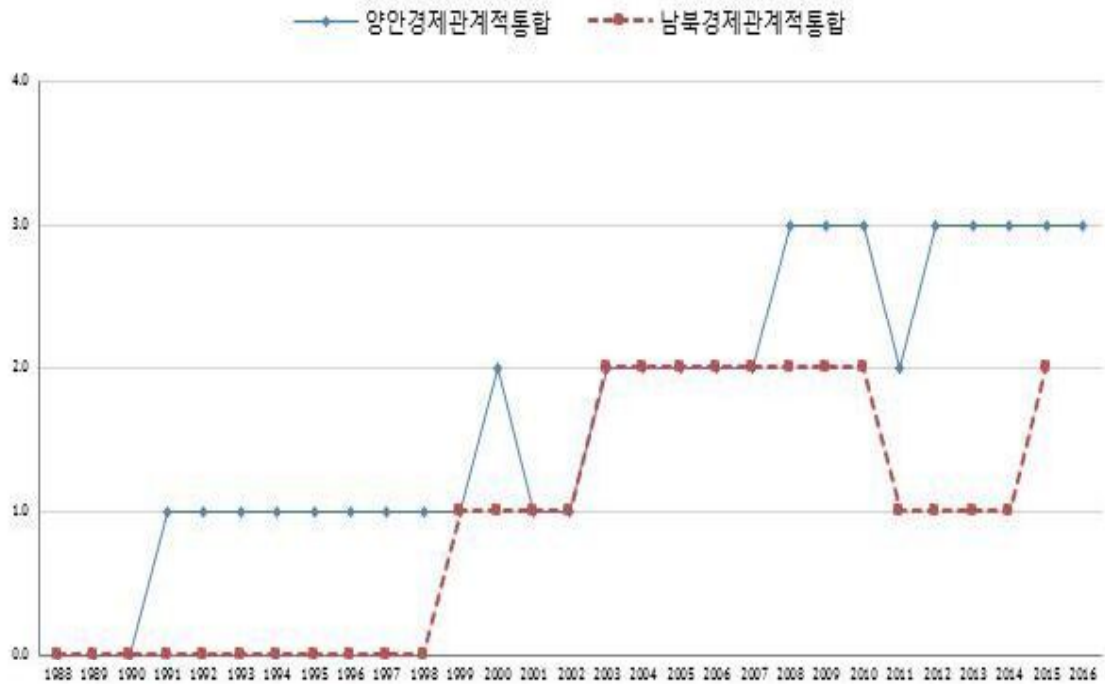
히려 1단계에서 2단계로 상승하여 그 수준을 2015년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남북의 정치 통합 지수가 상승할 때 양안이 하락하고, 양안이 상승할 때 남북이 하락하고 있었다.

양안의 사회문화부문 관계적 통합지수는 남북에 비해 좀 더 일찍이 1단계로 상승하였고 이후 1998년과 1999년을 전후하여 2단계로 상승했다. 남북한은 1999년까지 주로 0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단계 수준으로 상승했고 그 이후 2단계, 심지어 2007년에는 3단계로 상승했다. 남북한이 3단계로 상승할 때 양안도 3단계로 상승한다. 그런데 양안은 2016년 현재까지 3단계 수준을 유지한데 반해 남북한은 2단계와 1단계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정리하면 1980년대 이후부터 양안이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 양안이나 남북 모두 꾸준한 사회문화의 관계적 통합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을 분기점으로 양안은 통합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남북은 하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6-3] 양안과 남북의 사회문화부문 관계적 통합의 단계 비교



[그림 6-4] 양안과 남북의 경제부문 관계적 통합의 단계 비교



마지막으로 양안과 남북의 경제 관계적 통합지수를 살펴보겠다. 양안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여 동안 1단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0년에 2단계로 잠깐 상승하는 양상이 보이나 대체로 1단계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남북한은 0단계에서 1990년대 말에 1단계로 상승하여 양안과 비슷한 수준의 관계적 통합을 경험한다. 양안과 남북한은 모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의 통합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그 이후 양안은 3단계로 상승하여 2016년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북한은 2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가 1단계로 하락하기까지 한다. 2005년에는 2단계를 회복하였다. 정리하면 양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의 등급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남북한 모두의 경제관계적 통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비슷한 통합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 2008년을 기점으로 양안과 남북한의 통합 수준은 갈렸다.

[참고문헌]

김병연·박명규·김병로·정은미, 2009,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병로·김병연·박명규·정은미, 2007, “남북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박명규·김병연·김병로·정은미, 2013, “남북통합지수: 2008~2013 변동과 함의”,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정근식·김병연·김병로·정은미·장용석, 2016, “남북통합지수 2016”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財団法人海峡交流基金会 (<http://www.sef.org.tw>)

两岸大事记 ([https://www.mac.gov.tw/Content\\_List.aspx?n=ABBF62618F53F8DE](https://www.mac.gov.tw/Content_List.aspx?n=ABBF62618F53F8DE))

海峡两岸关系概要 ([https://www.mac.gov.tw/Content\\_List.aspx?n=ABBF62618F53F8DE](https://www.mac.gov.tw/Content_List.aspx?n=ABBF62618F53F8DE))

中华民国行政院大陆委员会 (<https://www.mac.gov.tw>)

中共中央台湾办公室·国务院台湾办公室/涉台法律规范  
 ([http://www.gwytb.gov.cn/guide\\_rules/](http://www.gwytb.gov.cn/guide_rules/))

中华民国统计咨询网  
 ((<http://www.stat.gov.tw/ct.asp?xItem=37407&CtNode=3564&mp=4>))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

# 양안의 관계적 통합지수에 관한 연구: 1989-2016

박 우  
한성대학교

## 목차

1. 서론
2. 자료와 방법
3.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4. 사회문화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5. 경제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6. 결론

## 1. 서론

- 연구배경: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남북한 통합지수.

“통합지수”의 확장성

- 연구목적: “동아시아 통합모델” – 비교연구
- 연구내용: 1989-2016년.

중국대륙-대만지역(양안) 관계적 통합지수 측정

## 2. 자료와 방법(자료의 출처)

대만	대륙	기타
행정원대륙위원회 (行政院大陸委員會)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國務院台灣事務辦公室)	UN, WB, OECD 등
재단법인해협교류기금회 (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	사단법인해협양안관계협회 (社團法人海峽兩岸關係協會)	
대만 통계	중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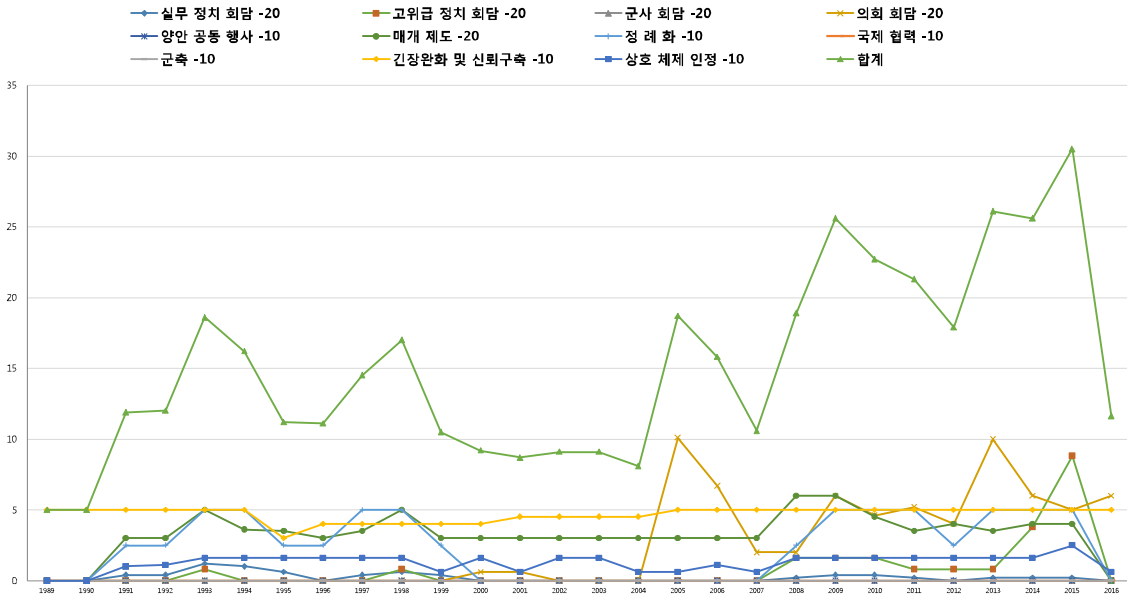
## 2. 자료와 방법(자료의 시계열성과 일관성의 문제)

대만	대륙	UN, WB, OECD 국제기구
1. 전체 지수의 90% 사용가능 2. 시계열 자료로 사용가능 3. 접근 가능성 높음 4. 교차 점검 가능	1. 전체 지수의 40% 사용 가능 2. 분산적이고 산발적 자료 3. 접근 가능성이 낮음 4. 교차 점검 불가능	1. 부분적 경제지표 사용가능 2. 중화인민공화국 자료 공개 3. 중화민국(대만) 자료 없음 4. "경제체"로서 대만 자료 있음
주요 자료	보완 자료	보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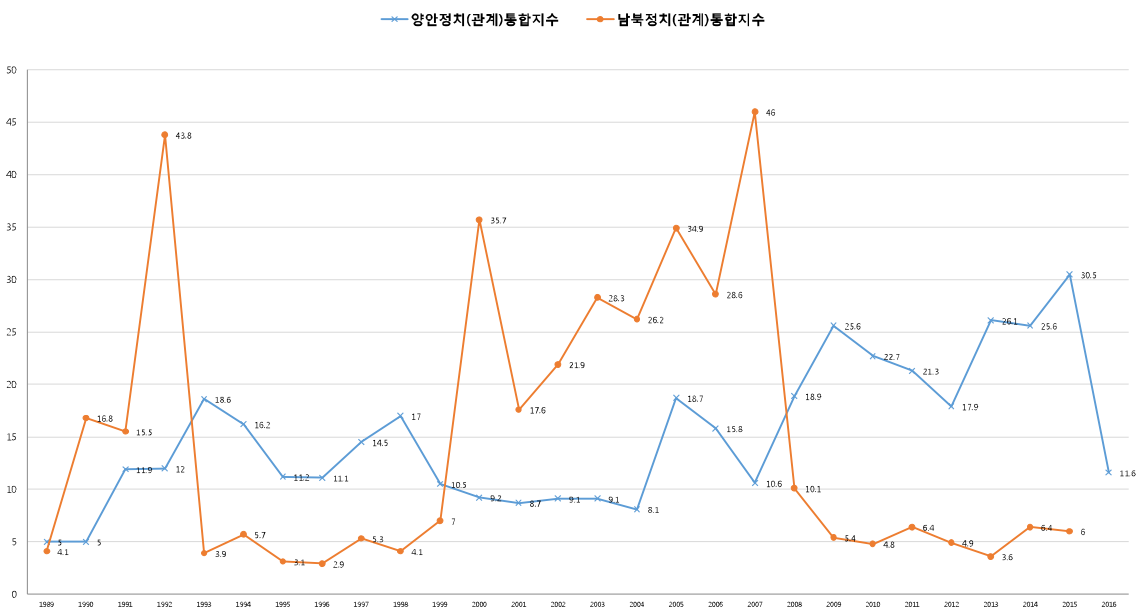
## 3.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연도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합계
	실무정치 회담(0)	고위급정치 회담(0)	군사회담(0)	의외회담(0)	양안공동 행사(0)	매개 제도(0)	정례화(0)	국제협력(0)	군축(0)	간담원화 및 신뢰구축(0)	상호체제 인정(0)	
1989	0	0	0	0	0	0	0	0	0	5	0	5
1990	0	0	0	0	0	0	0	0	0	5	0	5
1991	04	0	0	0	0	3	25	0	0	5	1	119
1992	04	0	0	0	0	3	25	0	0	5	11	12
1993	12	08	0	0	0	5	5	0	0	5	16	186
1994	1	0	0	0	0	36	5	0	0	5	16	162
1995	06	0	0	0	0	35	25	0	0	3	16	112
1996	0	0	0	0	0	3	25	0	0	4	16	111
1997	04	0	0	0	0	35	5	0	0	4	16	145
1998	06	08	0	0	0	5	5	0	0	4	16	17
1999	04	0	0	0	0	3	25	0	0	4	06	105
2000	0	0	0	06	0	3	0	0	0	4	16	92
2001	0	0	0	06	0	3	0	0	0	45	06	87
2002	0	0	0	0	0	3	0	0	0	45	16	91
2003	0	0	0	0	0	3	0	0	0	45	16	91
2004	0	0	0	0	0	3	0	0	0	45	06	81
2005	0	0	0	101	0	3	0	0	0	5	06	187
2006	0	0	0	67	0	3	0	0	0	5	11	158
2007	0	0	0	2	0	3	0	0	0	5	06	106
2008	02	16	0	2	0	6	25	0	0	5	16	189
2009	04	16	0	6	0	6	5	0	0	5	16	256
2010	04	16	0	46	0	45	5	0	0	5	16	227
2011	02	08	0	52	0	35	5	0	0	5	16	213
2012	0	08	0	4	0	4	25	0	0	5	16	179
2013	02	08	0	10	0	35	5	0	0	5	16	261
2014	02	38	0	6	0	4	5	0	0	5	16	256
2015	02	88	0	5	0	4	5	0	0	5	25	305
2016	0	0	0	6	0	0	0	0	0	5	06	116

### 3-1.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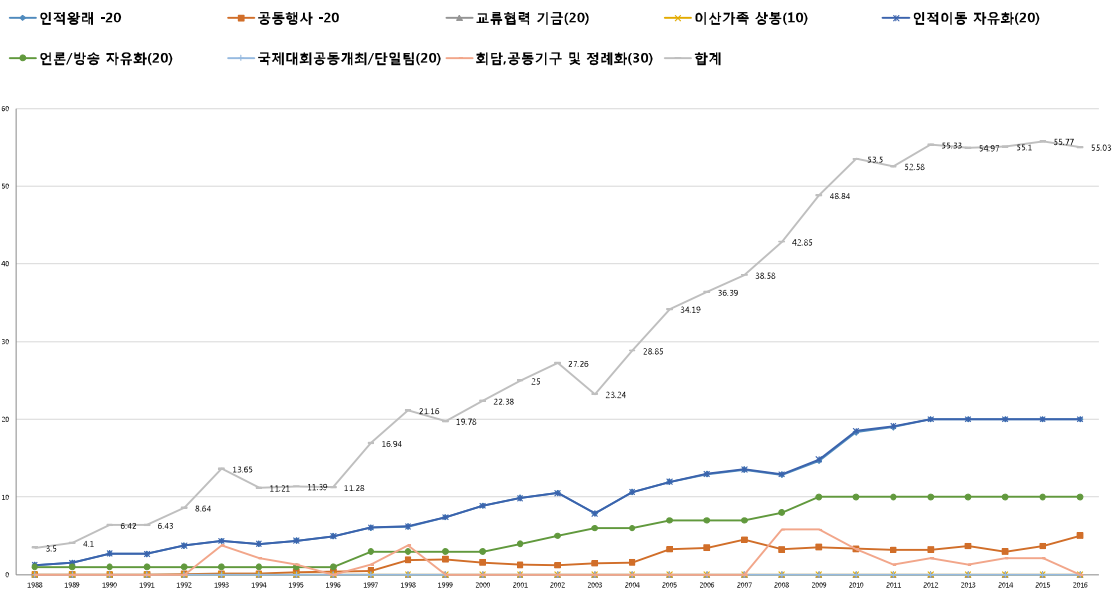
### 3-2. 양안-남북한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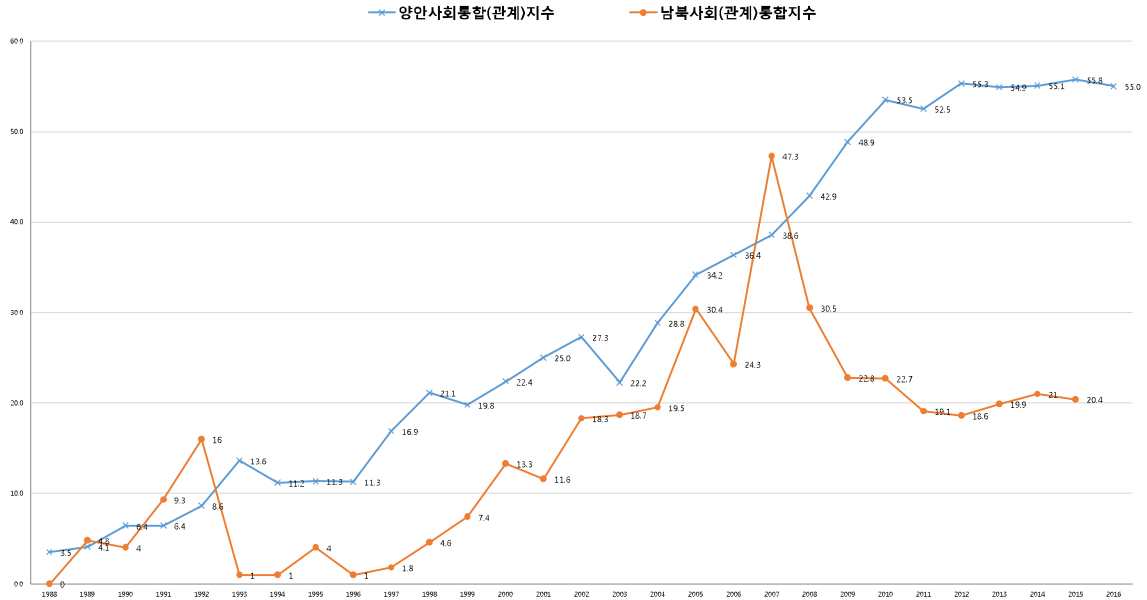
## 4. 사회문화 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연도	사회문화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인적왕래 (20)	공동행사 (20)	교류협력 기금(20)	이산가족 상봉(10)	인적이동 자유화(20)	언론/방송 자유화(20)	국제대회공동개최/ 단일팀(20)	회담공동기구 및 정례회(30)	합계
1988	125	0	0	--	125	10	0	0	35
1989	155	0	0	--	155	10	0	0	41
1990	271	0	0	--	271	10	0	0	64
1991	270	003	0	--	270	10	0	0	64
1992	377	010	0	--	377	10	0	0	86
1993	436	013	0	--	436	10	0	38	183
1994	397	017	0	--	397	10	0	21	129
1995	438	033	0	--	438	10	0	13	125
1996	495	037	0	--	496	10	0	0	113
1997	605	053	0	--	606	30	0	13	181
1998	621	193	0	--	622	30	0	38	258
1999	738	200	0	--	740	30	0	0	198
2000	888	160	0	--	890	30	0	0	224
2001	987	127	0	--	986	40	0	0	250
2002	1052	123	0	--	1051	50	0	0	273
2003	790	147	0	--	787	60	0	0	222
2004	1063	160	0	--	1062	60	0	0	288
2005	1194	330	0	--	1195	70	0	0	342
2006	1295	347	0	--	1297	70	0	0	364
2007	1352	450	0	--	1356	70	0	0	386
2008	1287	327	0	--	1291	80	0	58	489
2009	1468	353	0	--	1483	100	0	58	559
2010	1834	333	0	--	1853	100	0	33	570
2011	1898	317	0	--	1913	100	0	13	537
2012	2000	323	0	--	2000	100	0	21	577
2013	2000	367	0	--	2000	100	0	13	561
2014	2000	300	0	--	2000	100	0	21	574
2015	2000	367	0	--	2000	100	0	21	581
2016	2000	503	0	--	2000	100	0	0	550

### 4-1. 사회문화 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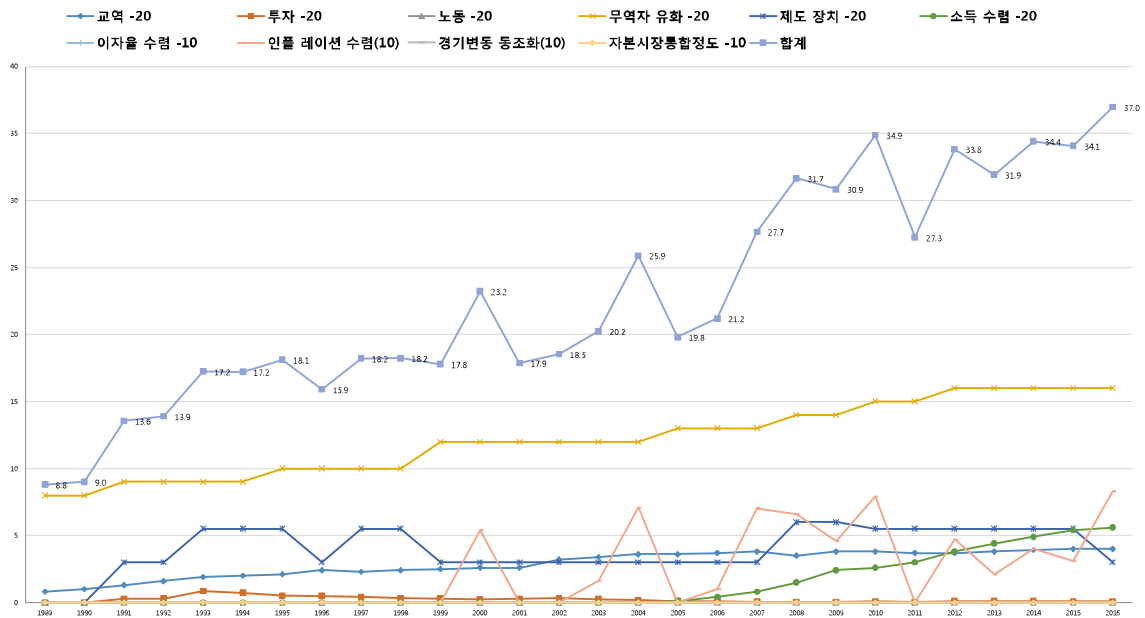
## 4-2. 양안-남북한 사회문화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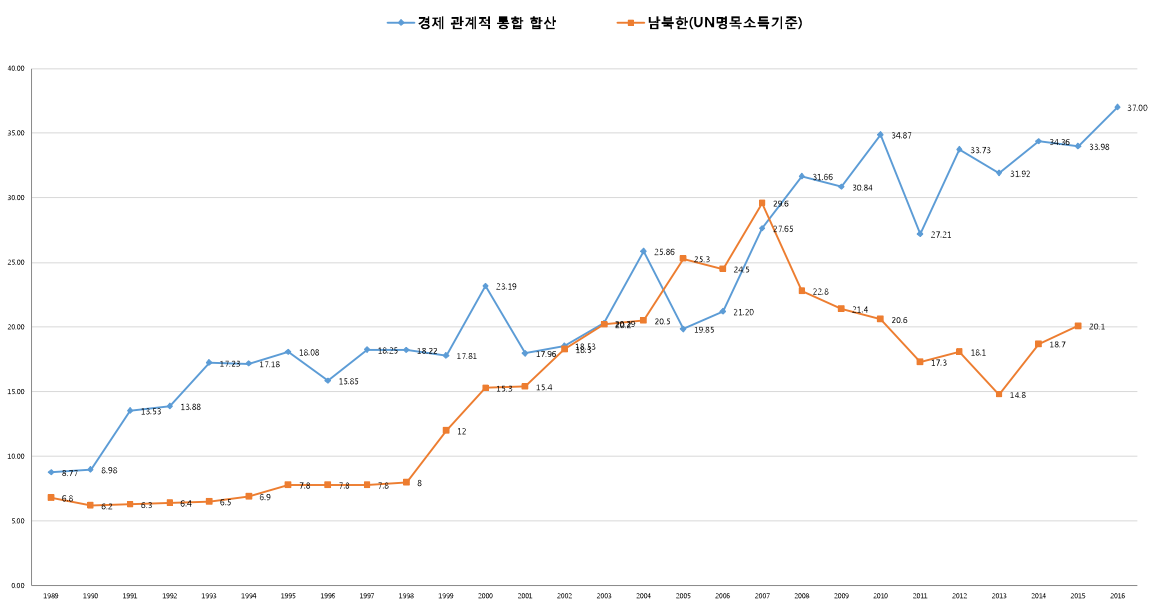
## 5. 경제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연도	경제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합계
	교역(00)	투자(00)	노동(00)	무역자 유출(00)	제도 장치(00)	소득 수렴(00)	이자율 수렴(00)	인플레이션 수렴(00)	경기변동 동조화(00)	자본시장통합정도(00)		
1989	08	0	0	8	0	0	0	0	0	0	88	
1990	10	0	0	8	0	0	0	0	0	0	9	
1991	13	026	0	9	3	0	0	0	0	0	136	
1992	16	029	0	9	3	0	0	0	0	0	139	
1993	19	084	0	9	55	0	0	0	0	0	172	
1994	20	072	0	9	55	0	0	0	0	0	172	
1995	21	052	0	10	55	0	0	0	0	0	181	
1996	24	049	0	10	3	0	0	0	0	0	159	
1997	23	041	0	10	55	0	0	0	0	0	182	
1998	24	034	0	10	55	0	0	0	0	0	182	
1999	25	029	0	12	3	0	0	0	0	0	178	
2000	26	023	0	12	3	0	0	54	0	0	232	
2001	27	027	0	12	3	0	0	0	0	0	180	
2002	32	033	0	12	3	0	0	0	0	0	185	
2003	34	024	0	12	3	0	0	16	0	0	202	
2004	36	019	0	12	3	0	0	71	0	0	259	
2005	36	011	0	13	3	01	0	0	0	0	200	
2006	37	009	0	13	3	04	0	1	0	0	212	
2007	38	005	0	13	3	08	0	7	0	0	277	
2008	35	005	0	14	6	15	0	66	0	0	317	
2009	38	005	0	14	6	24	0	46	0	0	309	
2010	38	007	0	15	55	26	0	79	0	0	349	
2011	37	005	0	15	55	30	0	0	0	0	273	
2012	37	012	0	16	55	38	0	47	0	0	338	
2013	38	011	0	16	55	44	0	21	0	0	319	
2014	39	010	0	16	55	49	0	4	0	0	344	
2015	40	007	0	16	55	54	0	31	0	0	341	
2016	40	007	0	16	3	56	0	83	0	0	370	

## 5-1. 경제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구성



## 5-2. 양안-남북한 경제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비교



## 6. 결론

각 부문별 변인 구성

O: 조사 자료를 계량화하여 기입한 변인

△: 자료 수집이 안되어 "0"으로 기입한 변인

X: 남북통합지수의 틀에 적용될 수 없는 변인

### 6-1.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변인 및 총점

		양안	남북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 (160)	실무정치회담 (20)	○	○
	고위급정치회담 (20)	○	○
	군사회담 (20)	○	○
	의회회담 (20)	○	○
	공동행사 (10)	○	○
	매거제도 (10)	○	○
	장례화 (10)	○	○
	국제협력 (10)	○	○
	군축 (10)	△	○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0)	○	○
	상호체제인정 (10)	○	○
	<b>총점</b>	<b>150</b>	<b>16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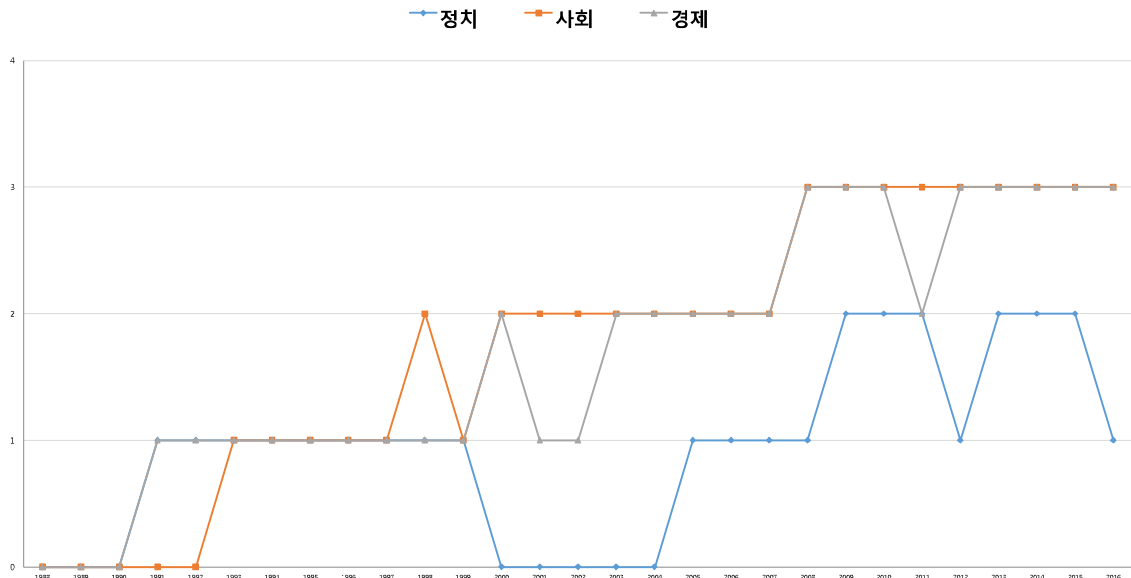
## 6-2. 사회문화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변인 및 총점

		양안	남북
사회문화부문 관계적 통합 (160)	인적왕래 (20)	○	○
	공동행사 (20)	○	○
	교류협력기금 (20)	△	○
	이산가족상봉 (10)	X	○
	인적이동자유화 (20)	○	○
	언론/방송의 자유화 (20)	○	○
	국제대회공동개최/ 단일팀 (20)	○	○
	회담 공공기구 및 정례회 (30)	○	○
<b>총점</b>	<b>130</b>	<b>16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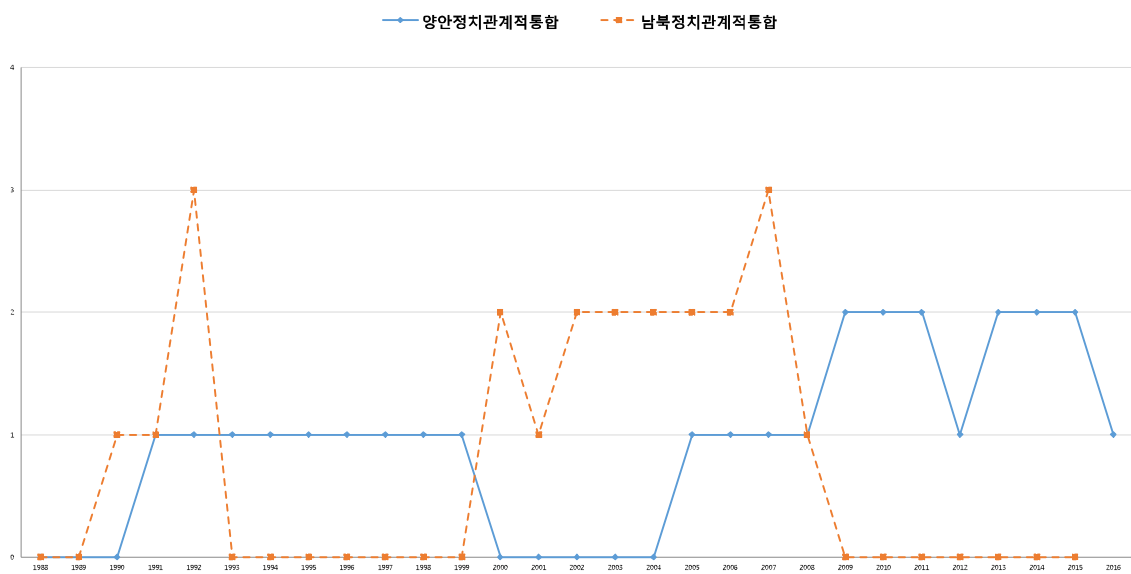
## 6-3. 경제부문 관계적 통합지수 변인 및 총점

		양안	남북
경제부문 관계적 통합 (160)	교역 (20)	○	○
	투자 (20)	○	○
	노동 (20)	△	○
	무역자유화 (20)	○	○
	제도장치 (20)	○	○
	소득 수렴 (20)	○	○
	이자율 수렴 (10)	△	“○”
	인플레이션 수렴 (10)	○	“○”
	경기변동 동조화 (10)	△	“○”
	자본시장 통합 정도 (10)	△	“○”
<b>총점</b>	<b>110</b>	<b>120 + “4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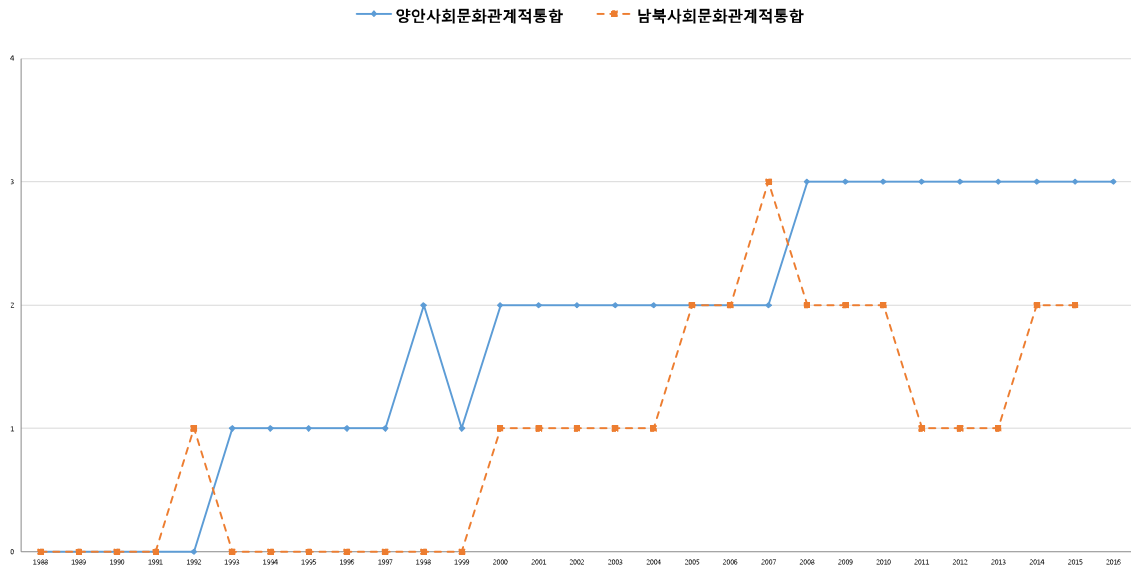
#### 6-4. 양안 관계적 통합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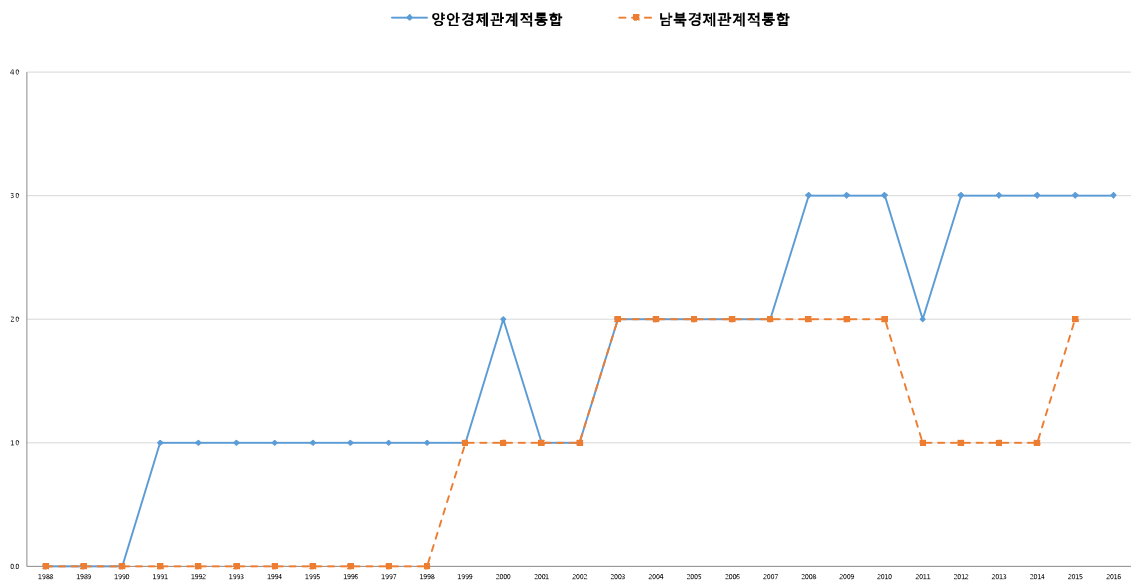
#### 6-5. 양안-남북한 정치부문 관계적 통합 "단계" 비교



## 6-6. 양안-남북한 사회문화부문 관계적 통합 "단계" 비교



## 6-7. 양안-남북한 경제부문 관계적 통합 "단계" 비교



감사합니다.

## Ⅵ. 남북러 통합 전력망 프로젝트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인천대학교 교수, 경제학 양 준 호

## 남북러 통합 전력망 프로젝트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양준호(인천대 교수, 경제학)

### 1. 문제제기

□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간 경험 활성화를 통해 환동해경제권을 지향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

□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춰 남북한 화해 분위기 유도 및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

-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기조

:동북아 다자안보 및 경제공동체 통합, 시베리아 에너지 자원 등 경제협력 확대

:서해권 남북 경협벨트(개성공단 재가동), 동해권 남북 에너지·자원벨트 구성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교류 추진(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 금강산 관광 재개)

□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공동개발 및 효율적인 전력거래 실현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 가능

-전력 부문의 국가 간 협력 체제는 미국 및 일본 등과 같은 동맹국을 자극하지 않고 실현가능하며 북한의 시급한 과제로도 작용

□ 국제 전력 협력체제의 정치 외교적 우위성

- 가스관 연계 사업은 LNG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반발을 야기

:미국은 최근 중국, 인도, 폴란드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LNG 수출을 추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방미 시 미국 LNG 수입을 언명

:시리아 내전, 카타르 고립정책, 나프타협정 재협상 등이 가스와 연관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력계통 연계에 민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

:2016년 아베총리는 푸틴의 <에너지 브릿지> 구축 제안에 잠정적으로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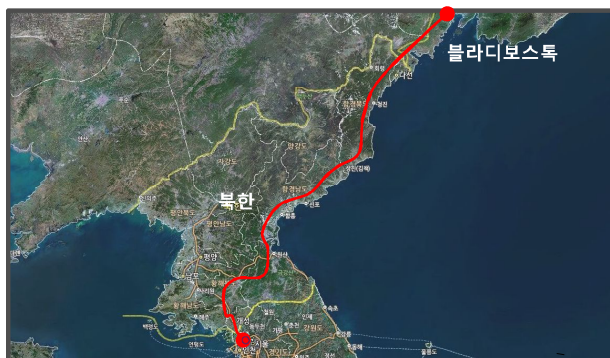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아시아 수퍼그리드 구상은 러시아를 핵심 국가로 설정

-북한은 석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스에 비해 전력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고 북한에 가스관 설치 시 북한 노동력 투입 요청에 의해 비용이 과다해짐

- 전력 계통연계는 러시아의 참여를 유인하는데도 가장 효과적
- :러시아는 이미 중국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고 북한과도 전력 공급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가스의 경우 수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 :러시아의 투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나진-하산을 연결하는 철도망 또한 전력망과 직결

## 2. 남북리(한리) 통합 전력망 구상의 개요

- 극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 공동개발·활용 및 북한 에너지 협력유도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 【사업 개념】

- 가공 직류송전 500~800kV(약 3GW)
- 선로길이 : 약 1,000km  
블라디보스톡(가스 또는 석탄발전) ~ 북한 ~ 경기북부
- 투자비 : 약 3.3조원

- (기술성) HVDC로 러시아 → 한국 송전 시 국내 계통에 문제없음
- (경제성) 송전선로 이용률 70% 운전 시 7.4년 후 투자비 회수 가능
- (안전보장) 정부 간 안전보장협정 체결 등 선로의 북한 경유에 따른 건설 및 운영단계의 예상 리스크에 대한 극복 방안 마련 필요

-위의 남북리(한-러) 통합 전력망 구상은 남북관계 및 주변국과의 관계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수정 또는 재검토 가능

-남북리(한-러) 통합 전력망 구상의 목적이 우리나라 미래 전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에 있는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에너지 지원에 있는지에 따라, 그 전략 실행의 순서 및 방법은 상이

-본 구상은 북핵 리스크 관리형의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인 정부의 북방경제 지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

- 한반도의 정치적 정세에 따라 J자형, Y자형, 역Y자형의 연계 구상도 검토 가능

-러-북-남-북의 노선으로 연계되는 J자형으로 남북관계 개선

:이 구상은 남북관계 악화, 중러관계 및 미일관계 호전의 경우 적용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거쳐 남한이 수전하여 다시 북한의 개성공단, 개성시, 해주시

등지로 공급한 후 중장기적으로 평양으로 공급 확대  
 :단계별 공급 확대는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진전과 비례

<그림1> 러->북->남->북 송전 모형(이른바 J자형)



- J자형 연계 구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북한 경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북 송전 체제의 단계적 확대가 가능
  - :국내 발전소 건설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새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전력공급 불안감 해소(국내 송전 및 수전 루트 다양화)
  - :북한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 경제, 외교 차원의 전 방위적 협상이 필요
  - :러시아 리스크 발생 가능
  
- 러-북-남 연계에 중국 전력을 유입하는 Y자형으로 대북 송전 확대
  - :이 구상은 남북관계, 중러관계, 미일관계가 호전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검토 가능
  - :북-중 경계에 위치한 전력 소비지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
  
- Y자형 연계 구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의 대외 접촉 확대를 통한 대대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압록강 수계 발전단지 조성으로 연결 가능
  - :남북 양 방향으로부터의 전력 공급을 통해 송전선로 최소화 및 효율성 제고
  - :러시아 리스크 발생 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 가능
  - :북한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 경제, 외교 차원의 전 방위적 협상이 필요
  - :중국 리스크 발생 가능

<그림2> 중-러->북->남 송전 모형(이른바 Y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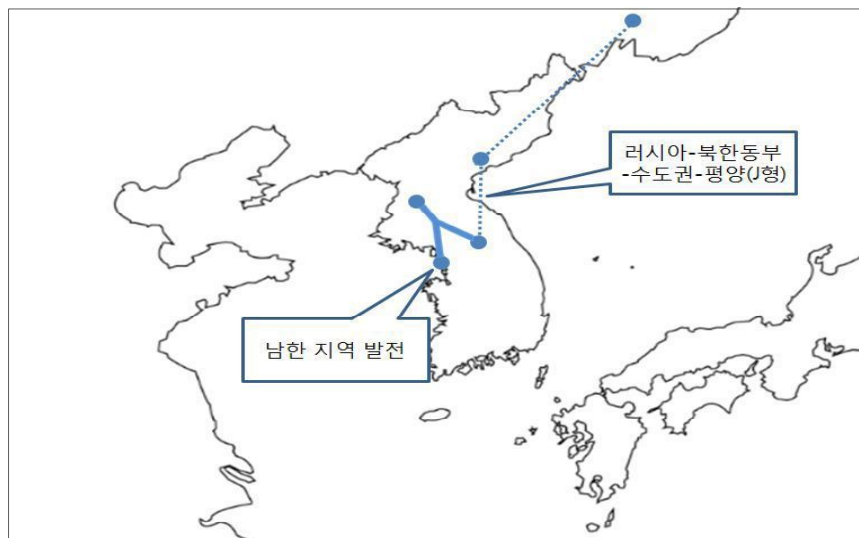


-군사분계선 남쪽에 발전단지 조성 후 대북 송전 확대하는 역Y자형도 검토 가능  
 :이 구상은 남북관계, 중러관계, 미일관계가 호전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검토 가능

:러시아 및 중국의 전력 수전과 병행하는 연계 모델

:서해5도 등으로부터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상징적’ 송전과 휴전선 인근의 발전단지로부터의 실질적인 송전을 병행

<그림3> 남->북 송전 모형(이른바 역Y자형)



-역Y자형 연계 구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다양한 공급선을 확보함으로써 상호 리스크 감소

:남북 간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경체지도> 구상과의 정합성 제고

:남한 주도의 남북경협 모델 구축을 통해 새 정부 대북 정책의 기조 견지

:발전단지 조성 및 송전선로 설치 등의 과정에서 남한 내 사회적 갈등 야기

:불필요한 대북 ‘퍼꾸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3. 러시아의 정치적 입장 및 북한 참여 유도 방안에 초점을 맞춰

#### □ 러시아의 입장: 新동방정책의 본격화

- 유럽의 對러시아 의존 회피 정책 본격화(수입다변화)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동북아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속화
- 러시아 석유 및 가스의 대부분이 채굴되며 또 유럽과도 근거리에 위치한 서시베리아 자원 고갈에 따라 극동지역 개발이 불가피
- 러시아는 남북러 3각 경협을 통해 극동 지역의 중국화 현상 견제 및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시도
- 한중일 협조 체제 하의 공동 투자를 통한 극동지역 개발을 기획
- 극동 시베리아의 안정적 개발을 위해서도 ‘비핵, 비동맹, 중립’의 남북통일을 원하는 러시아는 자국이 주도하는 남북경협에 적극적
- 푸틴대통령의 ‘에너지 수퍼링(남북러, 일본, 중국, 몽골 연계 통합망)전략’ 제시 (2016년 동방포럼) 등 동북아 통합 전력망 선호 입장
- 극동개발부 신설 및 신동방정책 추진, 동방경제포럼 개최(2015년~) 등 극동러시아 개발을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 중시 정책 본격화

#### □ 북한이 선호하는 경제적 유인을 활용한 전략은 다음과 같음

- 북한 통과 한-러 전력망 소구간 토지 임대(50년, 현물 지급)
  - :나선 부두임대, 황금평 특구개발 등 북중 간 사례 대부분 50년 임대
  - :토지 임대료는 원유, 가스, 전기 등의 현물로 지급할 것으로 제안
  - :(단기) 한-러 양국의 공동 투자법인 형태로 북한에 토지 임대
  - :(중장기) 북한, 중국, 일본 등 투자(현금, 현물, 대토 등) 참여
- 송전선 공사를 위한 도로의 공동법인 및 북한의 공동이용 보장
  - :북중 경제협력의 경우, 도로 수리, 포장, 교량 건설 등을 중국이 제공
  - :송전선로 인근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 개설 등 북한에 제안

□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공통 지향하는 정치적 유인을 활용한 전략

-남북 간 정치적, 군사적 대결 구도의 완화를 위한 노력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구축, 북미수교, 북한 체제보장 등을 지원 약속

:평화협정 체제 구축 과정에서 러시아가 발휘할 역할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러 및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담보할 것을 공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실현을 위한 노력의 가시화

:대북 제재 하에서의 남한이 주도하는 남북협력 사업 견지

□ 북한 통과 리스크 저감(Hedging) 대책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형태 유지

:한-러 연계망을 러시아가 소유하고 유지보수 하는 형태로 운영

:러시아가 북한과 토지임대 협상 시 한국보다 유리

-북한의 현금 지급 등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북-러 양자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해결 유도

-한-러 연계망의 중국, 몽골, 일본으로의 확대 적용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 농단을 예방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 4.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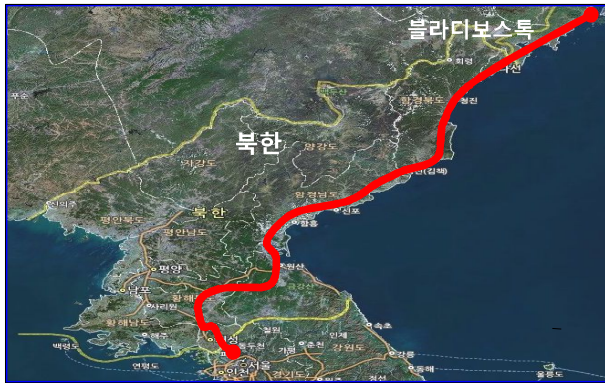
□ 기본 추진전략 (한-러 ⇨ ‘남-북-러’ 로 연계 확대)

-한-러 양국 상황에 따라 2-1-3 또는 2-1-2 ‘-3의 순서도 상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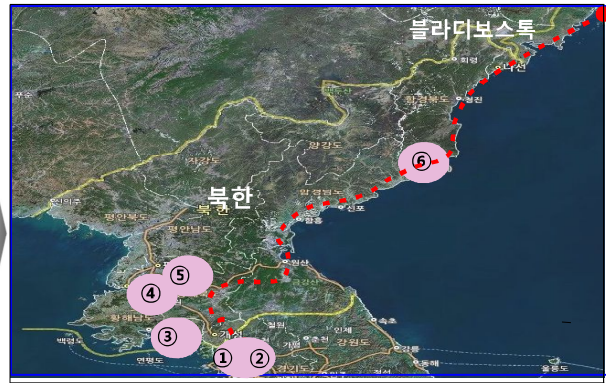
:북한 내부 사정으로 볼 때, 원산 및 금강산 지역에 대한 남북 전력협력 구상안이 더 보장될 필요가 있음

-J자형 노선을 강조할 경우, 2와 3의 주요 협력 지역에서 원산, 신포, 금강산 등에 대한 전력 수요 및 협력 검토가 필요

<그림4> 남북러 통합 전력망 구상의 기본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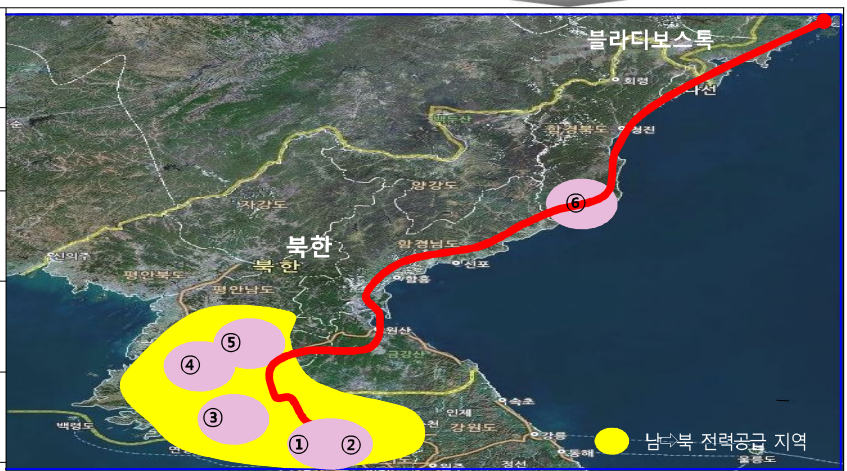


① 한-러 협력 단계  
(MOU체결, 추진방안 협의)



② 남북 전력협력  
(남↔북 공급: 공단 개발특구 등)

<주요 협력지역>
①,②: 개성공단 확장
③: 해주지역 전력공급
④: 남포 전원 단지
⑤: 평양산업단지 공급 및 발전소 대체
⑥: 단천특구 개발·전력공급



③ 남-북-러 통합(망)

□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 시나리오에 따른 추진전략

-한반도 계통 연계 사업의 추진 전략은 3개 권역(미-일 권역, 중-러권역, 남북 권역)의 정세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 별로 구분 가능

-이와 같은 전력협력의 시나리오 구분 시, 일본은 미국의 종속 변수, 중국은 러시아의 종속 변수로 취급하여 동일한 권역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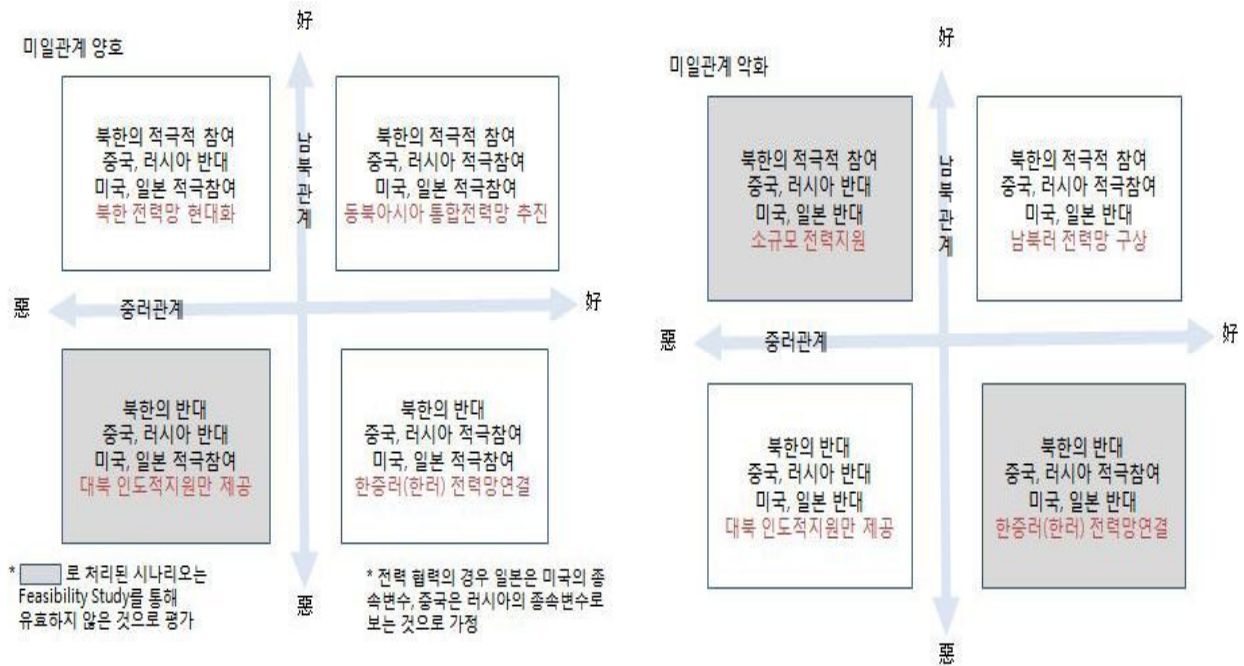
-남북관계, 미일관계, 중러관계의 중층적 고려를 통해 다음과 같은 8개 시나리오 도출 가능

-8개 시나리오 중 경험적 실행 가능성 분석(Feasibility Study)으로 5개 시나리오만 유효한 것으로 평가 가능

-남북관계, 미일관계, 중러관계의 각 조합 별로 동북아 통합전력망 시나리오, 남북러 전력망 시나리오, 대북 인도적 지원만을 제공하는 시나리오, 북한 전력망 현대화 시

나리오, 한중러 (한러) 전력망 시나리오를 도출

<그림5> 시나리오 별 추진 전략



□ 추진 전략 관련 기타 사항

-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공동연구 사업의 경우, 남북 및 남북러 공동 연구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연구 사업의 경우, 한-러 협력을 주(主)로 하고 남북 협력을 종(從)으로 할 것인지, 남북 협력을 주로 하고 한-러 협력을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과 남북러를 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
- 어차피 공동연구 사업을 초기에 진행할 것이라면 남북을 병행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5. 보론: 이른바 J자형에 있어서의 대북 풍력발전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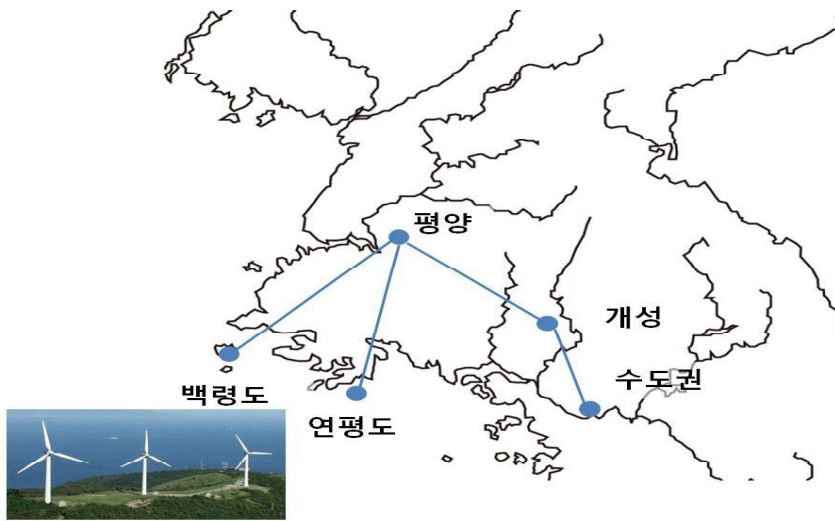
□ 연평도와 백령도의 풍력발전 공급

- 연평도와 백령도에 친환경발전인 풍력발전소를 지어 이를 남포 및 평양에 공급
- 전력량은 매우 적지만 이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과거 포격을 당했던 연평도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평화의 기지로서의 역할 부여

-북한으로의 전력공급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친 환경 발전에 대한 본격적인 디딤돌 마련

-전력공급을 통해 백령도와 연평도가 대한민국에 속한다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향후 NLL교섭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림6> 연평도 및 백령도로부터의 대북 풍력발전 공급



□ 수풍발전소 보수 및 관리

-평안북도에 있는 수풍댐의 수풍발전소를 한국전력이 인수하여 이를 보수하고 관리

-1993년 합의되었다가 불발된 상태인 경수로 복원사업 대신 수풍발전소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제안

-현재 수풍발전소는 일제 시대 완공된 상태에서 만주작전 직후 소련이 수풍발전소의 발전기 7기 가운데 5기를 뜯어 카자흐스탄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발전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설비자체 또한 노후화 된 상태임

-러시아 합작회사를 기반으로 하여 러시아 내 사업대행자를 내세워 수풍발전소를 대한민국 전력 표준형식으로 수리 및 보수

-러시아 합작회사를 대행기관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북한 측의 체불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경수로 사업 대신 이를 내세우는 것은 핵을 사용하는 경수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핵협상에 보다 긍정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음

## 6. 토론: 한-러 계통연계에 있어서의 전력 부문의 비교우위

:연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비교 분석

### □ 전력망 연결에 관한 제반 환경 및 조건

- (국제환경)**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에너지 수퍼링을 전력부문을 매개로 하여 구축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 일본, 몽골, 중국 등이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
- (러시아의 의지)** 러시아 정부는 국제 정세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에서 전력을 매개로 하는 에너지 수퍼링을 구축하는 작업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요인)** 러시아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 하에서 중국이 에너지 수요 국가이면서도 동 체제 내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한-러, 남-북-러, 러-일 간 에너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북한 요인)** 해저케이블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방식의 채택을 통해 동북아 전력시스템 연계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능력)** 러시아는 2030년까지 600억 KW까지 전력수출을 늘려 나갈 계획을 수립한 상태
- (경제성)** 러시아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전력의 가격이 kwh당 0.03-0.04달러이고 북한에 공급하려는 가격이 0.05달러라는 점에서 높은 경제성이 도출  
(2015년 한국kwh당 0.06달러)

### □ 철도 연결에 관한 제반 환경 및 조건

- (국제환경)** 극동개발과 연계되는 TSR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의 JR, 한국의 TKR과의 연결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고, 또 일본의 러일 간 에너지 연계에 대해 러시아 측은 철도망 연결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
- (러시아의 의지)** 중국의 일대일로가 러시아 TSR의 상당 구간을 회피하고 있는 점도 러시아가 철도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 요인)** 중국은 프리모리에 1, 2를 통해 차항출해(借港出海)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점을 보면,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도 러시아는 극동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남북회랑이 중심을 이루고 중국은 동서회랑을 선호하고 있음. 즉 러시아는 중국의 동서회랑이 중심이 되면 러시아의 아태 진출이 지장 받을 수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

-(북한 요인) 북한의 동해안 철도구간이 노후화되어 추가적인 투자를 통한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나, UN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 러시아의 신규투자는 어려운 상황임

-(경제성) TSR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TSR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

#### □ 가스관 연결에 관한 제반 환경 및 조건

-(국제환경)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천연가스 공급 경쟁이 격화될 수 있고, 또 천연가스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러 제재(에너지기업의 금융 접근 제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됨

-(러시아의 의지) 러시아 정부는 가스는 PNG로 수출한다는 기존의 기초에서 벗어나 야말반도의 LNG를 아태지역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중국 요인) 동시베리아에서 중국으로 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을 위한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건설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요자로서의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고 또 천연가스 부산물 수출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

-(북한 요인) 김정일의 유훈사업이라는 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김정일의 관련 의향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며, 통관료 수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없다면 국제사회의 견제를 피하기 어려움. 노드스트림의 경험을 고려하면 동해를 경유하여 공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공급능력) 러시아와 중국의 가스관 건설이 완료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러시아는 2025년까지 2단계 천연가스 아태지역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며, 전통적인 수출방식인 PNG뿐 아니라 LNG 수출 능력도 증진시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러시아는 750만톤(약 10BCM)의 공급능력을 갖춰야 PNG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경제성) 러시아는 가스 공급가격을 유럽 수출가 기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선호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공급경쟁이 심화될 경우 미국이 제시하는 가격 조건까지 내리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전력, 철도, 천연가스의 연결 가능성 요인에 대한 비교 검토

	전력망	철도	천연가스
국제환경	○	○	×
러시아 의 지	◎	◎	◎
중국요인	△	△	×
북한 요인	△ (북한 회피 가능)	×	△ (북한 회피 가능)
공급능력	◎	○	△
경제성	○	△	○
장점	상황 적응형 프로젝트의 추진 가능성이 크며, 산업/후생 파급효과 제고 및 북한 개혁개방과 상호작용 가능	나진-하산 사업 재개를 시작으로 유라시아 물류운송망 개발 및 운영 참여 가능성 지속 확보 가능	북한 경유를 전제로 하는 가스관 연결과 LNG 물량확보가 가능함
종합평가 순위*	1	2	3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나쁨

※ 나진-하산 사업 기저효과 반영 시 순위 변동 가능함

7. 결론을 대신하여

:남북러 통합 전력망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 남북러 통합 전력망 프로젝트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북한 경유 한-러간 전력연계를 통한 한반도 평화협력 기반 조성

-국내 전력계통 현안 해결, 전력 신기술 개발 및 전력거래로 수익 창출

-국내 원자력 논란과 관련 새로운 돌파구를 북방에서 도출

-남북경제통합 기반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현실화

-중국, 몽골, 일본의 지지를 통해 동북아 전력망 허브로 부상